



행복한
참여

연대
따뜻한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2015. 3. 7. 토 3시 수운회관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결의문>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스무 살을 맞이했던 2014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모인 우리들은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단단히 고쳐 매야했습니다. 20년을 자축하고 감사하는 마음만큼 극복해야 할 도전과 쇄신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앞에 참여연대도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권력감시라는 사명을 되새기고,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찰과 혁신을 통해 참여연대가 시민의 수단이 되고 연대의 징검다리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는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멈춘 듯했던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흘렀고, 어김없이 새 봄이 왔습니다. 새순이 돋고 꽃소식이 들려오는 2015년 봄날이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정당성을 잃은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막은 채 위태로운 자리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국가의 돌봄이 없는 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고, 자유와 풍요로움 대신 위협과 공포가 시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기도 권력은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21차 정기총회를 맞아 참여연대는 올해의 각오와 계획을 밝힙니다.

첫째,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통한 통제와 참여 구조를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시민의 통제나 참여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사와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검사장 직선제 방안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주요 권력기구의 구성과 운영과정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기록·기억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권력오남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게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례들과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기록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같은 대규모 세금낭비와 정책실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고용안정, 노동권 강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실업과 고용 불안, 그리고 노동조건 악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노동·민생대책을 통해 소득주도형 경제민주화, 임금주도형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특허, 노동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입법운동과 함께 현장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확대를 위한 공평한 조세제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복지 확대 공약들이 폐기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노인 빈곤, 저출산 등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 공공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재정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증세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와 공평과세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추구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정부 여당의 조직적 방해로 참사를 진상규명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사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성장과 이윤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결과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폭로하고 저지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여섯째, 정전체제 종식과 군사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은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되곤 합니다.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당면한 핵문제 해결도 어렵게 하며, 동아시아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방 70년이자 원폭투하 70년이며 한반도가 분단의 질곡에 빠진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군비확장과 국방예산, 안보교육, 군인 인권 침해 등 군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과 시민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참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참여연대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회원들과 더욱 자주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 월례 회원모임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회원 소모임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발족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회원과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회원 2만 명이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1차년도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나 나무의 시민교육을 더욱 확장하는 것은 물론 시민교육 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카페통인, 갤러리 느티나무 등 개선된 공간을 이용한 시민문화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시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중장기 의제와 혁신과제들을 폭넓게 공유하고 이행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각 사업 단위가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관리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활동방식 개선과 더불어 조직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공감하고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은 새벽을 예고하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시민, 회원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5년 3월 7일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목 차

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결의문 2

2014년 사업보고

2014년 사업 총평 10

특별보고 16

20대 중점과제 18

5대 특별과제 58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68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민생희망
본부 경제금융센터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
터 국제연대위원회 아카데미스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97

시민참여분야, 정책기획분야, 미디어홍보분야, 운영기획분야

연대활동 104

2014년 활동기록 · 통계

회원 현황 112

시민참여 · 문화프로그램 114

시민교육 118

감시와 정책제안 120

2015년 사업계획

2015년 활동 목표와 8대 방향 132

11대 중점과제 137

- ①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 정치개혁 운동
- ② 부패·권력남용 사례 기록과 기억사업 확대
- ③ MB 자원외교 총체적 부실과 세금낭비 문제 대응
- ④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운동
- ⑤ 삼성 등 재벌·대기업 특혜와 특권 바로잡기
- ⑥ 비정규직 문제 대안 마련과 사회적 연대 강화
- ⑦ 통신·영화 분야 등에서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 ⑧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과 시민안전 정책 대응
- ⑨ 해방과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캠페인
- ⑩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1/4)
- ⑪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 활동 개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151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민생희망
본부 경제금융센터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
터 국제연대위원회 아카데미스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171

시민참여분야, 정책기획분야, 참여연대국제연대, 미디어홍보분야, 운영기획분야,

주요 연대과제 178

2015년 일정표 179

살림살이- 2014년 결산안 및 2015년 예산안

2014년 회계 감사 보고	182
2014년 결산안	184
2015년 예산안	188

조직과 운영원리

정관개정안	192
참여연대 정관	194
조직 기구표	202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204
2015년 임원 명단	207

■ 부록

회원 설문결과	212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	220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224
참여연대 노래	234

2014년 사업보고

사업 총평
특별보고
20대 중점과제
5대 특별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4년 사업 총평

● 중기(2014-15년) 활동 목표

- 권력감시 확대를 통해 정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적 견제력 형성
- 활동 내용과 방식의 대중성 및 현장기반 강화
- 시민참여 기반 확충과 주체 형성
- 참여연대 장기 비전 및 구조개혁안 확정과 1단계 실행계획의 실천

● 2014년 표어 : 참여연대 20년, 함께 만드는 꿈

● 2014년 5대 활동방향에 따른 평가

- 2014년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과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주거 안정과 중소기업인 보호 등 대다수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해였음. 또한 남북관계 악화와 동북아 군비경쟁에 따른 한반도 평화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했음. 더불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활동들을 성찰하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며, 회원과 함께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 기획이 요구되었음. 특히 회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청년사업을 시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은 회원,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운 참여연대, 지속가능한 참여연대가 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이었음.
- 이에 2014년 참여연대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 20개, 20주년 특별과제 5개를 중심으로 5대 활동방향(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2014년/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2014년/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2014년/ 젊고 활기찬 참여문화 공동체 만들기/ 미래를 준비하는 강건한 참여연대 만들기)을 설정했음.
- 이에 근거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고 새롭고 확장된 활동방식을 시도했음.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중 대응, 각 분야별 기본 모니터와 평가 활동, 시민과 회원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안정적인 조직운영, 이러한 와중에 무리없이 진행된 20주년 사업 등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었음. 그것은 15,000명을 넘어선 회원 수, 독립재정 유지,

참여연대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일부 활동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내부 준비 부족, 정세 및 활동여건의 악화 등으로 일부 중점과제의 경우 집중력 있는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한국사회의 광범위한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민안전을 등한시하는 문제, 현재의 통진당 해산결정 등을 포함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남용 문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위협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은 참여연대의 사명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의 운동이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참여연대 운동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주년 혁신과제와 중장기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경주해야 함.

1. 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2014년

- ▶ 공직자 부패방지과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련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하고,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함. 그 밖에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과 공직자 부패 사건을 알리고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침.
- ▶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시민방청단 캠페인을 전개함.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가 핵심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를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
- ▶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부 1년 검찰보고서,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 파견 현황 이슈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검찰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총 18회의 판결비평 활동 등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함. 다만 유명무실한 상설특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압박 활동을 전개하지 못함.
-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은 사례 발굴과 함께 거리 전시회, 토크쇼, 광고 등 시민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진행함.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기자회견 등을 개최함.

-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공익소송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나 방송 통신심의위 활동 모니터링은 진행하지 못함.
- ▶ 국정원 등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활동은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관련자 재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세월호 참사 이후 동력이 저하되었고, 국정원 개혁을 의제화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 지방선거 시기에 국가기관 개입을 차단하고 생활임금 등 좋은 정책을 확산, 채택시키고자 노력하였음.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관련한 연대활동은 분명한 전략 없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2.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2014년

- ▶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촉구하며,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법, 소송 활동을 전개함.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경제민주화를 전국적 사안으로 만들고자 여러 지역 캠페인을 시도했으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함.
-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내실화와 전월세 문제 대응과 함께 통신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거대 통신사, 제조사의 담합과 알뜰폰 시장 진출 문제를 알리고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음. 또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나서고, 사립대 비리 재단 복귀와 화상경마도박장 개설, 개인정보 유출 등에 집중 대응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저지하는 한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했음.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정부 공약이었던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의료 민영화 저지, 보육재정 확보 등을 위해 주도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섰음.
- ▶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체계 개혁 관련 활동은 미진했으나 조세 형평성의 심각한 왜곡 실태를 보여주고 상위 1%를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큰 반향을 일으킴.
- ▶ 노동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실태 조사를 포함해 정부의 노동행정 감독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동현장 연대를 통해 노동행정 감시활동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음. 또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둠.

3.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2014년

-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상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시민대안을 알리는 활동에 제약이 컸음. 한편 한미일 군사협력, 일본의 헌법 9조의 사실상 폐기와 재무장 시도 그리고 동북아 군비경쟁 문제를 알리기 위한 각종 시민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군 중심의 학교 안보교육 실태를 공론화하고 군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활동 및 연대기구 결성에 나섬.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을 지속했으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고 있는 파병법안, 북한인권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응함.
- ▶ 국제연대 역량이 주로 세월호 국제연대 지원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유엔 애드보커시 활동이나, ODA 감시활동 등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함.

4. 젊고 활기찬 참여문화 공동체 만들기

- ▶ 다양한 청년사업을 기획, 집행하여 청년조직 가능성을 타진하고, 차기 년도 청년조직 발족을 준비함. 청소년 사업도 논의단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함.
- ▶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해 '월례모임'을 신설, 다양한 주제로 회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함.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지역회원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지역회원모임, 회원의 가게 등을 통한 지역회원과의 교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함.
- ▶ 시민들이 참여연대 정책과 활동에 쉽게 접근하도록 콘텐츠 기획과 가공을 시도하고, 유튜브채널을 점검함. 채널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함.
- ▶ 시민에게 가깝고 열린 참여연대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놀이터' 프로젝트를 실행함. 건물 공사 이후 카페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강좌와 문화예술 전시 및 행사 등을 진행하여 꾸준히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참여연대의 굵직한 활동들을 보여주는 역사의 벽과 명예회원의 벽을 마련하고, 입법, 소송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배치하는 등의 공간개선 활동을 진행함.

5. 미래를 준비하는 강건한 참여연대 만들기

- ▶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조직개선 과제들을 정식화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참여연대의 다루거나 준비해야 할 중장기 의제와 혁신과제 등을 마련하고, 20주년 선언문으로 발표함.

- ▶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자축과 감사의 시간으로 기획, 성황리에 진행했고, 20주년 기념 단행본 3종(감시자를 감시한다(이매진),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창비), 반성된 미래(후마니타스))와 20주년 활동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함.
- ▶ 2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회원캠프를 열었고, 공간 개선 이후 전현직 임원, 상근자, 회원 대상으로 마련한 홈커밍데이와 오픈하우스 등을 진행함.
- ▶ 2014년 한 해 동안 신입회원 1,300여명이 가입하여 2,000명 가입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체 회원 15,000명을 넘어섬으로써 회원들의 회비로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함. 세월호 정세 등의 상황에서 20주년 발전기금 모금 활동은 미진했음.

6. 세월호 참사 대응

- ▶ 4.16 세월호 참사 직후 서울광장에서 연대회의와 함께 ‘애도와 성찰의 벽’을 운영함. 희생자들에 대한 시민 추모를 조직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체로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를 결성, 상근 인력들을 파견하여 제반활동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주요하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대규모 집회와 농성, 유가족 지원활동 등에 적극 나섬.
-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활동 이외 자체적으로도 연속 토론회 개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과제를 다룬 연속 언론기획, 특별법 제정의 방향과 해외 재난사례 조사활동 등에 관한 이슈리포트 발간,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입법 논의 현황 보고서 발간, 관피아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공익제보신고자보호법 개정 촉구 활동, 유가족과 노란리본 시민들의 보행을 가로막는 등 공권력 권한 남용에 대한 고발 조치, 그리고 시민안전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침.

특별보고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 정책기획팀/참여연대

• 사업배경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 주요 활동

1. 세월호 참사의 애도 및 추모활동

- 참여연대 차원의 입장발표 및 서울 및 안산분향소 방문 등 추모활동 진행
- 서울광장 애도와 성찰의벽 운영(연대회의와 공동) 및 인간리본 퍼포먼스 진행

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연대 활동

- 연대기구 구성 참여와 상황실 지원 : 5월부터 12월까지 언론팀과 국제팀, 공동상황실장 및 공동운영위원장 파견해 국민대책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 천만인서명운동, 진상규명 촛불행동 참여, 광화문 농성 지원활동 지속
- 30회의 집회 및 문화제(주말), 37회의 기자회견, 40회의 입장 및 성명 발표, 6회의 토론회(국제1회), 광화문 171일 농성 지원 (12/31 현재)

3. 416특별법 천만서명운동 및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진상규명 활동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 서명운동 지원(총 600만명 서명)
-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활동 - 진상규명 토론회 개최 및 특별법안 마련
-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활동 - 단식농성, 온라인동조단식, 일간지의견광고(3회)

4.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입법/정책 활동

-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담론 형성을 위한 국내외 토론회 개최
- ‘세월호 관련 법’ 발의 현황,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등 정책개선위한 이슈리포트 4회 발행

- 세월호특별법 입법청원(공동)으로 진행

- 관피야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요구 등 입법 활동 진행

- 경향신문과 ‘세월호 참사 이후, 이것만은 바꾸자’ 언론 공동기획 6회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유례없는 참사에 대응하여 ‘애도와 성찰의 벽’을 만들어 시민들이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공간 마련함. 또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구성과 활동의 전 과정에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을 주도하였음.
- 유가족과 함께 600만 명의 시민참여로 특별법을 청원, 국회를 압박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하였음. 서명운동, 집회, 단식, 농성, 인간리본, 온라인동조단식과 특별법의견광고 등 다양한 시민참여를 보장하였음.
- 애초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독립적인 활동을 하며 공동사업을 하다가 7월 세월호특별법 제정국면이 본격화되자 전면에서 나선 유가족들을 지지 지원하는 역할로 활동의 중심이 이동됨.
- 특별법 제정운동의 결과 11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에서 제정됨.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던 원안보다는 미흡하지만 조사권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 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민대책회의 차원의 대응 이외에 참여연대 차원의 정책대응과 공론화 활동을 5·6월 진행했으나, 7월 이후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활동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줄었음.
- 온라인 대응과 국감과 국정조사, 검찰수사에 대한 모니터를 더 철저히 해야 했으나, 역량과 인력의 한계로 잘 진행되지 못함.
- 세월호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안전사회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운동 진행해야 할 것임.

중점과제 1. 국정원 등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 행정감시센터

• 사업배경

- 2013년 중 참여연대 단독으로 또는 국정원시국회의나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을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만족할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함
- 규명해야 할 의혹들을 밝히고 부당한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내놓도록 계속 노력해야 함

• 주요 활동

1. 특검실시와 수사방해 관련자 교체요구

- <특검 임명과 남재준 원장·황교안 장관·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1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1월), <특검법 제정 촉구> 국정원시국회의 기자회견 주관(2월) 등
- 국정원 시국회의 공동제작 2014년 설 귀향 유인물 중 특검실시와 남재준 등 해임요구 부분을 제작했고(1월), 국정원 시국회의 차원의 '단식 농성'에 1일 동참(4월)함.
-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청와대 비서관 등 고발(4월)

2. 주요 피고인 재판모니터 및 추가 대응

-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좌담회 개최(1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1, 2심 판결 비판 논평발표(1월, 6월)
- <원세훈 1심 판결 항소촉구서> 대검 제출(9월), 원세훈 1심 판결 비판 동영상 및 슬라이드 제작(오마이뉴스 공동기획, 9월)
- 선거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 등 31명 고발(10월)

3.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제도화

-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좌담회(1월)와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무소불위 국정원, 브레이크가 없다"> 좌담회(3월) 개최

4. 국정원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 공동행동 유지

- 4월까지 국정원 시국회의 단식농성 및 주말집회에 동참함
- 김용판 항소심 판결 및 원세훈 1심 판결 선고 재판을 국정원 시국회의 관계자들과 공동방청 및 판결직후 촛불집회 개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사회적 열기가 식고, 참여연대나 관련 단체들이 상황을 주도해 갈 정보나 자료취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라는 기본 역할에 충실하였음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국정원 감시와 대국민 심리전 기능 폐지를 의제화하는데 집중하지 못했고, 국정원 폐지나 전면적 개혁 또는 수사권 폐지 등이 일반론적인 주장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음

중점과제 2.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 공익제보지원센터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공익제보자 신분보호조치 신청,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취소요구, 피해회복 소송지원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왔음
- 나아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일에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을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 공익제보자 지원운동을 시민참여형 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 활동

1. 공익제보자별 시민지원 캠페인

- 권은희 수사과장(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폭로) 관련 '힘내라 권은희' 응원메시지 보내기 캠페인(2월, 1,782명 시민참여)
- 김상욱 씨(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관련 무죄의견서 보내기 캠페인(6월, 1,264명 시민참여)
- 안중훈 교사(동구마케팅고 비리 신고) 파면취소의견서 보내기 캠페인(11월, 514명 시민참여)

2. 공익제보 시민인식 향상 캠페인

- 길거리 전시회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12월, 광화문 KT 앞)
- '황우석 사건' 공익제보자 류영준 씨 초대 토크쇼(10월), 영화 <제보자> 시사회(9월)
- 공익제보자 보호 지하철객차 광고(서울시 희망광고 3차 지원사업 응모, 서울 지하철 7호선 1월~3월)
- <부당거래를 끊는 당신의 양심을 지지합니다> 1일 홍보부스(퀴즈맞추기, 인증샷 찍기) 운영(서울시 시민청, 시민청 개관 1주년 기념 공간개방)

3. 공익제보 정보와 지원방법 제공하는 매체 마련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4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발행(2012판의 증보판)

• 성과 및 보완과제

- '시민과 함께 하는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전개는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의 저변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적절한 과제였고, 시민캠페인과 홍보형 사업도 적절히 시행했음.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의 참여주체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음.

: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사회저명인사를 섭외하거나 참여한 시민들을 '공익제보자 수호천사그룹'으로 호명하는 등의 방법 등 저변을 더 넓히는 방안을 기획해야 할 것임

: 표현이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서술내용의 편차가 심했던 공익제보자 소개 자료를 정비하여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4년 발행본을 제작하고, 16개의 공익제보 사례 소개 자료도 제작하였는데, 공익제보자 소개에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시민참여형 공익제보자 지원 캠페인 지속 및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공익제보자 사례 및 그들이 기여한 점을 알림으로써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겠음.

중점과제 3. 유권자의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93조1항 등 폐지

- 의정감시센터

• 사업배경

-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비롯해, 정당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는 정당법 조항 등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국회 회의 방청과 국회 앞에서의 집회시위 금지 등 폐쇄적이고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 2013년 하반기에 시작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구체적 성과도 거두어야 함

• 주요 활동

1.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당설립 등에 대한 부당한 규제 폐지

- 연초에는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야 할 정치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1월)을 열고, 2014 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 좌담회1-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좌담회2-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를 개최함(3월).
- 정당설립요건 완화 위한 정당법 헌법소원을 위해 풀뿌리 정치모임(마포파티, 과천폴뿌리) 등과 초동 모임을 열었고, 2015년에 각자 정당 설립 절차를 밟고 그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보기로 함(10월).

2. 폐쇄적이고 시민과 동떨어져있는 국회 관련 제도 개선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활동으로 11월 2주부터 총 3주간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활동을 진행함. 22명의 시민들이 방청 신청부터 방청 허가 시 회의 방청까지 진행함. 방청단의 진솔한 체험기를 받아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활동 결과 보고서(방청 허가 현황과 거부 사례, 개선 방안 등)를 제작해 국회 운영위원들과 국회의장, 입법조사처 등에 전달하였음(11-12월).

3. 정치개혁 관련 현안 대응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방정치 개혁의 해답이 아니다 논평(1월, 3월),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기초선거 정당 공천에 대해 정치권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치개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4월) 등을 발표함.
-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2월)를 발표하고, 안전행정부와 법사위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 표명, 공익 로비 등을 진행해 개악을 막았음. 최종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만 금지하는 선에서 선거법이 개정됨(4월).
- 이상한 나라의 선거관제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공동토론회를 개최함(국회시민정치포럼,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정치발전소, 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공동주최)(7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개혁의 핵심 이슈로 삼아 그 외 다른 과제들을 부각시킬 기회가 없었음. 계획했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을 축소하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개혁 논의의 방향을 제안하는 활동에 집중함.
- 지방선거 전에 유권자들까지 포괄적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이를 비판하면서 공익 로비를 병행해 통과를 막았음.
-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민 참가자들의 목소리로 국회 회의 방청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은 성과임. 사업 기획, 시민 모집, 교육, 방청 신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활동 등 전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국회개혁 캠페인의 모델을 만든 것도 의미가 큼.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후속 프로그램 요구도 제기되어 2015년에도 이어갈 예정
- 국회 앞 집회 허용을 위한 집중 행동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진행하지 못함.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 진행할 계획임.

중점과제 4.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 사법감시센터

• 사업배경

-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특별수사기구로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2013년에 국회가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당과 정부의 사실상 공약폐기 또는 방관적 자세로 인해 제도 도입이 무산될 상황
- 여당과 정부에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상설특검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되, 실효성 있는 상설특검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주요 활동

1. 상설특검제 도입 촉구 집중행동

- 여야 합의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언론사 칼럼 기고, 민주당 의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1월), 2월 임시국회 즈음에는 상설특검 제도에 꼭 반영되어야 점들을 짚고 제대로 된 상설특검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논평 발표, 여야가 유명무실한 상설특검에 합의한 것에 규탄 논평, 항의서한 전달함(2월).

2. 상설특검 여론조성과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자료 만들기

- 활동 없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중점과제 4.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검사제 도입>는 2014년 2월에 특검임명법이 제정되면서, 시행 이후 경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중점과제에서 제외함
- 1, 2월 특검임명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설특검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유명무실한 특검법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논평, 칼럼 등 다양한 여론형성 활동과 의원 면담 등을 통해 견제 역할을 했지만, 미흡한 상설특검법이 제정되고 말았음. 선명한 저지 행동까지 나가지 못했음

중점과제 5. 방송심의제를 이용한 권력비판 방송통제 저지

- 공익법센터

• 사업배경

- 지난 수년간 방송심의 제도를 이용해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와 제작진에 대한 징계조치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되었음
- 이런 상황이 방송심의규정 개악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2014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교체되는 만큼, 방송심의제도를 이용한 권력비판 방송통제 시도를 저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활동

1. 방송통신심의위 활동 모니터링 강화 및 시민사회관심 제고

- 제3기 심의위원 내정자 중 2명(박효중, 함귀용)에 대한 반대 성명(5,6월)발표

2. 부당한 심의에 대한 항의 활동 강화

- <국정원 간첩조작 유우성 인터뷰 JTBC 중징계내린 방통심의위원들>(4월)과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원들>(8월)을 다룬 웹이미지를 제작해 SNS를 통해 배포함
-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 징계심의 반대> 1인시위(4월)
- 대통령 퇴진 주장한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정제재 취소소송 법률대리(7월)

3. 기타

- 방송통신심의의 규정 개악 비판
: 심의기준에 포괄적 조항을 신설해 자의적인 정치심의 여지를 넓힌 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 참여 및 언론기고(1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방심위의 심의사건 중 부당한 사례 4건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 활동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지는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음. 방심위의 무엇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제로 채택된 측면이 있었음.
- 권력비판형 방송이 이미 많이 줄어든 상황 탓인지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도 했음.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항의행동, 소송, 언론 기고 등의 대응을 유지함

중점과제 6. 지방선거, 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 개입 감시

- 시민감시1팀/시민감시2팀/민생팀/복지노동팀

• 사업배경

-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는 참여연대가 주창해온 정책들 중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
- 가장 최근의 선거였던 2012년 대선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행위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해야 함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시민 문화는 정착되어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에 집중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아 투표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는 데 힘쓰고자 함

• 주요 활동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좋은 정책' 제안 캠페인

-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구성 제안 및 기구 구성 후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10> 발표(5월) 및 광역단체 후보자에게 10대 정책에 대한 입장요청 및 답변 공개(6월)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살리는 12가지 정책> 발표 및 정당에 발송(4월), 한겨레 공동기획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종합토론회(4월) 개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과 함께 <지방선거 5대 주거정책> 발표(5월)

2. 국가기관 지방선거 불법개입 차단 및 감시 캠페인

- <국가기관 개입 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 구성 제안 및 발족(4월) 후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사회단체 선거불법개입 금지 요구서 청와대 등 주요 기관 보내기 캠페인(4월), <국정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꼼짝도 하지마라> 시민경고카드 보내기 캠페인 진행함(4~5월, 경고카드 1,684장 모음)

3.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캠페인

-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선관위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면담(5월) 및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안 및 주관

• 성과 및 보완과제

- 좋은 정책 확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차단, 노동자 투표권 보장이라는 이질적인 주제들을 묶었다는 문제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중점과제로 보기에는 비중이 적은 것이 중점과제에 포함되었음
- : 어떤 정책을 확산 또는 제안할 것인지부터 정한 후 중점과제로 채택해야 했는데, 선후가 바뀐 채 과제를 채택했고, 정책들도 여러 가지를 나열해 제시함으로써 어느 것 하나도 부각되지 못했음.
- :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은 특정 분야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절박함이나 필요성이 낮고, 특히 사전투표제도 도입이라는 상황변화가 있었음을 고려치 않았음.
-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50여일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평가해야 할 것임.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좋은 정책확산 사업의 경우 정책묶음형으로 발표하고 이들 정책묶음에 대한 질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후 향후 선거 시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중점과제 7. 경제민주화 지역 공동 캠페인 및 경제활성화 우선론 비판

- 경제금융센터

• 사업배경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주요 슬로건으로 제시하였으나 경제민주화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도 미진함
- 경제민주화 정책의 축소, 폐기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재벌, 보수언론과 함께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퍼뜨려 경제민주화 여론을 희석시키고 있음
- 2013년 참여연대는 '갑을 문제' 중심의 경제민주화 운동에 집중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 차원의 운동은 벌이지 못했음

• 주요 활동

1. 지역 경제민주화 대회

- 부산 지역 경제민주화 대회 개최했으나 울산, 광주, 전주, 인천 추진하지 못함
- 11월, 12월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로 지역 캠페인 무산에 대한 대체사업 진행함

2. 경제민주화 학술대회 및 언론기고

- 학술대회 개최 진행 못함.
- <프레시안> 8편 '경제민주화위atch' 칼럼 기고

3.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 경제민주화 평가 및 비판 보도자료

- <한국일보> 참여연대 공동기획 '구호만 요란했던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 성과 및 보완과제

-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폐기와 경제활성화 담론의 전환에 맞서 이해당사자 요구에 의한 경제민주화 담론의 유지재생산과 이를 위한 전국 캠페인 전개는 필요한 과제였으나 실제 지역 경제민주화 대회 자체는 부산에서밖에 개최하지 못함. 한편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를 계기로 부산시장 후보자의 경제민주화 협약식, 2건의 부산 노동현안 타결의 성과를 거둠.
- 경제민주화 공약 상태 모니터링과 비판 활동을 지속하면서 2015년 중소기업인 피해 유형별 사례 발표회를 추진하고자 함.

중점과제 8. 중소기업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내실화

- 민생희망본부

• 사업배경

- 중소기업 생존권 문제, '갑을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을' 당사자들의 어려운 삶은 계속되고 있음.
- 재벌·대기업들은 중소도시와 동네 골목마다 대형마트와 재벌슈퍼, 변종 SSM까지 꾸준히 출점하고 있고, 전통적인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영역에 대한 '침탈'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생존권과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합업종 선정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고, 단지 '권고'만 할 수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 활동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시행 3년 평가 토론회, 보도자료 발행 등 정책 평가
- 정부와 전경련 등의 중기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추진 및 줄푸세 회귀 비판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등 현안 대응 및 정책 평가(연중)
-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넷, 을비대위, 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전문가·상인단체 공동 대응단위 '적합업종 대응 정책단' 구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 발족 지원(8월)
- 적합업종 쟁점 10문 10답 이슈리포트 발행 및 현안 대응(10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를 위한 근원 해결책 제시로 적합한 과제로, 상인단체, 법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하며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현안대응, 정책 연구, 입법 활동 및 다양한 방식의 연중 캠페인이 잘 진행됨

- 19대 하반기국회가 시작되며 적합업종제도 안착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전경련, 정부여당의 수년째 반복되는 주장과 무력화 공세가 강해 입법까지 진행되지 못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적합업종보호특별법의 대체안인 상생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적합업종제도가 한미FTA 체결당시 여야 합의 사항임을 다시 부각시키며, 경제민주화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제도로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법제화 되도록 다각적 대응이 필요함
- 유통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한 보호책 마련과 유통 대기업 규제 방안을 연구할 필요 있음.
-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장기간 경제 침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운동을 준비하며 중소기업·지역경제 살리기 활동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함.

중점과제 9.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 민생희망본부

• 사업배경

-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
- 전월세 임차료 인상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등 전월세 문제 해결책 입법 또는 정책 집행을 시급함
- 전국세입자협회 등 임차인 당사자 조직이 결성되고 있어서 이들과의 연대를 통한 효과적인 운동 전개도 가능

• 주요 활동

-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3,9월), 시기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 서민주거안정에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응 활동 전개(3월),
- 임대사업자등록제 관련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건강보험법 발의(2월)
- 서울시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평가 토론회 개최 및 서울시 공공관리제 개선안 발표(연중), 동절기 강제퇴거 금지 등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강제 철거 현장 지원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하반기)
-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방선거 막개발정책 반대 활동, 6·4 지방선거 세입자 위한 5대 주거정책 마련, 나는 세입자다 시즌2 + 집 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 공동 캠페인(9-10월)
- 부동산정책포럼 기획 및 안정적 운영 지원(10월)

• 성과 및 보완과제

1.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주거 안정 캠페인

-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모니터 및 비판 : 주거정책 발표에 따라 기자회견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기획사업을 진행하진 못함. 향후 현 전월세 대란 사태 관련 월세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전월세 상한제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큰 성과 없이 마무리 됨
- 나는 세입자다 시즌2 공동 기획사업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참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역량이 집중되지 않은 면이 있어, 예상대로 사업이 이슈화되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2.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결

- 뉴타운·재개발 문제 개선과 출구 전략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지자체 정책 대응이 주로 이루어짐. 지난 정부부터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후퇴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며 연초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각 단체들 역량 상 일회성에 그친 것은 아쉬움
- 지방선거 정국을 활용하려 했으나 선거가 안전 의제에 집중하게 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림. 하반기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연대활동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도정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기조에 입법도 불투명한 상황임. 하반기 각 정비구역 주민 비대위들과 연대해 서울시 조례 제정 청원 등의 사업은 진행됨
- 임대사업자등록제 등 법안을 청원해 정부와 국회에서 임대사업자등록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함

3. 주택임대차 정책 보고서, 공공임대주택 추진 현황 보고서

- 현안이 될 것임을 예상했으나 추진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중점과제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 사회복지위원회

• 사업배경

-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법적 권리로써 보장해주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임
-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박탈(형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위기에 처함
- 양극화가 심각하고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법적 권리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

• 주요 활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발족 및 공동행동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곤, 장애, 노동, 시민사회계가 모인 연대체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각계의 요구를 모으는 활동을 전개함.
- 기자회견, 기자회견, 긴급좌담회 “무엇이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3/3), 국민공청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4/8),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회”(7/31) 등 빈곤문제를 이슈화하는 행사를 연달아 개최하여 빈곤 문제와 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함.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리 확보 대중 캠페인

- 소책자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 대한민국 빈곤의 정석”을 발간하고, “기초법 개악저지 및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중홍보전을 진행하였으며(5/13~16), 직접 쪽방촌, 임대아파트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거리빈곤상담’도 3차례 진행함. 오마이뉴스와 언론기획으로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생활보장 뒤집어보기’를 7회에 걸쳐 연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빈곤문제를 알리는 대중캠페인을 진행하였음.

3. 기초생활보장 보장성 확대 및 공공부조 장기적 발전 방안 제시

-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9/19)를 개최하여 빈곤층의 사례를 알리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거급여의 개편에 대해 진단하는 토론회 “주거급여 개편과 그 이후”도 후원하였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악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법적 권리에서 행정부의 재량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곤, 장애, 노동, 시민사회계를 모아 연대체를 조직하여 빈곤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를 주도하였으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책자, 언론기획, 홍보전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였음.
- 국회와의 간담회, 법안심사소위 방청 및 출석 등 빈곤계와 시민사회계의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최저생계비를 존치시키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삭제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참여연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였음.
- 그러나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권리성이 후퇴하고 사각지대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및 대안모색이 필요한 상태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과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

중점과제 11. 복지국가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 세대간 소통과 연대

- 사회복지위원회

• 사업배경

- 복지국가의 구체적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해 증폭되는 삶의 불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 및 이에 따른 재정구조와 조세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주요 활동

1. 청년단체와 복지국가 캠페인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와 청년 대상 복지 강좌 “안녕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하여”를 6강 진행하고 온라인 강좌로도 활용함.

- 대학순회 연금 간담회 “당신도 노인이 된다 - Young Men, 연금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를 중앙대, 고려대에서 진행함(3/19, 3/26).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과 함께 전국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 21세기 청년론”을 기획하고 공동 주최함. 연세대, 전주대, 영남대 전국 3군데 대학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나누었음. 참여연대에서 열린 종합토론회에서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등 정부, 정당, 지자체의 청년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함. 세대와 진영을 넘어선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언론과 방송의 주목을 받았음. (11월)

2. 지역복지단체와 복지국가 캠페인

- 지역복지단체들이 모인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차원에서 전국 복지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을 모아 발표하고 이를 지자체장 당선자에게 전달하였음(7/1).

3. 복지국가 자료 제작 및 캠페인

-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 기념 영상 “복지국가, 어디까지 상상해봤니?”를 제작하였음.

- 복지국가운동의 과거와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복지국가운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개최하여(10/31) 복지국가운동을 하는 10여개의 단체와 함께 복지국가운동을 위한 경험과 전망을 공유하였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청년단체, 지역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전국 대학순회 간담회 등 지역 방문 행사를 통하여 복지국가운동을 위한 세대간, 지역간 연대를 모색하는 적극적 활동을 진행하였음.

- 복지국가청년아카데미, 대학순회 연금간담회, 전국 청년문제 공개토론회와 같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활동을 조직해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고 참여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청년문제를 이슈화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음.

중점과제 12.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노동사회위원회

• 사업배경

-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질이 낮은 일자리가 태반임.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시간선택제 일자의 임금은 생계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임.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민간부문에 도 확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활동

1.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고서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으나, 공공 및 민간 양 영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의 채용 자체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 평가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서 작성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음.

2. 고용공시제도 검토 등 좋은 일자리 대안 제시

- 고용형태 공시제 검토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발표된 고용공시제 결과가 예상보다 내용이 정확하여 검토, 분석은 진행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내용의 불법과건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 대책과 근로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촉구함.
- 서울지역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실태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여 서울지역 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시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금 단가로 적용하지 않는 등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태를 공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애초 기획하였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고서와 고용공시제 검토 사업은 평가 필요성이 낮아 공개질의를 통해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음.

중점과제 1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개혁 방안 제시

- 조세재정개혁센터

• 사업배경

-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여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부의 분배구조 역시 소득에 비해 매우 불평등함.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빈약한 복지실태를 감안할 때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개편이 매우 시급함.

• 주요 활동

1. BEST6 보완 세제개혁방향 보고서 발표

- 하반기 새정치민주연합 간담회에서 약식 발표, 완성본 보고서는 내지 못함
- 하반기 '상위1%'를 테마로 한 불평등 문제 제기 인포그래픽 3회 발표(3회차는 '상속 증여 상위 1%'와 다른 계층의 비교 인포그래픽 12월 발표 계획)

2. 조세포럼 연구 결과 종합 출판물 간행

- 9월 12강 끝으로 연구는 마무리
- 출판물은 실무 준비 많은 시간 소요로 내년 상반기 과제로 이월

3. 예산재정 정례포럼의 출범

- 상반기 4월, 6월 2회 진행, 하반기는 예산안 검토 체계로 전환
- 2015년 상반기에는 다시 포럼(세미나) 형태 추진 계획

4. 제2회 중앙예산감시 만민공동회 개최와 낭비성 예산 삭감

- 만민공동회 개최
- <내일신문>과 8회 공동기획기사 연재
- 낭비성 예산 삭감 성과는 12/11 현재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나, 낭비성 예산 자체가 20조원 정도 증가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성과 및 보완과제

- 예산감시 부분은 모임의 정례화, 만민공동회 개최, 공동기획기사 개최 등 활발히 활동했으나, BEST6 보완 세제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추후 예산감시 활동은 전년 대비 낭비성 예산 삭감 목표치 등 조금 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015년부터는 과세 공정성 훼손 방향의 조세정책(부자감세 유지·서민증세)에 대한 강력한 비판 활동이 필요함.

중점과제 1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경제금융센터

• 사업배경

-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규제 완화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발전하지 않고 있음.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는 빈발하고 있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미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금융감독체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 주요 활동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사업 전개

2.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 학계 전문가, 금융관련 시민단체,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 금융위원회 '제 밥그릇 지키기' 비판 성명
- 야당 정부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로비 활동

3.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건 감시와 모니터링
- 생보사 자살사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문제 대응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 리포트 발표와 국감 대응

• 성과 및 보완과제

-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위에 철저히 종속시키는 방향의 국회 논의와 야당 일각의 타협 분위기에 맞서 반대 입법로비를 활발히 전개해 잘못된 개편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둠

-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 판매 금감원 신고건은 이례적으로 기관주의와 임원 중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12월 피해자와 우리은행 사이 조정이 진행 중. 2013년 동양사태 감사청구건 감사 결과 발표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완화와 감독 부실이 사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관련 ING생명에 대해서도 제재 결정 이끌어내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를 냄.

중점과제 15.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민대안 제시

- 평화군축센터

• 사업배경

- 2013년 초 3차 북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음. 한미는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은 미비한 상황. 그러나 미중 간 합의에 따라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전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감축, 비확산 노력을 점검하고 핵군축 비전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2015년 NPT(핵확산금지협약) 검토회의를 맞아 북핵문제 해결과 역내 핵군축 달성 방안으로서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를 국내외에 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활동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포괄적 해법 촉구

- <한반도 평화보고서> 영문판을 발표(4월)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한국 시민사회 관점을 미 대사관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국 유엔대표부 등에 전달.

2. 동북아비핵지대화 의제화

- '2014 NPT 준비회의 동북아비핵지대화 시민사회 포럼' 공동개최(5월).
- 'GPPAC(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지역 회의' 및 시민 6자회담인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참가(11월).
- 한일 PNND(핵감축을위한원네트워크) 의원 간 포럼 참여와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 국회 내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 환기(9월).
-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9월 26일)' 캠페인과 이에 대한 PNND 의원들의 지지 성명 조직.

• 성과 및 보완과제

-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간의 정책연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촉구 활동이 진척되지 못함.
- 교착상태의 한반도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 관점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6자회담국 정부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한 것은 타당한 시도였음. 그러나 이를 의제화하는 적극적 후속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특히 의제화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국내 연구소 및 대사관 등 주요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회람하는 등의 노력 필요함.
- 2015년 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국회 PNND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 진행 보류함.

중점과제 16. 한미일 군사동맹 동북아 군비경쟁 감시

- 평화군축센터

• 사업배경

- 최근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문제를 비롯해 센카쿠 섬 국유화, 국방예산 증액,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우경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하에 일본의 우경화 정책들을 묵인하거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북한 혹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수록 동아시아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한반도 주변에서 상시로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의 군사주의에 구실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유로 추진되는 확장억제전략과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면서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음.

• 주요 활동

1.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캠페인

- 일본 재무장과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를 반대하는 인포그래픽 자료 발행(8월), 시국회의 개최(7월, 10월), 시민서명 진행.
- 한일군사정보공유 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승소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및 군사협력 중단 촉구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한반도 배치의 문제점 제기하는 논평 및 성명, 기자회견, 릴레이 1인시위, 집회 및 행진 등 공동대응 진행.

2. 동북아 영토 해양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제시

- '강정평화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한미일 기지반대 운동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제주해군기지건설을 포함한 동북아 해양의 군사화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입장 발표 및 연대활동(9월)

3.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 결과 대응

- 전작권전통제권 무기연기, 미군기지 이전 보류 결정 규탄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긴급 토론회 개최, 야당 지도부 면담 진행.
- 용산기지 이전 보류에 항의하는 시민공동행동으로 차원에서 용산 함께걷기 행진 진행

4.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협상 대응

- 주한미군의 주둔비 협상이 해를 넘겨 연기됨에 따라 정부협상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야당 원내 지도부 면담, 시민반대서명 국회 전달 등 공동대응 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일본의 재무장 시도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활동의 기초를 일본 재무장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군사협력을 반대한 것은 타당함. 사안의 파급력이나 심각성, 대중캠페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 공동대응으로 접근하였으나 한미일 대외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제언 등의 활동은 부족했음.
- 한일군사정보공유가 한미일 MD 협력, 군사동맹구축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한일군사정보공유 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차 승소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
-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관련 시민사회 공동 대응을 진행하고 국회면담까지 진행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조직하지 못함.

중점과제 17.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연대위원회

• 사업배경

- 국내 인권상황 악화, 시민사회 활동 공간의 위축, 한반도 긴장고조 등에 따라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의 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려 연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국제 흐름을 국내에 소개하여 국제인권기준으로 국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함
-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엔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여러 권고를 내리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유엔 권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유엔 기구의 활동에 부응하여 활동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주요 활동

1. 국가안보기구의 민주적 통제 방안 관련 국제연대

-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정원 개혁 관련 서면 보고서(written statement) 제출(2월)

2.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공론화 관련 국제연대

-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6월)
-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환경적 문제점 관련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당시 부대행사 개최(10월)

3.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관련 국제연대

- 투표할 권리 관련 기자회견 때 찍은 사진을 선거 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라는 내용으로 CIVICUS Be the Change 캠페인 사이트에 게재해 국제 캠페인 참여(5월)

4. 유엔 애드보커시

-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2월)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때 제네바에서 구두발언(oral statement) 진행 및 부대행사 개최. CIVICUS, FORUM-ASIA, DCAF 등 국제단체들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의 연쇄 면담(3월)

-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인권옹호자,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6월)
- 집회결사의 자유 아시아 지역 회의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차벽, 과도한 채증 등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현황을 알리고 비공식 방문 추진(9월)
- 자유권 규약 한국 심의 대응 NGO 모임을 구성하고 공동 사무국을 맡아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공동 반박 자료 준비 중(10월~)
- 제6회 아시아 인권옹호자 포럼 참석. 한국 인권옹호자 현황에 대해 발표. 새로 임명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한국 관련 정보공유(12월)

5. 세월호 참사 국제연대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영문 사이트 및 페이스북 운영(5월~)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국제행동주간 (International Solidarity Week to Remember the Sewol Ferry Tragedy) 진행(8월)
- 프란치스코 교종 방한 즈음 내외신 기자회견 진행 및 가족대책위 지원(8월)
- 세월호 참사 관련 영문 브로셔 발행(8월)
- 국제워크숍 「해의 진상규명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개최(12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세월호 국제연대 사업으로서 해외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및 운용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9.11 테러 희생자 가족위원회 등 해외 재난 유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연대의 메시지 및 지식을 나눔. 세월호 천만인 서명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교민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 조직하고 의사소통 채널 맞춤. 다만 세월호 TF 참여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유엔 애드보커시를 비롯해 여러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함.
- 한국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국제기구들을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중점과제 18. 청년/청소년 참여 확대와 전담기구 구성

- 시민참여팀

• 사업배경

- 입시교육, 학점 및 스펙 경쟁, 고액 등록금 부담, 최저임금의 알바노동, 취업 경쟁 및 청년실업 등으로 청년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기로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시작된 청년연수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재 13기까지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미래 시민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참여연대 청년조직 구성 등 체계적인 청년사업을 기획 추진하려 함. 아울러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활성화하려 함.

• 주요 활동

1. 참여연대 청년조직 및 청년사업 전담팀 구성

- 총 4차례(4/9, 4/29, 5/7, 6/24) 청년사업 TF회의와 이후의 상근자 실무회의를 진행
- 남산 안기부터 답사(42명 참가), 방중에는 전국순회기행 <불온대장정>(8/20-24, 13명 참가), 14기 인턴프로그램(7.1~8.14, 22명 수료), 하반기에는 청년행동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스케치북>(9.18~12.29, 20명 참가) 등 청년 대상 교육/체험/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확대
- 5개 대학(건국대, 동국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한신대 / 40여명 참가)에서 세월호 캠퍼스 테이블 토크 등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시도

2.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준비

- 총 7차례(5/22, 6/16, 7/15, 7/31, 9/2, 9/30, 10/24) 청소년사업TF 회의 진행
- 5/23 청소년 세월호 테이블 토크 행사, 7/26 회원자녀 및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조금 특별한 토요일> 진행
- 국제앰네스티,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기초모임을 구성

• 성과 및 보완과제

- 청년 TF회의, 내부 상근자 실무 회의를 통한 청년사업 구체적인 방향과 전담기구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11월로 계획했던 전담기구 구성이 늦어짐. 청년사업 의 경우, 캠퍼스 사업을 시도해 보았던 점, '불온대장정'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던 점, 하반기부터 '스케치북'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행동을 모색해 보았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앞으로 청년 전담기구 사업으로 이어질만한 행동모델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움. 청년사업 전담인력의 집중력 있는 조사연구 및 기획이 필수적.
- 내년 총회를 기점으로 가칭 청년 참여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 여러 차례 청소년 TF 기획회의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준비'를 하였으나, '청소년 세월호 테이블 토크', '조금 특별한 토요일' 등의 프로그램 외에는 실무역량 한계 등으로 모의국회 등 참여연대만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지 못함. 청소년용 리플렛을 기획했으나 실무 역량의 한계로 중단됐음.
-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조금 특별한 토요일'을 보완하고, 청년인턴 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중에 청소년용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 더불어 타 단체와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청소년 참여행사/교육·탐방프로그램/중등교사연수/교재 및 워크북 등을 공동 개발하려고 함.

중점과제 19.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월례 모임’ 신설

- 시민참여팀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그 동안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신입회원 만남의 날’, ‘지역회원 만남의 날’ 등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로 기획되어 이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회원들과 소통을 늘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모임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
- 격월로 진행한 ‘신입회원 만남의 날’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아카데미 느티나무 특강’의 기능을 합친 ‘회원 월례모임’을 신설하고,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회원들의 참여를 강화하며, 행사의 규모와 횟수도 늘릴 예정. 참여연대의 대표적 회원 소통모임으로 정착시킨 후 ‘지역회원모임’에도 접목시키고자 함.

• 주요 활동

1. 회원 정체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월례모임’ 신설

- 3/28(금), 1회 ‘들꽃 이야기’(초대손님 강우근), 40명 참여
- 4/18(금), 2회 ‘희망버스에서 노란봉투까지’ (초대손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12명 참여
- 5/16(금), 3회 ‘세월호 참사와 고장난 나라’ (진행 이대훈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17명 참여
- 6/12(목), 4회 ‘KBS 보도개입사태로 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초대손님 권오훈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19명 참여
- 9/23(화), 5회 ‘남녀의 차이에서 비춰진 소통과 사랑’(초대손님 이재형 한의사), 33명 참여
- 11/21(금), 6회 ‘휴먼라이브러리 “참여연대 사람들”(사람책 참여연대 회원, 자원활동가, 임원, 상근자들)’, 14명 참여

※ 참여인원에 상근자는 제외, 7월은 회원캠프, 10월은 오픈하우스 행사, 12월은 회원 송년회로 대체하였음. 8월에는 사무실 내부 공사로 개최하지 않았음

2. 지역회원과의 소통 강화

- 3/22 ‘광주전남지역회원 만남의 날’ 진행(20명 참석), ‘대구경북지역회원 만남의 날’ 진행(9명 참석) 3/29 ‘대전지역회원 만남의 날’ 진행(9명 참석), ‘부산경남지역회원 만남의 날’ 진행(8명 참석)
- 지역순회 강연 <김만권의 민주주의 - 참여, 그 끝나지 않은 시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진행(청주, 7/21, 21명 참여),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진행(창원, 7/23, 22명 참여), 울산시민연대 공동진행, (울산, 8/20, 30명 참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진행, (전주, 11/5, 30명 참여)

• 성과 및 보완과제

- 회원월례모임은 행사준비와 진행에 있어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애초의 목표로 삼았던 ‘회원 참여형’ 행사로 안착. ‘월례’라는 이름을 붙여 정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올해는 특히 큰 행사가 많아 진행하지 못한 달도 많았음. 참여인원은 주제에 따라 변동이 심했으며 특히 신입회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특강’에 중심이 맞춰지면서, ‘회원 정체성 강화’라는 목표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후 ‘회원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지역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지역회원 만남의 날 외에도 중하반기에 지역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민주주의 강좌를 4차례 진행하였고, 내용과 진행 등에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음. 민주주의 강좌를 통해 지역회원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자치연대와 행사를 공동 주최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하지만, 참여자치연대와 공동 주최로 하다 보니, 교류의 모호성이 존재하였고, 강좌형 프로그램 특성상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음.

중점과제 20. 참여연대 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및 유통채널 다변화

- 미디어홍보팀

• 사업배경

-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콘텐츠들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널리 유통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참여연대 활동의 내용이나 성과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 콘텐츠 관리 및 홍보기획력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조직적 지원의 한계와 홍보역량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
- 이에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여 콘텐츠 제작 방식의 다변화, 다양한 유통채널의 활용 등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활동

1. 콘텐츠 유통채널 점검 및 다각화 전략 마련

- 2월부터 SNS(페이스북, 트위터)상에서 유통시키기 위한 콘텐츠로 사업부서의 특장 이슈를 이미지로 만든 <이미지뉴스>를 제작했음. 2월~6월까지 45개 제작 및 배포
- 6/27 온라인 콘텐츠 유통채널 점검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전체 간사 브리핑
- 7/2 뉴스레터 <통인통편지>를 Mailchimp로 솔루션 변경하고 디자인 변경

2. 웹사이트 및 모바일 페이지 개편

- 11월에 논의를 위한 상근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홈페이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함. 레이아웃 변경/ Editor 기능 개선/ 참여연대소개 페이지 리뉴얼 등 홈페이지의 최소 개편으로 방향을 정함.

3. 20주년 홍보 콘텐츠 제작

- [홍보] 20주년 총회를 맞아 20주년 엠블럼을 제작 및 CI 정비
- [인쇄물] 외주제작사인 <디자인생선가게>에서 모금/소개리플렛 제작
- [인쇄물] 참여연대 20주년 활동보고서 1994~2014 (2013~2014활동보고) 제작

- [20주년 외부광고] 마을버스 부착광고, 오마이뉴스 웹배너 광고, 팟캐스트 <국민TV>/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교환광고, 한겨레신문 5단 광고
- [웹] 20주년 기념 웹페이지 오픈, SNS에 20주년 기념 <이미지뉴스 : 명사들의 '함께 만드는꿈'> 총 22회 게재 (8월~10월)
- [영상제작] 20주년 창립기념식 인트로, 참여연대 20년 성과, 참여연대에 바란다, 2013~2014 활동보고, 참여연대의 아름다운사람들, 참여연대 생일을 축하합니다
- [기념품] 오픈하우스의 물병, 자석세트, 포스트잇 제작
- [공간꾸미기] 오픈하우스 맞아 2F~5F 공간꾸미기 완료. (시민참여팀의 사무실 투어와 연계사업임)

• 성과 및 보완과제

- SNS <이미지뉴스>를 제작 이후, SNS 팔로워 수 증가폭이 평균 300여 명 커짐. 2013년 10월~2014년 1월엔 한달 평균 800여 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2월 이후 한달 평균 1,100여 명 증가함.
- 20주년 홍보물/콘텐츠 제작은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무난하게 진행함.
- 웹에서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유통채널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정리함. 이후, 웹마케팅을 포함한 웹 활용을 위한 통합 전략안이 필요함.
- 홈페이지/모바일 페이지는 단기 계획으로 레이아웃 개선을 목표로, 장기로는 웹 홍보/소통 전략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의 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개편을 목표로 함. 참여연대 소개 페이지/20주년 기념페이지의 개선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
- 홍보/기획과 콘텐츠가공/SNS전담자를 두어, 사업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려고 함. 2015년 활동방식 개선 논의 이후 콘텐츠 홍보 프로세스 표준화 및 통합 관리에 나설 예정임.

특별과제 1.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및 20주년 선언문 채택

- 정책기획팀

• 사업배경

- 창립 2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2013년에 20주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운영 및 분야별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와 한국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조직의 비전과 혁신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활동

1. 분야별 비전과 혁신과제 마련

-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회의 및 토론 진행
- 성찰과비전보고서 및 20주년 선언문 채택함

2. 조직체계 점검 및 개선

- 시민, 회원 참여 확대, 홍보 등 조직운영분야 점검 및 강화를 위한 논의 진행
- 청년 등 시민소통과 참여 확대 위한 활동기구 구성은 2015년으로 연기
- 실행위 강화, 의사결정/집행기구 회원 참여 강화를 위한 논의 진행

3. 참여연대 활동방식 개선

- 활동방식 진단 및 개선 시도, 새로운 전형 마련 진행하지 못함, 2015년 초 진행
- 각 부서별 시민참여프로그램 강화 진행하지 못함

4. 상근역량 강화

- 참여연대 운동 가치와 비전 공유 프로그램 마련
- 채용절차를 강화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상근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위해 교육기획위 부활

• 성과 및 보완과제

- 평가와 비전수립을 위한 토론 수차례 진행하여 최종 20주년 선언문과 혁신과제, 중장기 의제 마련했고, 최종 성찰과비전보고서는 11월에 완료함. 중장기 의제와 혁신과제는 세부적인 논의일정과 실행계획을 추가로 논의해야 함. 조직운영 분야 상근비중을 확대, 강화하여 20주년 사업을 무난하게 해낼 수 있었음.

특별과제 2. 신입회원 2,000명과 함께 하는 20주년

- 시민참여팀 주관, 참여연대 전체

• 사업배경

-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회원모집 캠페인을 통해 회원을 2,000명 모으자는 계획.
- 회원의 회비와 회원·시민의 부정기 후원으로 독립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참여연대 회원들의 큰 자부심. 참여연대 20년 평가과정에서 하루빨리 별도의 후원행사 없이 '회원 회비 100%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20주년위원회 대다수가 공감한 바 있음. 회비로만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회원 참여가 필수적임.

• 주요 활동

1. 회원확대 전담기구 구성 및 회원확대 캠페인

- 4/9(수) 회원확대위원회 1차 회의 진행
- 6/14(토) 서울시청 희망나눔 코너에서 회원가입 부스 운영
- 월별 회원가입 메시지 정해서 참여사회 뒷면에 홍보 진행

2. 가입가능성 높은 시민층 발굴 및 회원가입 홍보 강화

- 회원숫자 홈페이지에 노출. 월별 회원가입 메시지 정해서 참여사회 뒷면에 홍보 진행
- 회원의 지인(피권유자)에게 참여연대 홍보물 대리발송
- 5/31(토) 한겨레신문 간지, 인간리본 플래쉬몹 사진과 세월호 참사로 회원가입 한분들의 신입회원 한마디를 담은 홍보물 (A4사이즈) 5천부를 고양시 행신동, 정발산동 중심으로 배포
- 팟캐스트 국민TV에 이어 시사통도 교환광고 시작

3. 인적 네트워크 활용 캠페인

- 회원가입권유 이벤트 1탄, 5월 내 가족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2-3탄, 6월 회원가입 권유자 티셔츠 선물 이벤트, 9월 '튼튼한 참여연대를 만드는 5가지 방법' 튼튼재정 캠페인 진행(①회비 증액하기 ②생일축하금 보내기 ③회비 한 번 더 내기 ④전화 한 통으로 후원하기 ⑤주변에 회원가입 권유하기), 4탄, 11-12월 회원가입 권유자 및 신입회원 추천 선물 이벤트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결과적으로 연말 회원 15,000명 만들기 목표는 달성하였음. 회원가입 확대를 위한 오프라인 캠페인단 구성, 온라인 마케팅 적극 활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세월호 참사로 논의했던 회원확대 캠페인은 진행하지 못함. 대신 세월호 사건 집회 등에서 서명전과 함께 회원가입서 및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2종 배지를 제작하여 간접적으로 참여연대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고, 회원가입이 최근 3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음.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가 회원가입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됨. 이런 의미에서 회원가입과 '참여'라는 부분을 연결지어 잘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팟캐스트 청취 후 회원에 가입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지인 권유를 통한 회원가입도 25%로 효과적인 회원가입 동기라는 것이 확인됨.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임.
- 탈퇴 수는 작년과 비슷하게 300명 이내임. 직접 전화를 통해 보류 회원으로 전환을 권유하고 있어, 보류회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음. 회원 탈퇴는 3년-5년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지속적으로 회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탈퇴율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음.

특별과제 3. 시민·회원과 함께 만드는 20살 생일 잔치

- 20주년 행사기획단, 참여연대 전체

• 사업배경

- 참여연대 활동을 함께했던 임원, 회원, 자원활동가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참여연대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20주년 행사를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함
- 이를 통해 참여연대 20년의 역사와 성과, 스무 살 참여연대의 각오와 목표를 밝히고자 함.

• 주요 활동

1. 20주년 행사기획단 구성과 운영

- 20주년 행사기획단 구성하고 운영하여 행사 진행

2. 20주년 창립기념식 행사

- 9월 15일 창립기념식 행사 진행

3. 20년 축하 시민한마당

- 폐기하고 7월에 회원캠프를 진행

4. '홈커밍데이'와 '오픈하우스' 주간 행사 등 '참여연대 20년 공동체' 확인

- 오픈하우스(10월), 홈커밍데이(간사임원, 경제, 복지, 권력감시 분야별로) 진행

5. 20주년 기념 출판사업

- 한국사회비전보고서 출간_<반성된 미래>
- 참여연대 20년 평가분석단행본 출간_<감시자를 감시한다>
- 20주년 백서 발간_<참여연대 20년의 기록>
- 참여연대 20년 20장면 출간_<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 성과 및 보완과제

- 시민참여팀, 운영기획팀, 미디어홍보팀 등 일부 팀원들과 20주년 사업 담당 처장으로 행사기획단을 구성. 회원캠프, 창립기념행사, 홈커밍데이/오픈하우스 등 일련의 20주년 행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함.
- 창립기념식 행사 자체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회원들을 비롯해 구성원들이 20주년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음. 이와 별도로 20주년 학술행사 개최했고, 반성된 미래 주제 일부 강좌로 진행함.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회원캠프를 7월에 개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백서를 제외하고 단행본 발간은 계획대로 진행함.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 근거 자료를 생산했고, 한국사회 지향점을 제시했음. 20주년 백서는 20년치 기초자료 취합과 추가 확인 및 수정 작업, 활동 100선 원고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백서는 2015년 1월 마무리하여 발간함. 백서 발간 이후 차제에 입법, 소송자료 일상적으로 점검되도록 할 필요 있음.

특별과제 4. 더 튼튼한 참여연대를 위한 발전기금 적립

- 운영기획팀 주관, 참여연대 전체

• 사업배경

- 참여연대 활동력을 유지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임. 또한 참여연대는 기존의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세대 사업과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어서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원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도 있음. 이에 2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 발전기금을 모금해, 참여연대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함

• 주요 활동

1.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발전위원회 및 모금 계획 마련

- 모금을 위한 전현직임원, 회원, 상근자로 구성하는 발전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모금 기본계획을 구성해 4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기에 할 시기 세월호 정세로 인해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모금집중시기를 창립기념행사 시기로 조정하고 대규모 모금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기로 함.

- 애초 모금계획에 의해 후원 가능 대상별 소규모 행사를 추진하고 모금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한 차례 진행 후 중단됨.

2. 모금진행

-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모금을 추진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모금목표를 평년 후원금의 2배로 설정했었음. 참여연대 20년 동안 관계를 맺었던 임원, 상근자, 회원 공동체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기치 않은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목표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모금액이 높았다는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재정보호의 기본방향을 회원확대를 통한 정기회비로 정하고 후원금 목표의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 외 분야별, 관심사별 목적형 기금의 개발 등 기타 재정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임.

특별과제 5. 공간개선, 시민에게 열린 참여연대 만들기

- 운영기획팀, 미디어홍보팀, 시민참여팀

• 사업배경

- 많은 시민,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어진 참여연대 사무실을 더 많은 시민과 회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함. 이를 통해 참여연대 운동 및 시민운동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접촉면을 더 넓히고자 함. 또한 상근자 및 자원활동가들의 업무 공간도 효율적으로 재구성함.

• 주요 활동

1. 기본 계획에 의한 공간 개선 공사

- 참여연대 건물을 시민에게 확대 개방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공간개선기본계획과 설계·건축안을 마련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6월~8월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함.

- 공사완료 후 새롭게 탈바꿈 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운영계획을 마련함. 11월에 1층 카페통인을 새롭게 오픈하고, 2층 과 지하 1층은 각종 강좌, 토론회 등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술작품 전시를 위한 갤러리로도 활용하고 있음.

2. 업무공간 재배치

- 사무공간은 1개층을 줄여 3개층으로 재구성하고, 가구배치와 수납공간을 확대해 업무공간 효율성을 제고함.

3. 투어코스, 홍보물 등 전시 공간 마련

- 회원의 벽, 명예회원의 벽을 설치함.

- 10월 오픈하우스를 기해 투어코스를 마련하고 역사의 벽, 입법, 소송 성과 등을 전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공간개선 공사 및 업무공간 재배치는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했음.

- 각종 홍보물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음.

- 안내데스크 재배치 및 추가 요청은 의견 수렴을 통해 후속과제로 검토할 예정임.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국회 및 의원 평가 방법 다양화, 안정성 확보
- DB 사이트 콘텐츠 다양화 및 대중화

• 2014 주요 활동

1. 19대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 다양한 주제로 국회 평가 자료를 제작하지는 못했지만, 19대 국회 전반기 를 평가하기 위해 3종의 보고서 ①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7월), ②4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국회 활동 평가(8월), ③디딤돌·결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9월)를 기획해 발표하고, 평가 좌담회를 개최함(10월).

2. 의원 DB 사이트(열려라 국회) 개편

- 현안사업에 집중하고 전면 개편을 연기함.

3. 추가 활동

- 선관위에 정책의제 선정 및 홍보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선관위측 답변에 반박 공문을 발송하여 논쟁을 이어감(4월).
- [지방선거 후보정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17, 18, 19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자료(△본회의 출석률,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 29개의 투표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5월).
-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 이슈리포트(5월),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을 위해 국회가 개선해야 할 법률들" 이슈리포트(11월)를 발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19대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 사업으로 전반기 국회 평가자료 3종을 제작하면서 의정활동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 모니터 방법과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함. 다만 보고서에 개별 의원 평가를 충분히 담지 못한 것은 보완할 과제임.
-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관련 국회 활동 모니터를 새로운 목표로 삼고 참사 1달 여 후에 '세월호 관련법' 발의 현황 모니터 보고서, 정기국회 중에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을 위한 10대 법률 제·개정안 보고서를 제작 발표해 국회를 압박함. '세월호 관련법' 의 논의 경과를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중앙선관위가 최근 선거 때마다 하고 있는 정책의제 선정 및 홍보 활동이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2014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게 한 것은 성과임. 선관위가 개선할 의지가 없어 앞으로도 대응을 이어갈 예정임.
- 국회의원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10년 치 의정활동 자료를 공개해 후보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한 것은 의정 모니터 기관으로서 적절한 시도였음.
- 역량의 한계로 국회의원 DB사이트 <열려라 국회> 개편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2015년 사업으로 이월해 진행할 계획임.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검찰 민주화와 견제 방향의 검찰개혁 과제 발굴
-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 사법제도 개혁 시행상황 점검과 시정사항 공론화

• 2014 주요 활동

1. 검찰 개혁 과제 발굴

- 상반기 동안 월례세미나 5회 진행함(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검찰 기능의 제자리 찾기, 검사동일체 원칙 해체/검사 직무독립성 강화, 지방검사장 직선제, 검찰 인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2.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박근혜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함(3월).
- 검찰권 오남용 감시와 견제 활동으로 '강기훈 재심무죄' 대법원 상고 취하 촉구 논평(2월), 대검 감찰본부에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 면직 또는 해임 징계 촉구 공문(5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검찰 수사 규탄, 특검 재수사 촉구 논평(6월)과 민변, 민주법원 공동주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6월)을 진행함.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가 불거져 이중회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반대 및 재임용 규탄(5월), 검사출신 우병우 청와대 기용 반대, 이영상 행정관 임명 취소 및 김우석 행정관 검찰 복귀 반대(7월) 등의 활동을 진행함.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의 이름으로 민변 변호사 징계거부요청서를 변협에 전달함(12월).

3. 대법관 교체기 대응

- 상반기에는 차한성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위가 추천한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추천에 대해 추천 취소 촉구 논평 발표(1월), 대법원장에게 제청 반대 공문 전달(1월) 활동을 함. 정병두 후보는 추천이 취소되었음.
- 하반기에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다양성을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는 비판 논평을 발표하고(8월), 인사청문회 모니터 후 다운계약서·부동사 투기 의혹 등 국민기대에 못 미친다는 논평을 발표함(8월).
- 2000년~2014년 편중된 대법관 후보자 현황 조사 보도자료 발표함(8월).

4. 모니터링 보고서의 안정적 발간

- 2009. 1~2014. 4.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 이슈리포트(7월), 노무현~박근혜 정부, 청와대 편법 검사 파견 현황 이슈리포트를 발표함(8월).

5. 법원 감시 토대 마련

- 판결비평 칼럼 15회, 판결비평 좌담회 2회, 동영상 강의와 해설 슬라이드 방식의 판결비평 1회 등 총 18회의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함. 2005년 ~ 2014년까지 10년 치 판결비평 모음집 <공평한가?> 도서를 출판(2015년 2월)함.
- 주요 판사 모니터 자료실 구축사업은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 진행하지 못했음.

6. 기타 현안 대응 등

- 성추행 이진한 검사의 경고처분을 규탄하고, 부실 감찰에 대한 재조사 및 엄중 징계 요청 활동을 진행함(1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1심 유죄 판결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진행함(12월).
- 사법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예고에 대해 철회 촉구 논평을 발표하고,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함(1월).
-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군사법제도 개혁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 청원함(12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좌담회를 열고, 계획대로 1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검찰 감시 활동을 지속함. 계획한대로 검찰개혁 세미나를 5차례 열어 개혁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대안들을 정리해 추후 검찰 개혁 운동에 활용하기로 한 것은 성과임. 검사DB 사이트 보완, 활성화는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 진행하지 못했음.
- 대법관 교체기에 법관 내 기수 서열 추천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법관 인사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음. 대법관 후보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후보 추천과 검증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사업을 기획해야 함.
- 모니터링 보고서를 다양하게 기획했으나, 자료 비공개, 조사 작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계획만큼 진행하지 못했음. 계획에는 없었으나 검사 파견 문제가 불거져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법무부 파견 현황 보고서를 발표해 반향을 일으킴. 청와대 검사 파견 문제는 2015년에도 집요하게 문제제기하고, 검찰청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가야 할 과제임.
- 판결비평을 월 2편 가량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판결 비평을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2015년 2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발행한 판결비평을 수록한 도서 <공평한가?>의 출간을 계기로 판결비평 사업을 더 널리 홍보하고, 필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이후 시민인권단체들과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해 군 인권 보장과 군 사법 개혁을 위한 3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함. 청원한 것은 성과이나, 청원 이후 국회 입법 로비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2015년에 이어갈 계획임.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부패방지 및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행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안정성 강화

• 주요 활동

1. 박근혜 정부 인사 모니터 및 인사검증 강화방안 마련

- 2014년 6~7월중에 장관급 고위공직 후보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 김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모니터, 부적격 또는 임명반대 입장발표, 이병기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반대 거리기자 회견 개최함(6~7월)
- 인사검증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문제된 인선사례 백서 제작 또는 문제사례 소개 웹 페이지 등을 제작하고자 한 애초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음

2. 정부와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 연례 보고서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모니터 보고서 2014>를 발행하였음(9월)
-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6월), “공직윤리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칼럼 기고(6월), <이슈리포트 -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발표(11월)
-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제정 촉구 입장 발표(7월), 반부패 5개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의견서 국회 제출 주관 등(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포함, 11월)

3. 기타

- 1)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대응
- 1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11일간 릴레이 1인시위 진행(3월), 간첩증거조

공익제보지원센터

작 사건 설명 팜플렛 제작(3월), 간첩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 “이 괴물을 어찌할까” 3개 단체 공동주최(3월), <특검실시, 남재준 파면 요구> 신문광고 및 광고비모금 시민캠페인(4월)

2) 부패사건 대응

-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사건 권익위 조사요청(8월),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사건 추궁 공익로비(8~9월)
-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검업무경비 횡령죄 무혐의 처분 비판 논평 등

3) 공공기관 개혁 관련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10월)

4) 정부조직 개편 등 기타

-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10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및 인사검증 제도개선을 과제로 선정한 것 자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만큼 적절했음. 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와 상근 인력의 공백 등의 사정으로 기획사업은 계획대로 못하고, 인사청문회 모니터와 평가활동에 그침. 부적격자의 공직자 인선은 당분간 반복될 것이므로 계속 주목해야 할 과제이고,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감사 등에 부적격자가 임명되는 것도 방지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임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주장해오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가 입법화되었음.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퇴직 후 취업제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 사회적 발언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공직윤리(부패)전담기구 개편 등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역량을 집중해, 사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요구를 밝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기획하고 주관한 것은 적절했는데, 재판과정과 판결 이후까지 추적하면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자별 실질적 지원 지속 및 확장
- 법/제도 개선 과제 추진

• 주요 활동

1. 공익제보자 개인별 지원 및 의인기금 홍보 강화

- 시민참여형 공익제보자 지원 캠페인(중점과제) 외에도 4명의 공익제보자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 취소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 및 공문 등을 관련 기관에 보냄. △ 정진국 씨 해고무효판결 수용 요구서 포스코측에 제출(4월), △ 김경준 씨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도 중단 요구 외교부에 제출(8월) △ 안중훈 교사 파견취소 요구 논평 및 신분 노출경위 조사 요구서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8월), △ 이해관 씨에 대한 재보호조치 결정 요구서 국민권익위에 제출(10월)
-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2건의 판결 비평 칼럼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등 주변환경으로 인해 의인기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함

2.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활동 전개

- <세월호 참사 대책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빠졌다 - 공익제보자 52명과 시민단체 공동선언> 기자회견 제안 및 개최(6월) 및 기고문 경향신문 게재
- <이슈리포트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발행(8월)
- 공익제보자 보호 법개정 촉구 시민단체 - 법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제안 및 개최(11월)

공익법센터

3. 2014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 의인상 추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함(11~12월)

4. 기타

- 서울시가 제안한 <공익제보 상담창구 운영업무협약> 체결함(5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갔음. 하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표류하였음. 지원여부에 대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참사를 공익제보 활성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들 소개나, 공익제보자들과의 공동선언 개최 등 입법로비 활동도 전개했음. 2014년 중에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이 개정되기는 어렵지만, 2015년 연초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종 처리까지 주목해야 함
- △ 공익제보자에 대한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단위의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운동 등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 우선 제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범위 확대는 2015년 중에 실행(재개)해야 할 것임.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 소송, 제도개선 활동
-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기타 공익소송 발굴 및 진행

• 주요 활동

1.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과 국가의 통신감시 규제

- 이동통신3사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5월, 항소심 진행중)
-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구실 인터넷 검열 중단> 요구서를 대검에 제출(10월), <위협받는 사이버 공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개최(10월), <통신자료제공 제도 폐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논평(10월)
-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구> 시민단체 공동성명 동참(3월)

2. 공익변호사 양성

- 활동없음

3. 공익소송 발굴

- <대통령 퇴진 주장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김현정 뉴스쇼 제재명령 취소소송> 법률대리(7월),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보도 청와대비서실의 CBS 상대 손해배상소송> 공익변론(7월),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비난 명예훼손혐의 형사제판> 2건 공익변론(7월), 모욕죄에 근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공익변론(7월) 시작함
- 메가박스의 영화제작사에 대한 가상프린트비 징수 관련 소송(항소심) 법률대리(7월) 시작
- 2014년 이전에 제기했던 공익소송(△교육부장관 고교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법률대리 △ 시민방송(R-TV)의 백년전쟁 방영 제재명령 취소소송 1심 및 항소심 법률대리, △ 변호사시험 면과과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 이동통신3사 통신자료제공 현황 비공개 손해배상소송 △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제 헌법소원)을 진행함

4.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들의 표현 통제에 대한 비판 논평(6월), <이명박정부 5년 국민입막음소송 현황> 이슈리포트 증보판 발행(10월)
- 정부의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악시도 비판 논평 발표(12월)

5. 기타

-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방송에 내보지 않은 방송사들에 비판(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및 심의요청(5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와 사이버 사찰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일부 대처했으나, 전반적으로 미진했음. 특히 하반기에 사이버 사찰 논란이 빚어졌을 때, 공익법센터 차원에서의 사회적 발언이 부족했음. 다만, '사이버 사찰' 논란 중에서도 명예훼손을 빌미로 한 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며, 검찰에서도 명예훼손을 빌미로 한 인지수사 계획은 취소하기로 하였음
- 감청 또는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정보통신관련 압수수색이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논의는 본격화시키지 못했는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제개정의 심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014년 중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익소송 6건을 시작하고, 2014년 전에 제기했던 사건 중 5건(2건은 표현의 자유 관련, 3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을 변론을 진행하는 등 11개의 사건을 진행하는 등 공익소송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매우 활발히 전개했음
- 세월호 참사 직후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등을 빌미로 한 표현 규제에 대해 참사의 파장과 충격이 컸기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해명에 대한 비판을 한 이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은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었음.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중소기업인 및 지역 경제 살리기
-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살리기
-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 생활밀착형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 사회권 운동 준비 및 기반 마련
- 철도민영화 등 공공부분 민영화 저지

• 주요 활동

1. 중소기업인 살리기 운동

- 정부의 규제개혁 진단 토론회 및 이슈리포트 발행(4월)
- 가맹사업법 1년 평가, 가맹사업법 개정 1년 평가 자료, 기자회견 진행(7월)
- 세입자에 대한 강제철거 현장 지원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12월)

2.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 이슈 대응

-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3월)
- 대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경감법(입학금 폐지,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문제점 보완) 발의(4월)
-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공동제기(6월)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수원대 교수 특혜 문제 대응(연중)
- 수원대·상지대 사학비리 해결 촉구 및 교육부, 사분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연중)

3.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공공성 실현

-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항소심 승소 논평(2월)
- SKT 불통사태 관련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4월)

- SKT, KT의 알뜰폰 시장 진출 관련 불법·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방통위-미래부 신고
-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리포트, 법 개정안 준비, 토론회 개최, 통신비 절감 방안 발표(하반기)
- 휴대폰 제조3사, 통신3사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특경법(상습사기죄) 위반 혐의 고발

4.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신규)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철회 활동 및 전국으로 확산되는 화상도박장 문제 연대 활동 진행
-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공익소송 제기
-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 '생활 속 시민권리 찾기' 소소권 캠페인 진행
- 과거 참사 가족 지원 활동 및 시민안전 대책 마련 촉구

• 성과 및 보완과제

- 정부의 규제완화 대응 등 올해 사회경제분야에서 협업 구조로 현안 대응 및 리포트 발행하는 성과 있었음.
- 상가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정치-교육 유착과 사학비리 문제 대응을 지속함. 등록금 인하 운동은 해외 학계의 연구 방문이 이어지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델로 자리잡음.
- SKT 통신장에 문제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통신소비자 운동의 새로운 방식 시도.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과정에 대응하며 통신3사의 시장점유율 50%제한, 망 도매가 일부 인하 성과. 단통법 시행에 따른 대리점·판매점 피해, 소비자 피해 문제를 가계부담 차원으로 접근하여 쟁점화
- 용산 화상경마장 이슈는 도박장 문제를 사회여론화 시키며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 투쟁의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됨
- 참여연대·경향신문 언론기획을 통해 시민권리 찾기 운동을 확장함.
- 과거 참사 유가족모임에서 소통 역할을 맡아 '재난안전가족협의회' 발족에 기여함.

경제금융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 감시와 대응
- 금융거시 건전성 이슈에 관한 정책 개입
-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 주요 활동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중점과제 7에서 일부 소화
-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평가
-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정책질의회임명 반대 논평
-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검찰고발 기준 비판 활동
- 규제완화 반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요구 활동
- 삼성보고서 작업은 연내 완성 못하고 현재 진행중

2. 불공정거래 근절

-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 사업(공정위 신고, 검찰 고발, 국정감사 대응, 국회 토론회,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은 산발적 대응만 있었고 집중력 있게 대응 못함
- <또하나의 약속>, <다이빙벨>에 대한 공정위 신고, 영화산업 멀티플렉스 독점 문제 제기

3. 금융 거시건전성 문제 개입

- 가계부채 문제 개입 하지 못함

- 2개의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 PEF 규제완화 문제점 이슈리포트는 하지 못함

4. 금융권력 감시

- 론스타 관련 금융관료 형사고발 등의 활동
- 김승유 고발건은 재항고까지 진행, 라웅찬 신한사태 대응도 활발히 추진
- 모피아 금융감독실패 역사 이슈리포트는 하지 못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건설하도급 불공정근절 사업은 문제제기(공정위 신고, 검찰 고발), 이슈화(국정감사 대응, 토론회), 제도개선안 발의 등 연중 일관된 캠페인 전개 성과
- 삼성의 지배구조와 큰 연관이 있는 2개의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 발의로 삼성감시의 계기점 마련
- 금융권력 감시는 활동 자체는 비교적 활발했으나, 론스타 문제를 제외하고, 감시의 목표, 대상, 수단에 대한 종합 계획 없이 부각하는 이슈별로 대응하는 한계를 보임.
- 재벌 금산분리 이슈에 대한 정책 개입, 가계부채 정책 개입 등은 목표와 과제가 불분명했고,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도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함. PEF 규제완화 리포트, 모피아 금융감독실패 역사 이슈리포트는 전문성 문제로 실제 진행하지 못함.
- 금융권력 감시 분야에서 목표, 대상, 수단에 대한 기획안 수립이 필요하며 재벌개혁 분야는 삼성보고서 작업과 이후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감시 활동에 집중. 삼성 비판과 감시 활동을 2015년 중점 과제로 선정할 예정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공공부문, 민간영역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니터링
- 노동권보호를 위한 연대활동과 관련 법 개정
- 사회보험 개선과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 활동

1.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활동

- 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를 개최 등 삼성노동 탄압에 대한 문제제기, 전교조 범외 노조 통보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출하는 등 노동권 침해에 관한 대응활동을 하였음.
- 신현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이후 긴급 좌담회 개최, 대책마련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 서울시 인권위 진정 등 경비노동자 노동인권과 해고대책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탄압, C&M 노동탄압 등 현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연대한 대응활동 진행

2. 공공부문 노동행정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 서울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 이슈리포트 발표

3. 생활임금 확산 운동

-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를 진행하고 생활임금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 공약을 이슈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또한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도입 여부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하여 감

시 및 이행추구를 할 필요성이 생겨 8월부터 노동조합, 비정규노동센터, 시민단체와 생활임금 도입 및 제도화를 위한 연대모임을 진행.

- 서울시 및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교육청에 생활임금 도입 관련 공개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생활임금 도입 및 확대를 추구하고 감시하고 있음.

4.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확대

-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논평을 발표하는 등 사회보험제도 관련 모니터링과 문제제기 활동 진행.

5. 노동포럼 개최

- 노동포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개최
- 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 개최

• 성과 및 보완과제

-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이마트 대책위, 삼성바로잡기, 진짜사장나와라, 경비노동자 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 연대체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있음.
-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여 지방선거 전후로 지자체의 생활임금 도입을 촉구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이슈화와 제도화에 기여하였음.
- 노동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연대, 생활임금 확산운동 등 노동권 강화와 취약계층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정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예정.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보건의료제도와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정부, 국회 등의 보건복지정책/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 월간 복지동향의 발행 지속 및 출판사업
-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 기념사업

• 주요 활동

1.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확보방안 제시와 제정·조세부담 방안 공론화

-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및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음.
- 복지국가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토론회를 계획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함.

2. 지방선거에서 복지 이슈화

- 참여연대 및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차원에서 의제를 발표하는 사업을 진행함.

3. 공적연금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하여 동영상 제작, 촛불문화제, 전국 학자 257인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반대 서명 조직, 기초연금 관련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후퇴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었음.
-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도 연구 준비 중.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대하여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대응하고 있음.

4.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및 보장성 확대

-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에 참여하여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 의료민

영화 반대 국민설명회 “의료과담” 기획 및 진행, 서비스발전기본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아이사랑 카드 부정결제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토론회를 진행.
- 무상보육 책임 떠넘기기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보육재정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 릴레이 인증샷데이, 언론기획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함.
-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음.

6.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 기념사업 진행

-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을 맞이하여 복지국가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으며, 후기 10년 자료를 정리하고 있음.

7. 월간 복지동향의 안정적 발행

- 월간 복지동향을 매달 발행하여 복지이슈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연금, 의료, 보육, 장기요양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복지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캠페인, 행사 기획 및 진행, 논평, 이슈리포트, 보고서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회 연대를 주도하고 참여한 점, 복지 이슈들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단, 복지 각 영역의 시장화, 민영화가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각 영역별 개별 대응은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연금, 의료, 보육 등 주요 복지영역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전체적인 복지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복지국가 운동 및 복지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도 병행하고자 함.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세금과 재정

• 주요 활동

1. 정부의 조세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상반기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 대한 논평 중심 활동
- 하반기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 논란에 대한 정책 개입 활동

2.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세금과 재정

- 상반기 주택임대소득 과세 문제 인포그래픽 발표
- 하반기 ‘상위 1%’를 주제로 한 3개의 인포그래픽 발표

3. 공공부문 개혁

- 4차례 네트워크 회의, 7회 내부 TF 회의 진행, 국회에서 간담회 형식 토론회 진행
- 4분기에 자원외교 문제 대응 활동 전개

• 성과 및 보완과제

- 하반기 서민증세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평 활동을 전개했고, 인포그래픽 작업으로 언론의 높은 호응 얻음. 하지만 조세제도 개혁 성과는 미미했음.
- 공공기관 개혁 활동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대략의 개혁방안 마련, 공공기관 부채원인 진단,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개입 등 2015년 사업 활동의 발판은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논평 중심 활동 이외 기자회견, 토론회, 입법로비 등 현장성 있는 활동력을 높여야 함.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평화국가 담론 확산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지속
- 군사주의 확산 저지 및 외교안보기구의 민주적 통제 촉구하는 시민행동 전개
- 평화운동의 지지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운동 전개

• 주요 활동

1. 평화권

- 평화권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유엔 인권이사회 평화권 실무그룹에 제출(3월)

2. 북한인권문제 대응

-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조사보고서 관련 간담회(3월), 토론회 개최
-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대응 및 대안제시를 위한 의견서 발행(11월)

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지속

- 연산호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10월) 등 강정 앞바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연산호 피해 등 환경문제 집중 대응.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출범(2월)과 이후 모금 및 벌금형 받은 주민들과 활동가 지원지속적으로 진행.
- 강정마을 내에 군관사가 건설되기 시작함에 따라 군관사와 진입도로 문제가 다시 부각되어 예산삭감 의견서 제출(11월) 및 집중 대응하고 있음.

4. 군사주의 문화 강화시키는 중복담론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

- 정부 안보교육의 문제점 제시하는 논평 발행(5월), 국가기관들의 안보교육 자료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잔인한 영상 상영한 강서구 초등학교 안보교육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서울시 및 각 시도 교육청 공개질의서 발송, 서울시교육청 면담, 국방부 상대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10월) 등 진행
- '우리안의 전쟁교육' 제목의 시리즈 언론기고 진행(10월)
- 안보교육 문제점 지적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평화교육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참여하는 다자간 토론회 개최(11월)

5. 파병반대 논리 및 대안 구체화

- 인도적 지원 명분의 파병 반대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2월),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 해외파병 문제점 진단하는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국군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방위 통과 규탄 논평 발행 및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2차 의견서 발행 및 헌법학자 등 의견서 조직, 국회 내 문제제기 움직임 조직 중.

6. 탈핵, 반핵 운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차원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촉구 릴레이 1인시위, 서명운동 등 참여

7.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운동

- 윤일병 사망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군 인권침해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 해결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 시민단체 공동으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연대체 발족(9월)
- 윤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일병을 위한 추모제 개최(9월)
- 인권 관련 3대 법안(군인권법,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군사법개혁안)에 대한 입법청원안 제출 및 국회 기자회견 개최(12월)

8. 최루탄 수출 반대 캠페인

- 인권기준에 따른 한국 최루탄 수출통제 필요성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3월)
-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 사례를 통해서 본 중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3월)
-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 등 바레인 활동가 초청 공개간담회 진행(3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은 기지건설이 절반 이상 추진됨에 따라 환경 문제, 주민·활동가들에 대한 벌금형 문제, 최근 군관사 건설 문제에 대응함. 장기적으로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동북아 정세를 고려했을 때 제주해군기지가 초래하는 안보적 문제점 제기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 있음.
- 군 안보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꾸준히 자료를 축적해 왔고, 실제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었음. 다만 이미 축적한 자료를 이슈리포트 등 정책문서로 남길 필요 있음.
-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폭력 대응 활동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함. 군 인권을 구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3대 입법청원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입법로비 활동에 집중할 필요 있음.
-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방위 통과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이 미흡했음. 법안모니터링을 안정화하고, 파병 관련 정부 보고서 정보공개 및 비분쟁지역 파병의 문제점 제기하는 분석보고서 등을 준비할 필요 있음.
- 평화활동의 주체로서 청년·시민을 육성하고자한 사업은 실제 진행하지 못함. 차기연도에는 <정전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등 발간 자료를 교육교재로 재구성하고 평화교육자 양성 프로그램(Training of Trainers) 개발을 단계별로 준비해야 함.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제언 활동과 국회 파트너십 강화
- 아시아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제고 및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 강화
- 참여연대 활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국제 애드보커시 효과 극대화
- 국제개발, 인권, 민주주의 관련 국내외 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운동 전개

• 주요 활동

1. 공적개발원조(ODA) 감시운동

-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한 세미나 개최(2회)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문서 이행에 대한 개발협력시민사회 공동 질의서 발송(2월)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원조투명성 분과 차원에서 유상원조 정보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수출입은행 질의서 발송 및 간담회 진행.

2. 아시아 연대

-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스리랑카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필리핀 공정무역 활동가 암살사건, 대만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태국 군부의 탄압 비판, 홍콩 시위대 지지 기자회견 등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대 활동 펼침.
- 선거와 관련한 국제 기준이라는 주제로 광주 아시아 포럼 개최 (5월)

3. 국제개발, 인권, 민주주의 관련 국내외 활동가 양성

-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연대 간사 3인 참석 : 2nd Glocal Advocacy Leadership in Asia (8월, 이미현 간사), 6th Asian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12월, 김승

환 간사), UN Advocacy and Training Session (12월, 김잔디 간사)

- 참여연대 간사들 해외 출장 전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등과 관련해 사전 교육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정부의 새마을ODA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 원조투명성 캠페인2.0이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에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함.
-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간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여연대 내부 국제연대 역량 강화에 기여함. 외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간사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경우 적극 참여를 독려한 담당 간사와 사무국의 의지도 주효했음. 20주년 의제 중 하나인 '글로벌 참여연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프로그램 기회 활용을 비롯해 참여연대 내부 국제연대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세월호 국제연대 파견 업무로 인해 참여연대 영문브로셔 제작을 시도하지 못했고 아시아 칼럼도 정기적으로 발행하지 못함.
- 한국 기업의 해외활동 모니터링과 관련해 외국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연대 요청이 있고 올해 버마 선거와 관련해 선거감시 모니터링 사업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아시아연대 사업 필요.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 느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주요 활동

1. 4개 시즌별 강좌 진행

- 4개 시즌별 강좌(총 49개 강좌를 통해 총 321회 수업진행, 약 1천명의 시민이 참여)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2.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

- <교육연구워크숍>, <춤 워크숍>, <독서클럽>, <민주적진행자워크숍>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방법을 많이 도입하고 안정화시켰음.
- <독서클럽>, <휴먼라이브러리>, <세상의 모든 협동> 등 참여연대 임원, 느티나무 참여자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강좌가 늘어났음.

3. 민주주의 학교 강좌 체계화 및 대표강좌 개발

- 올해 1월부터 '민주주의학교' 체계화 및 대표강좌 개발을 위해 아카데미 상근진과 참여연대 각 활동부문(권력감시, 사회경제, 국제평화)의 주요 임원, 간사 등으로 <민주주의학교 연구팀>을 구성해 6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음.
- 결과물로 <에드보커시와 직접행동>를 기획하였음. 여러 시민단체(엠네스티, 생협, 인권단체 등)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담임제와 프로젝트 과제 수행은 앓과 실천이 통합되는 교육으로 참여자와 강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참여사회연구소

4.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활동기구 주관 시민교육 지원 등은 <민주주의학교 연구팀>과 연계하여 개발하였으며 별 도의 참여연대 사업부서 주관 강좌는 진행하지 않았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오픈 6년차로 안정적인 기획과 모집, 운영이 되고 있음. 4개 시즌 강좌는 참여자 수와 운영 면에 있어서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에드보커시와 직접행동>은 답십제와 참여형 워크숍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음. 향후 민주주의학교의 시리즈 대표강좌로 발전시킬 계획임.
- [민주주의학교]에서 강의와 교육연극을 결합하고, [인문학교]에서 강의, 놀이, 파티 등을 접목하는 등 새롭고 의미 있는 방법을 시도하였음. 또한 강의식 강좌 형식에서 벗어나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독서클럽>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음.
- 올해 신입원장이 취임하였고 아카데미 느티나무지기와 운영위원회에도 각각 위원들을 충원하여 보강하였음. 강좌 기획과 모니터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강사와 전문가 중심)회의와 '느티나무지기'(참여자 중심)회의를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의견과 평가를 공유하고 있음.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

• 주요 활동

1. 연구·학술

-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국가의 실상을 공론화하기 위해 5월 19일과 6월 10일 2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사회 전반에 걸쳐 고장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세월호 이후에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토론으로까지 논의를 진전시킴.
-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0일에 좌담회를 개최, 참여연대 내부/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참여연대 20년을 평가함. 참여연대의 활동이 한국 시민운동에서 가지는 의미는 물론,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음.
- 사실상 양당제인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제1야당의 누적된 위기는 공화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착안, 11월 12일에 공개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미래는 있는가'를 개최함. 다양한 측면의 진단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과 한계가 도출되었지만, 새로운 정치 지형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음.
-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기획연구사업인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를 진행함.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추구해야 할 평화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과제를 도출할 예정임.

2. 출판

- 《시민과 세계》 24호와 25호를 발간, 특히 25호는 세월호 참사를 특집 기획으로 구성함.
- 기획연구사업의 성과물로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를 발간, 평화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함께 만들어갈 주체들의 역량을 가늠하였음.

- 이병천 편집주간이 대표 역자로 참여한 단행본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11월, 후마니타스),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12월, 후마니타스) 발간. 연구소 명의로 기획에 참여함.

3. 시민정치시평

- 12월 현재 누적 284호 발행하였으며, 5월 19일부터 주 1회 발행 체제로 개편하여 발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교정 필자 및 외부 필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4. 조직정비

- 운영위·편집위 합동회의 월1회 개최가 정착되었으나 전년에 비해 회의 개최 빈도가 줄었고, 출석률도 다소 낮아졌음. 정기성을 가지는 사업이 축소되고 기획연구사업 역시 별도의 논의구조를 취하게 되어 회의 목적이 《시민과 세계》 중심으로 집중됨.

• 성과 및 보완과제

- 시민정치시평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집필이 이루어졌지만 각 원고의 완성도 및 성격 등에 있어 일정부분 편차가 발생하므로, 연구소 리뷰위원을 분야별로 보강하고 신규 고정필자의 확보가 요구됨. 단발성이거나 국지적인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 연속 기획이나 특집기획 등 연구소의 지향점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새로운 기획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시민과 세계》의 반년간지 체제는 시의성 확보나 진보적 담론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개편 논의와 함께 계간지 전환을 추진 중임.
- 평화복지국가 연구사업은 실무 인력 부족 및 에버트 재단의 소장 교체 등으로 일정 이 다소 연기되었음.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 역량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진 연구자의 충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진 연구자의 충원과 위원 참여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조직 운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필요가 있음.

시민참여분야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소속감 고취
- 참여연대와 만나는 공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촉진
- 참여연대의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 사업 확대

• 주요 활동

1. 중점과제 <청년/청소년 참여확대와 전담기구 구성> 실행

2. 중점과제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월례모임' 신설> 실행, 이외 회원 소속감 고취 활동

- 7/19-20 20주년 맞이 회원공청회 겸 회원소속감 등을 높이기 위해 회원캠프를 진행. 총 134명 (회원 및 가족 55+45명, 상근자 및 가족 28+6명) 참여
- 5/11(일) 제14회 여성마라톤대회에 회원소모임인 마라톤 모임이 주축이 되어 참여연대 회원과 가족, 친구, 상근자 등 30여명이 함께 세월호 참사 등 관련 몸자보를 입고 참여
- 10/18-19 오픈하우스 행사 진행

3. 20주년 특별과제 <신입회원 2,000명과 함께 하는 20주년> 실행

4. 20주년 특별과제 <시민·회원과 함께 만드는 20살 생일잔치> 실행

5.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 4월부터 약 5차례 카페통인에서 바느질 모임을 진행하면서 '시민의 놀이터' 차원의 프로그램 시도
- 20주년 사업의 공간개선과 연계하여 카페통인을 포함하여 1,2층 공간운영 방안에 대한 TF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 진행
- 12월 8일 기준으로 참여연대 탐방 횟수는 총 62회, 방문자 합계는 총 805명임
- 2014년 자원활동가 총수는 85명, 11/24 자원활동가 감사프로그램 <자원활동가데이> 진행,

자원활동가를 위한 문화공연 티켓 나눔 총 5회 진행

6. 기타

- 회원 생애주기별(신입, 1년지기, 10년지기, 20년지기 회원) 감사 프로그램, 회비증액 회원 감사 프로그램 등의 정비 및 개선

• 성과 및 보완과제

- [회원서비스] 가입연차에 따른 감사인사를 자동문자 발송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반응이 좋음. (매년 8월을 기점으로 내용을 바꿔주고 있음) 20년지기 회원들의 감사 선물은 2014년도는 감사패로 드리고(운영기획팀에서 발송), 2015년도부터는 감사선물을 새로 제작하여 발송할 예정임.
- [회원행사] 회원캠프, 오픈하우스 행사 등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회원들의 멤버십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년도에도 회원캠프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청년, 청소년 등 중점사업의 대상층 외에는 다양한 계층별 행사를 진행하지 못함. 회원소모임 패누카가 공식 해체하였고, 전체적으로 회원소모임의 활동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공식 회원소모임의 인원 규정을 조금 완화하고, '시민의 놀이터' 사업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 모집 및 배치, 1달에 1회 자원활동가 인터뷰 등은 잘 진행되고 있음. 매분기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에 20~30명의 신청자가 지원하고 있으나 정기자원활동 TO는 10~15명 안팎이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3층 벽에 자원활동가의 벽을 만들어 자원활동가의 소속감 등을 고취시키고 경우에 따라 자원활동가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보다 주체적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원활동가 데이 행사 등 자원활동가들의 친목과 소속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활동가 교육과 네트워크에 중점을 둘 예정임.
- [방문] 참여연대 탐방수요가 꾸준히 있어 기존 탐방용 자료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왔으나, 연령, 직종 등 탐방자 성격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매뉴얼이 필요함.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공간개선을 통해 사무실 투어 코스를 개선했는데, 참여연대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무실 투어를 정착화 시킬 계획임.

정책기획분야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총괄(20주년위원회 사업)
- 상근자 역량 강화를 위한 채용 및 교육 혁신과 강화
- 참여연대 목표관리와 평가 등 정책기획 기본 사업 강화

• 주요 활동

1. 특별과제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및 20주년 선언문 채택> 및 20주년 기념 출판 사업 진행

2. 특별 연대과제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수행

3. 참여연대 목표관리와 평가 등 정책기획 기본 사업 강화

- 정책기본문서의 보완 및 정비 진행
- 상집/센터간 사업 공유와 소통 강화를 위한 상집간담회 11월 진행
- 회원모니터단 운영 및 정기 설문조사 진행(2014년 3회)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주요 참여연대 연대사업 진행
- 한국일보와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약평가' 언론기획 진행(2월)

4. 상근자 역량 강화를 위한 채용 및 교육 혁신

- 상근자 채용 관리와 과정 혁신을 진행하여 2·3월 신입간사 13명 채용
- 신입간사 교육 및 상근자 업무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신입간사 교육을 강화하여 진행, 상근자 업무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 진행
- 교육기획위원회를 4월에 부활시켜 논의를 진행하고 상근자 교육 전체에 대한 기획을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 운영과 비전보고서 작성, 20주년 기념 출판사업을 큰 무리 없이 진행하였음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여연대 전체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하여 대응하였음
- 20주년 사업과 예상치 못한 세월호 연대사업 파견 등으로 중점과제 목표관리와 활동방식 혁신 등 정책기획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있었음. 체계적 목표관리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업무임에도 충실히 수행되지 못한 것은 보완되어야 함
- 2월의 대통령 공약평가와 세월호 연대사업, 상집간담회를 제외하고 새로운 정책관련 기획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음.
- 회원모니터단 운영과 설문조사는 2월과 6월, 10월에 예정대로 진행함.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좀 더 잘 수렴할 수 있는 설문 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채용 개선과 신입간사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됨. 교육기획위를 부활시켜 교육기획의 방향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교육안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전체 교육이 내년 초로 연기되었음.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20년 성과 및 20주년 기념사업 홍보
- 참여연대 활동 홍보를 위한 기획콘텐츠 제작 및 유통채널 다변화
- 참여연대 소재지 중심의 지역 홍보 강화
- 위기관리 강화

• 주요 활동

1. 참여연대 주변지역 활용한 홍보 강화

- 20주년 사업에 집중하면서 진행하지 못함.

2. 위기관리 강화

- 참여연대 관련 웹사이트 소개 글 점검 및 업데이트(2014.8 최종 업데이트)

3. 월간참여사회

- 편집팀 담당자가 3월에 교체돼서 4월호부터 제작함. 5월호부터 마감일정을 당겨 평균적으로 매월 1일 발행함.
- 4월호에서 1년 반 정도 연재되었던 <참여연대사>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연재기사를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20주년을 맞아 역사와 비전, 활동보고, 창립기념식/오픈하우스/회원캠프 등의 소식을 담았음.

4. 추가 활동 : 팟캐스트 관련

- 참여연대 활동 홍보를 위한 대안미디어사업으로 팟캐스트 제작을 시도함. 7/10~10/2까지 팟캐스트 <참여연대가 만드는 세상, 참.만.세> 10회(20주년 기획프로그램 2회 포함), 특집프로그램 2회까지 제작함. <특집토크쇼 : 과학과 신화의 싸움 -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과 친구들>.

<참만세 : 박근혜식 민생법안의 검은 속내>의 다운로드 숫자가 가장 많았음.

- 1~10회까지 팟캐스트 설문조사,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11/13~12/24 까지 팟캐스트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함. 담당 협동처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슈에 대한 대담프로그램, 안전겉이 만나는 특별한 인터뷰 등 다양한 포맷으로 7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함.
- 월간참여사회와 팟캐스트의 인기프로그램(국민TV, <시사통 김중배입니다>)의 '회원 가입' 교환광고를 진행하고 있음. 회원가입동기 중에 '팟캐스트 회원가입광고를 듣고'라는 항목은 총 974명 중에서 93명/9.55%/4위임.(4월~11월). 팟캐스트의 회원가입광고/방송을 듣고 회원가입하는 숫자가 꾸준히 늘어남.

• 성과 및 보완과제

- <월간 참여사회> 발행 일정을 정상화하여 회원들이 월초에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함. 표지디자인에 대한 호응도가 일반적으로 높았음.
- 사이트(모바일 포함)와 SNS 등에 대한 관리와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콘텐츠 기획, 유통채널 점검 및 확대, 위기관리 및 언론 모니터링 등을 일상적인 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임.
- 팟캐스트 실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현장성, 전문성, 그리고 시민 참여 등 참여연대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 차기년도 본격화할 예정

운영기획분야

• 중기(2014~2015)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발전기금(가칭) 모금 (20주년위원회 사업)
- 공간개선 사업 진행 (20주년위원회 사업)
- '참여연대 20년 공동체' 소통 및 멤버십 강화
-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체계화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주요 활동

1. 참여연대 발전기금 모금/ 공간개선 사업/ '참여연대 20년 공동체' 소통 및 멤버십 강화 (20주년위원회 사업)

2.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체계화

- 회원, 임원, 전직간사 DB 통합관리 체계화 진행함.
- 전직 임원 정보 개선을 위한 2차 DB 정비 진행함.
- 미납회원, 보류회원 정보관리 강화는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DB 관리 안정화를 위한 자원활동가 교육강화는 공간개선 공사로 인한 자원활동의 공백과 DB 관리 담당자의 교체로 추진하지 못했음.

3. 주, 월, 분기, 연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안정적으로 운영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20주년 과제 및 사무처 조직 운영 등 소관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단, 외적 조건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DB관리 안정화를 위한 자원활동가 교육강화는 2015년도 과제로 추진할 예정임.

연대활동

○ 2014년 주요 연대활동 평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범국민적인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끓어올랐음. 이에 참여연대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구성,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시작하였음.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유가족들과 함께 진행하였고, 7월부터 광화문광장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에도 적극 결합하였음. 7월 15일 350만 명이 서명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하였음.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모두 담지는 못하였지만 미완의 ‘세월호특별법’은 11월 7일 통과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연대는 2015년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연대 과제임.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18대 대선개입과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활동은 대폭 축소되었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2014년 4월 중순까지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실시요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퇴진요구를 중심으로 2013년에 결성했던 ‘국정원 시국회의’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주요 단체들과의 공동사업을 유지하였음.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그 같은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면서 참여연대 개별 단체차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연대활동 차원에서의 사업기획은 상당부분 중단되었음.

좋은 정책 확산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

2014년 6.4 지방선거라는 특정 계기를 맞아, 정책제안 운동의 일환으로 참여자치지

역운동연대를 통한 정책제안사업을 비롯해 민생과 사회경제분야에서 공동의 의제를 다루는 ‘6.4지방선거 좋은 정책연대’ 결성 및 공동 활동을 전개했음.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 국면에 큰 영향을 준 탓도 있지만, 이들 정책제안을 위한 연대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여러 요구들의 나열과 단발성 제안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음. 한편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를 위해 ‘국가기관 개입 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결성하였음. 2012년 대선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환기시키고 국가기관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지속된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 동참한 사회단체들도 있었으나, 공동행동을 본격화할 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애초 기획대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음.

경제민주화·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

2012년에 결성되어 2013년까지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명칭을 조직의 성격에 맞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로 변경함. 2014년에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민주화 활동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 담론에 맞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지속 확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부산경제민주화대회를 개최하였고, <프레시안> ‘경제민주화위치’ 타이틀로 18편의 전문가 칼럼을 게재함. 2015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활동, 청년·비정규노동·정치권을 아우르는 ‘경제민주화 부활 선언’ 등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음.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와 함께 만성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채무 탕감 캠페인 한국판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를 연대 활동으로 진행. 롤링주빌리는 장기연체 부실·악성채권을 저가로 사들여 부실채권을 소각해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 채무를 해소하는 취지임. 2014년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함. 신한사태 주범 라웅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금융당국의 파주기 수사에 대한 감시 활동 진행.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개장 반대를 위한 연대 활동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 화상경마장이 학교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이 밀집된 용산

중심 에 입점, 주거환경과 주변 학교 학습권 등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개장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함.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은 지역 주민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타 지역과의 연대로 이어져 각계각층이 함께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바람직한 사례가 되고 있음. 또 전국의 지역 대책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과 함께 '화상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해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됨

의료민영화 저지와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운동,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설명회 개최 등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또한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법적 권리를 형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를 주도적으로 조직함. 기자회견, 세모녀 사진 긴급좌담회, 국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빈곤문제를 이슈화하는 행사를 개최함. 또한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연대체인 '민생보위' 차원에서 소책자 "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대한민국 빈곤의 정석"을 발간하고 대중홍보전, 거리빈곤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중캠페인을 진행함. 이러한 연대활동을 통하여 개정된 기초법은 각 급역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최저생계비를 존치,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삭제하는 등 참여연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이 후퇴하고 사각지대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의 경우 유기적인 연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

최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 특정 업종이나 특정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원청사업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벌이기 위해, 민주노총 등 15개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cnm, sk브로드밴드, lgu+ 등 케이블통신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노동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적극 연대함. 참여연대와 노동조합의 연대를 넘어, 노동현안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와 지역단체간의 연대를 추동함. 노동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노동사안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분위기를 환기시킴. 또한 쌍용차하고 노동자들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권을 탄압받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진행함.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노동시장 급변으로, 단일한 관점의 해석과 대안으로는 노동문제 해결이 어려움. 올해도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역할을 찾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자 함.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연대

2011년 5월 출범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18개 시민사회·종교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연대는 공동집행위원 단체이자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음. 2014년도에도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특히 강정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과도한 법적 처벌이 계속됨에 따라 강정법률지원도금위원회를 발족해 인권옹호와 법률지원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등과 함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안보적 문제점도 제기함.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유엔 메커니즘 활용 등 국제연대 활동

국제인권네트워크는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조약기구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음. 2014년에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제네바 현지에서 부대행사 개최, 구두발언 등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로비 활동을 펼침. 하반기에는 한국 정부 자유권 규약 심의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 사무국을 맡아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제출함. 2015년에도 유엔 및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가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 연대기구 가입 현황

－ 2015. 3. 7. 현재 국내연대 67개 단체, 국제연대 6개 단체 가입

국내연대 - 상설 연대기구 (10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최저임금연대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국내연대 - 한시적 연대기구 (57개, 기구명/가입년도/주무부서)

2015 우리농업지키기 소비자 10만인대회 조직위원회	2015	경제금융센터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2014	사회복지위원회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14	노동사회위원회
불법파견 위장도급 근절!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2014	노동사회위원회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4	민생희망본부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2014	시민감시2팀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2014	평화군축센터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한국연대	2014	민생희망본부
좋은농협만들기전국운동본부	2014	정책기획팀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2014	평화군축센터 /사법감시센터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2014	시민감시1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2014	정책기획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교조조정 공동대책위	2014	민생희망본부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2014	정책기획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2014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2014	사회복지위원회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섬 바로잡기 운동본부	2014	경제노동팀
FTA대응 범국민 대책위원회(약칭FTA범대위)	2013	경제금융센터
예산감시네트워크	2013	조세재정개혁센터
공공부문민영화반대 · 공공성강화공동행동	2013	경제노동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2013	노동사회위원회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2013	평화군축센터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13	사회복지위원회
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탄압저지긴급행동	2013	노동사회위원회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총체적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위한 시민사회시국회의	2013	행정감시센터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3	노동사회위원회
철도공공성시민모임	2013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2	민생희망본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2	평화군축센터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2012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2	민생희망본부 /경제금융센터
공무원노조 법적지위인정과 해직자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2012	노동사회위원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공동행동(2015)이 전환	2012	사회복지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권리 내나라 운동본부	2012	의정감시센터
표현의자유를 위한 연대	2011	공익법센터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2011	민생희망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2011	의정감시센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1	평화군축센터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2011	사회복지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2010	민생희망본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2010	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2010	민생희망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	2010	사회복지위원회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2010	행정감시센터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 감시를 위한 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2010	평화군축센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2010	노동사회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 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2009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2009	민생희망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009	사회복지위원회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	행정감시센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2009	평화군축센터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8	민생희망본부
국제인권네트워크	2008	국제연대위원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2008	민생희망본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2002	평화군축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1999	공익법센터

※ 활동종료 등으로 2015년 해소/탈퇴가 확인된 연대기구(7개)

국가기관 개입 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2014년 결성)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2014년 결성)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연대 (6개)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GPPAC Northeast-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in
Northeast-Asia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파트너십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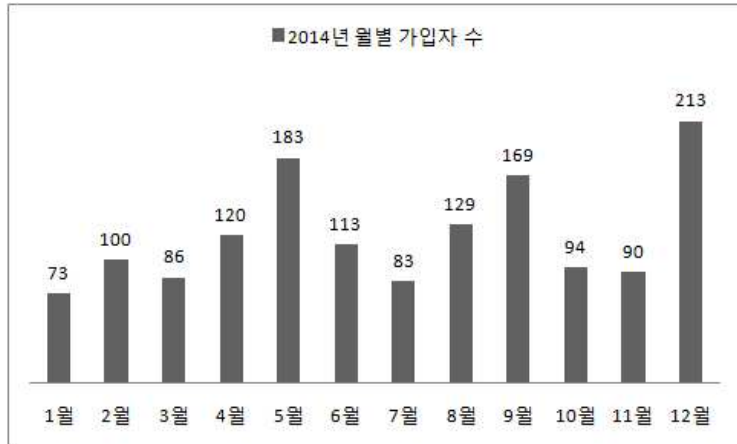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회원현황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시민교육
감시와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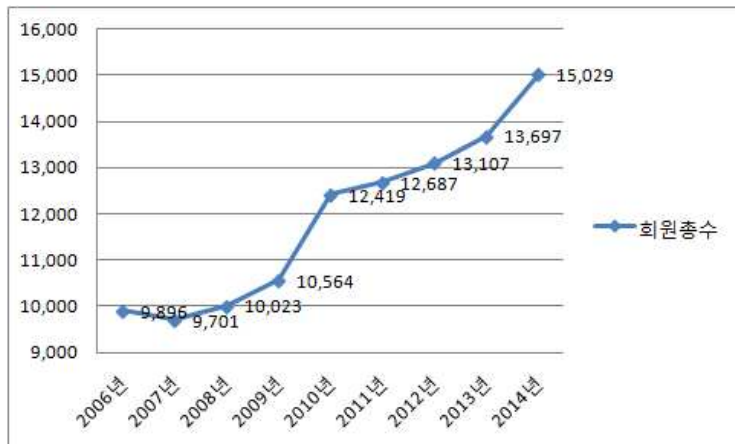
참여연대 2014 기록 · 통계

회원현황 (2014. 12. 31 기준 회원 수 15,0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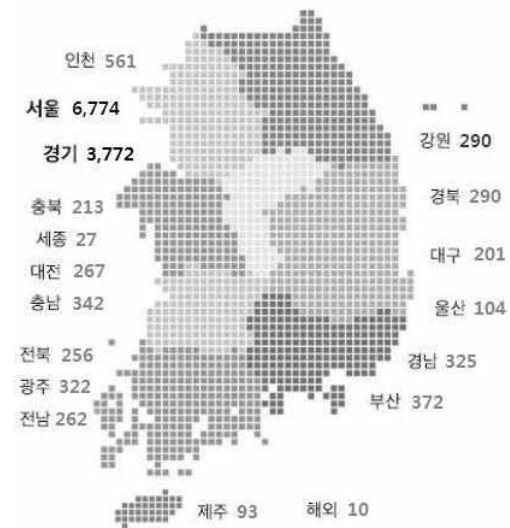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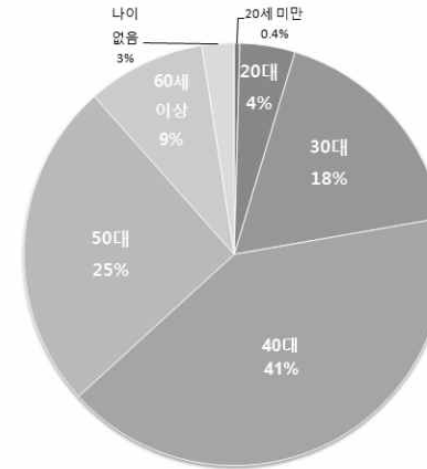
□ 2014년 중 가입 회원 수 : 1,453명



□ 연도별 회원 수 추이



□ 연령·지역별 회원분포 (2014년 말 기준)



※ 회원정보 중 우편물수령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실거주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 회원 행사

총회	1회	3월 제20차 정기총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	1회	1월, 이후 회원월례모임으로 전환
회원월례모임	6회	3월, 4월, 5월, 6월, 9월, 11월
회원캠프	1회	7월 문경새재로 떠나는 참여연대 20주년 회원캠프
오픈하우스 행사	1회	10월 참여연대 20주년 맞이 오픈하우스 3일간
지역회원행사	8회	지역회원 만남의 날 : 3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지역순회강좌 : 7월 8월 11월 청주 창원 울산 전주
송년회	1회	12월 회원송년회



2014년 3월 신입회원한마당(2014.03.28)



경북 문경으로 떠난 20주년 회원캠프(2014.7.19.~20)

□ 청년대학생 프로그램

- 청년행동단 '청연'

2013. 11. 15. ~ 2014. 8. 31.

- 14기 인턴

2014. 7. 1. ~ 8. 14. 총 132시간, 22명 수료

- 청년 공감여행 <불온대장정>

2014. 8. 20. ~ 8. 24. 4박5일 14명 참가

- 청년 행동 인큐베이팅

<스케치북프로젝트 with 20>

2014. 9. 15. ~ 12. 29. 총 100시간 20명 수료

- 인턴, 청년연수 홈커밍데이

2014. 11. 24. 37명 참여

- 15기 인턴

2015. 1. 5. ~ 2. 12. 총 144시간 24명 수료



'청연'이 진행한 남산 안기부터 인권답사 (2014.04.05.)



밀양송전탑 현장을 찾은 불온대장정 (2014.08.20.~24)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테이블토크 행사 2회

-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1회

□ 자원활동 (2014년 자원활동가 총 72명)

-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4회

- 자원활동가데이 행사 1회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조금 특별한 토요일>
(2014.07.27.)

□ 참여연대 방문 프로그램

(2014년 중 방문자 총 802명)

- 초등/중학생 17회
- 고등학생 9회
- 대학(원)생 15회
- 시민단체 활동가 및 일반 7회
- 해외단체 등 15회



2014 자원활동가데이 행사(2014.11.24)



여의도고등학교 NGO동아리 방문(2014.06.18)

□ 전시회 (12회)

- | | |
|-------------|---------------------------------------|
| 3/15 - 3/28 | 아카데미느티나무 소모임 그림자 정기전시회 '새로운 시작전' |
| 4/21 - 4/30 | 이영선 개인전 '선_사이를 잇다' |
| 5/07 - 5/16 | 시민예술가 정지영 개인전 |
| 5/17 - 5/25 | 박아사 자수전 '아사의 꿈지락 이야기와 수다방 친구들' |
| 6/04 - 6/09 | 아카데미느티나무 창작일러스트 4기 종강전시 '우리들의 맛있는 시간' |
| 6/04 - 6/08 | 아카데미느티나무 서울드로잉 7기 종강전시 '그림은 나의 힘' |
| 10/18-10/19 | 참여연대 20년 20장면 사진전 |
| 11/14-11/30 | 옥인동 주민 박민영이 그린 동네 풍경전 '서촌 어슬렁' |

- | | |
|-------------|---|
| 11/24-11/29 | 참여연대 갤러리 느티나무 개관기념 '신나게 첫 걸음전' |
| 11/30-12/06 | 가자로 보내는 선물전 |
| 12/07-12/13 | 아카데미느티나무 서울드로잉 8기 종강전시 '오전 10시' |
| 12/14-12/20 | 아카데미느티나무 창작일러스트 5기 종강전시 '메리 그림마스 (MERRY GRIMMAS)' |

□ 기타

- | | |
|------------|---------------------|
| 04/06 | 2030 칵테일파티 |
| 04/13 | 고 허세욱 회원님 7주기 추모제 |
| 05/11 | 여성마라톤대회 |
| 04/03-5/29 | 목요 바느질모임 |
| 11/17 |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국민간담회 |

시민교육

- 아카데미 느티나무 총 49개 강좌 개설, 수강인원 994명

□ 강좌목록

시기	구분	강좌명	강의 횟수	수강 인원
겨울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근대로의 희망 여정	6	19
	민주주의	김만권의 정치철학 : 자유의 계보학	5	47
	생활문화	나만의 아트북, Sketchbook 만들기	6	16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7기	6	10
봄	민주주의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 고대편 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9	22
	민주주의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8	38
	민주주의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7	22
	민주주의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2기	2	27
	민주주의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워크숍 : 개인연습 심화과정	1	6
	민주주의	윤홍식의 복지국가 독서클럽	7	19
	인문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5	15
	인문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5	29
	인문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 I	10	32
	인문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숍	4	20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8기	6	9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중급반 7기	6	7
	생활문화	임종진 사진수업 7기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12	15
	생활문화	최경실의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5	22
	생활문화	배민정의 창작 일러스트 4기	12	19
	생활문화	서울드로잉 7기	12	21
	굿모닝	우리 안의 신들을 찾아서 - 신화를 따라 떠나는 자아탐색 여행	9	21
	굿모닝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나를 만나다	10	20
여름	민주주의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2	38
	인문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2	43
	인문	축구의 역사, 월드컵의 사회사	2	17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8기	6	5

시기	구분	강좌명	강의 횟수	수강 인원
가을	생활문화	명랑선생의 민화교실	5	11
	민주주의	[오픈행사] 휴먼라이브러리 -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시민	1	38
	민주주의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3기	7	15
	민주주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	6	33
	민주주의	반성된 미래 -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조건	5	11
	민주주의	교육연극 워크숍 <기억을 기억하라 - 기억, 평화, 민주주의>	8	8
	민주주의	에드보커시와 직접행동	7	19
	민주주의	김만권의 독서클럽 -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 1 <정의론>	4	20
	인문	[오픈특강] 정재승의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협동'	1	42
	인문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장자> 읽기	6	27
	인문	교과서 저자와 함께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 II	8	20
	인문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다르게 살자>	4	22
	인문	세상의 모든 협동	7	12
	인문	시각문화로 보는 현대일본	6	11
합계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20기	6	12
	생활문화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중급반 8기	6	7
	생활문화	최경실의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2기	8	13
	생활문화	배민정의 창작 일러스트 5기	12	18
	생활문화	서울드로잉 8기	12	22
	생활문화	임종진의 사진수업 8기	12	12
	굿모닝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나를 만나다	10	20
	굿모닝	우리 안의 여성과 남성을 찾아서	6	27
	굿모닝	창조성 놀이학교 - 내안의 예술가를 찾아서	8	15
	합계		320	994



참여연대 옥상에서 열린 봄학기 중강 파티에 참석한 수강생과 강사들.
(2014.06.26)

감시와 정책제안

□ 활동 통계

구분	내용	활동량*
정책보고서 등	이슈리포트	19
	보고서	6
	의견서/입법건의서 등	28
	분석/해설 자료	44
	자료집/단행본	13
	공개 질의/서한	41
	계	151
토론회	토론회/좌담회/포럼/심포지엄/워크숍 등	128
입법청원/입법발의	입법청원	3
	의견청원	3
	입법발의(의원 공동발의)	13
소송	소계	19
	고소/고발	19
	행정소송	4
	민사소송	3
	공익변론	5
	소계	31
	소계	31
행정처분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등	11
	공정위 신고	8
	민원/진정	6
	소계	25
성명/논평	성명/논평	403
직접행동	집회/시위/촛불문화제 등	94
	1인시위	7
	캠페인·서명운동	63
	항의기자회견	203
	면담방문	3
	소계	370
기자회견	입장발표, 기구발족, 실태 보고 기자회견	80
기획행사	의인상 시상식/평화박람회/영화제 등	34
미디어기획	언론공동기획	155
	인포그래픽	14
	여론조사	3
	칼럼·기고	72
	출연	52
	보도자료	69
	정기간행물(참여사회, 복지동향, 시민과세계)	26
	소계	391
총계		1,632

* 참여연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통계입니다. (시민참여/교육 제외)

□ 보고서

이슈리포트

01/14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04/09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05/27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
05/28	갑을개혁 운동 1년을 평가한다
06/22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07/02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07/06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08/08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08/19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08/21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08/22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08/25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09/18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10/13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의견서
10/15	에스콰이어 사례로 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6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보고서
11/06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11/11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11/26	서울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 발표

정책보고서/자료집

03/07	참여연대 20차 정기총회 자료집
04/01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04/2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09/03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09/11	참여연대 20주년 활동보고서 1994-2014
09/28	참여연대,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11/10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11/25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
12/05	[소책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4
12/15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 입법의견 청원/입법발의/입법의견서

01/20	<입법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02/05	<공동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02/05	<입법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02/10	<입법의견서> 비영리 법인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주선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서
02/17	<입법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02/20	<입법의견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의견서
02/27	<입법청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03/06	<공동발의>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03/06	<공동발의>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03/06	<공동발의>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03/06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05/20	<입법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05/28	<입법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06/09	<입법의견서>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07/09	<입법청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_공동)
07/22	<입법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08/20	<공동발의> 사감위법 일부개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09/24	<공동발의>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10/29	<공동발의>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를 막는 <국민소송법>
11/11	<공동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1/20	<조례청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12/01	<의견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12/04	<입법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12/10	<공동발의>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 법률(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 소송/고발

02/27	[민사소송] 카드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03/04	[고발] 목원대 김원배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03/19	[고발] 론스타 책임 금융관료 6인 형사고발
03/24	[행정소송]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04/17	[고발]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05/15	[고발]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 경찰 지휘관들 고발
06/19	[고발]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고발
06/19	[고발] 서해중합건설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발
06/19	[고발]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고발
06/25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증인채택 관련 형법 위반 고발
06/25	[민사소송] 3차 기성회비반환 소송 제기
06/26	[공익변론]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06/26	[고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07/01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변론
07/03	[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07/08	[공익변론] 세월호 참사 관련 인터뷰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홍모씨 공익변론
07/08	[공익변론] "일베층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한 시민 공익변론
07/08	[행정소송] 박창신신부 인터뷰한 CBS<김현정의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08/20	[고발]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08/25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09/23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09/29	[고발]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10/10	[행정소송]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중단 촉구 집회금지무효 가처분신청
10/13	[고발] 휴대폰 가격 뺑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10/14	[고발] 라웅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10/14	[고발]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10/29	[고발] 마사회장 3차 고발
11/03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11/04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11/05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12/03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12/10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 소송 성과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일부 승소

- 2012.07.0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
- 2013.09.26.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2014.06.05. 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의 주장 받아들여 8개 중 6개 부분공개 결정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4가지 공익소송 승소

- 2014.12.24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글 쓴 대학생, 후보자 비방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에서 이김
- 2015.01.09 세월호 참사 구조방치(소홀) 해경 비난 인터뷰한 홍모씨, 해경 명예훼손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에서 이김
- 2015.01.19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 불법이고,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이끌어냄
- 2015.01.21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현정 뉴스쇼에 대해 내린 제재명령(징계) 취소 1심 판결 이끌어냄(공익법센터 공익변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2013.03.21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
- 2013.06.14 서울중앙지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 2014.09.11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균 부장판사), 국정원법 위반 인정, 선거법 위반 불인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선고
- 2015.02.09 서울고등법원 2심(김상환 부장판사), 국정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인정. 법정구속.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등 위반 고발

- 2014.12.10 조현아 부사장 '땅콩리턴' 사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2014.12.30 검찰 조 전 부사장 구속
- 2015.02.12 1심 법원 조 전 부사장에 항공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 참여연대 활동 관련 소송현황

대한민국 vs. 광우병대책회의 등 손해배상소송 (2심 진행중)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해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대책회의에 소속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대책회의에서 직책을 맡은 박원석, 안진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과>

- 2008년 7월 31일, 원고(대한민국)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 2013년 10월 31일, 원고 패소 1심 판결
- 2013년 11월 19일, 원고 항소
- 2015년 3월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참여연대 vs. 박성현/뉴데일리 손해배상소송 (진행중)

박성현이 뉴데일리 칼럼에서 "참여연대가 재벌기업을 협박하여 아름다운 재단에 천억 원을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제기함

<경과>

- 2012년 8월 16일, 원고(참여연대) 손해배상 소제기
- 2014년 3월 5일, 참여연대 일부승소
- 2014년 3월 20일, 원고, 피고 항소
- 2015년 3월 현재 항소심 진행 중

□ 행정처분/감사청구/공정위 신고 등

01/21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01/22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03/20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03/27	케이티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3차 공정위 신고
04/02	SKT 통신장에 사태 관련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05/14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인 당국과 정부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05/27	SKT와 KT를 알뜰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05/28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06/08	KBS,MBC의 세월호 사건 관련 김홍경씨의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누락에 대한 민원제기
06/17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06/17	동부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06/17	서해중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06/17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06/19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관련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06/25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행위 미래부에 2차 신고
07/02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불공정 행위 신고
07/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07/16	씨앤엠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신고
08/06	씨앤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09/03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09/18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10/27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

11/20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12/04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진정
12/23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단행본/정기간행물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조홍식·장지연 엮음 | 이매진 | 17,000원 | 2014-07-04

감시자를 감시한다

고장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한다

참여연대 기획 | 조대엽·박영선 엮음 | 이매진 | 25,000원 | 2014-09-05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국시민운동 20장면

참여연대 기획 | 차병직 변호사(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지음 | 창비 | 15,000원 | 2014-09-10

반성된 미래

무한 경쟁 시대 이후의 한국사회

참여연대 기획 | 김균 엮음 | 후마니타스 | 20,000원 | 2014-09-15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사회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기획 |
조돈문/이병천/송원근/이창곤 엮음 | 후마니타스 | 35,000원 | 2014-11-03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1997년 체제와 한국 사회의 변화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이병천/신진욱 엮음 | 후마니타스 | 28,000원 | 2014-12-31

참여연대 20년의 기록 (1994-2014)

참여연대 20년 활동 백서
참여연대 기획 |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 엮음 | 참여연대 | 100,000원 |
2014-12-31

참여사회 1월~12월호 참여연대 | the DNC

복지동향 1월~12월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나눔의 집

시민과 세계 제24~25호 참여사회연구소 | 이매진 | 2014-01-24, 2014-08-04

2015년 사업계획

2015년 활동 목표와 8대 방향
11대 중점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주요 연대과제
2015년 일정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15년 활동 목표와 8대 방향

• 중기(2015-16년) 중기활동 목표

- 권력오남용 책임 추궁 활동 강화와 입법·사법·행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및 통제 구조 확대
- 경제민주화와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 활동 내용과 방식의 대중성/현장성 강화와 시민참여 주체 확대
- 참여연대 20주년 비전-중장기 의제와 혁신 방향-의 실천전략 수립과 1단계 이행

• 2015년 포어 :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14년 8대 활동 방향

○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

-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과 수사기관들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유린하고 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시민참여구조 자체가 취약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단지 대통령이나 국회의 다수당을 '더 좋은 인물과 정당'으로 바꾸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됨.
- 참여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권력기구에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 기구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임.

○ 권력 오·남용 책임추궁을 위한 기록기억사업 활성화

- 권력기관과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권력 오용 또는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꾸준한 감시활동을 통한 사례의 기록과 공개는 권력 오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시민들이 잊지 않게 하며, 오랫동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함. 이를 통해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효과를 거두고 직접적인 처벌을 이끌어내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음.

- 그 동안의 권력 오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장하여 그 사례들과 관계자들을 꼼꼼히 기록하여 책임추궁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임.

○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민주화

-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노동자, 중소기업인,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노동이 존중받는, 그래서 일자리 문제·고용 불안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의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자 함.
- 심각한 양극화와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는 필수적임.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노동·민생대책을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민주화, 임금주도형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또 재벌대기업에서 빈발하고 있는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남용, 노동3권 탄압,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의 특혜와 반칙을 바로잡는 활동에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던 정책담론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도, 복지 확대도 모두 폐기하고 역주행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음. 심지어 정권 일각에서는 증세 논쟁을 계기로 복지 축소까지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 사회는 복지의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OECD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 꼴찌라는 지표가 잘 보여주듯이 복지의 축소, 복지의 포기가 심각한 문제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복지국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 특히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재정과 조세 구조가 필요하고, 그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 증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함. 부가증세와 공평과세를 강력히 촉구하자고 함.

○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치 않는 세력의 방해로 특별조사위가 아직도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한 상황임. 특히 세월호 인양조차 미적거리며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활동도 지속해야 함. 특별조사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사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 노력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참사 대응 단위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차원에서 진상규명 활동과 유가족 지원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안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과 시민행동을 전개하고자 함. 세월호 참사 1주기에는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함께 다양한 추모사업도 진행할 예정임.
-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는 시민안전을 우선시 하는 정책기조로 전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음. 이미 사회 곳곳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규제완화 정책과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대응이 필요함.

○ 정전체제 종식과 군사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 강화

- 한반도 동아시아 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군사적 긴장격화와 군비경쟁 등 군사화의 빌미가 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론화와 시민연대의 강화가 필요함.
- 미구에 빠진 한반도 핵갈등 역시 정전체제의 종식 등 적대관계의 청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운동 속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운동을 포함시켜야 함.
- 올해는 해방 70년, 분단 70년, 원폭투하 70년이 되는 해로서 적대적 정전체제의 종식을 촉구하는 국내외 캠페인을 전개하기 좋은 계기라 할 수 있음.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일 군사훈

련과 분한 핵문제 등이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어, 남북한 군사대결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정전체제 종식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일련의 시민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시민행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고자 함. 더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군비확장, 정략적 안보교육, 군인 인권 침해, 불투명한 정책예산의 결정과 집행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고자 함.

○ 시민 참여·교육·문화 다양성 강화

- 참여민주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요구됨. 참여연대는 2015년 시민/회원 사업의 방향으로 시민의 참여 확대,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문화 다양성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함.
- 지난해부터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참여연대 월례 회원모임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음. 참여연대 지역 부문 회원 소모임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원과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회원/시민 참여형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겠음.
-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참여연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할 청년 참여연대 발족하고자 함
- 시민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함
- 2014년 공간개선사업을 통해 개선된 카페 통인, 갤러리 느티나무 등의 참여연대 내부 공간을 이용한 시민문화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강화하겠음.
- 더 많은 회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원 2만명이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4개년 계획의 1차 년도 캠페인도 시작할 예정임.

○ 20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

- 20주년 중장기 의제, 혁신과제 등 논의결과에 대한 조직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각 사업 단위가 이에 기반 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함.
- 의제, 과제별로 해당 사업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되,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의제

(과제)나, 미래 의제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준비하여 이행하도록 함. 활동방식 개선이나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조직운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기획 이전에 연중 집중할 활동방향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부 공유하도록 함. 또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타당성과 정책적 통합성, 업무 조정 여부, 실현가능성, 활동의 효과성, 인력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우며, 이후 실행 여부를 연중으로 관리, 평가하도록 함.

중점과제 1.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 정치개혁 운동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지난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부패 척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비례대표 확대, 국회 개혁 등을 제안하고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음.
- 작년 10/3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올해 국회의원 선거구들의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는 선거구 조정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표)가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다양한 대표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모아지고 있음.
- 지지(표)가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고, 국회가 지역구의 이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다양한 계층 등의 이해와 요구도 제대로 대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선진 의회들처럼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함.
-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의석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더 줄이거나, 캐리맨더링을 통한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정치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조직해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감시와 모니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실행부서

- 의정감시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와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행사 진행

- 타 단체들과 별도의 행사 기획단 구성
- 타운홀 미팅, 토크콘서트, 월드카페 등 지역의 상황과 규모에 맞는 행사 방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기획해 지역 단체(각 부문, 대학생, 노동, 농민 단체 등 포함)에 제안하고, 공동주최로 행사 진행
- 토론행사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로비 활동 진행

2.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관련 활동과 정보가 집적되는 온라인 공간 마련

- 지역별 행사 홍보 및 후기, 정치개혁 관련 시민 제안, 각종 정책 소개자료, 국회(국회의원) 논의에 대한 평가 자료 등을 집적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

3.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하는 국회 상대 입법로비

-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정리 및 발표, 각 정당 지도부와 정치개혁특위 위원 면담 등
- 정치개혁특위 회의 방청 및 모니터 자료 발표,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발언을 기록해 인터넷과 SNS로 공개, 네티즌 항의행동 제안 등

중점과제 2. 부패·권력남용 사례 기록과 기억사업 확대

• 사업배경

- 부정부패를 비롯해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였으나, 국민적 비판과 여론의 관심을 피하고 그 잘못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추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감시활동의 꾸준함과 지속성, 사례의 기록과 공개는 권력 오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시민들이 잊지 않게 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함. 이를 통해 그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효과를 거두고 직접적인 처벌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실행부서

- 시민감시1팀, 2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사건 등 관련자 명단 기록 웹사이트 운영

-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 개설팀
- 아래(예시)와 같은 다양한 기록 사이트를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함
 -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퇴행적인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그 판결 그 판사’ 사이트
 - △ 시민적 지탄을 받은 언행을 한 국회의원 등을 기록한 ‘우리는 기억한다. 당신의 말과 행동을(가칭)’ 사이트
 - △ 대법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임명(지명)된 사람들을 기록한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가칭)’ 사이트
 - △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들을 기록한 사이트 기획 및 운영
 - △ 국가재정을 낭비한 관료와 책임자들(예. 자원외교 사건, 4대강 사업 등)을 기록한 사이트 등

2 권력남용 사건 팩트북

- 의혹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간첩조작 사건 등을 다룬 실록(팩트북 Fact Book) 발간

중점과제 3. MB 자원외교 총체적 부실과 세금낭비 문제 대응

• 사업배경

- 무려 수십 조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기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자원외교 세금 낭비는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 개혁 차원에서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세금 낭비로 국민들의 조세·재정 불신과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측면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임. 또한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MB 정책실패 책임에 대한 청산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실행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행정감시센터, MB자원외교 이슈 대응 TF(내부/연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MB 해외자원개발 사기 의혹 및 세금 낭비 적극 대응

- 상반기 자원외교 문제 국정조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대응 :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조사 대응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활동 병행
-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반드시 MB와 최고 책임자들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활동
-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에 이어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추진

2. 국민소송법 제정 운동과 공기업 운영구조 개선

-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세금 낭비에 대한 사전, 사후적 대응이 가능한 국민소송법 제정 운동 전개(현재 국회에 시민사회 청원안, 야당 발의안 제출됨)
-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공기업 운영시스템 및 지배구조의 개선·개혁 위한 법제도적 정비 추진

3. MB자원외교 등 정책실패 책임을 묻기 위한 사회적 연대 확대

- 자원외교, 4대강 죽이기 및 녹색성장 세금 낭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대응과 연대 기획

중점과제 4.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운동

• 사업배경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를 시정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기반한 조세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임.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한편, 시민에 의한 재정지출 감시와 조정 요구도 강화해야 함.

• 실행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사회복지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복지와 조세정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연속 토론회 개최
- 법인세 정상화, 부의 대물림 차단, 자본이득 과세에 관한 공론화
- 지방세제, 재정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및 사회적 논의 주도

2. 시민에 의한 재정지출의 감시와 조정 기능 강화

- 전문성과 활동력을 강화한 예산감시 네트워크 활동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인 제3회 예산 만민공동회 개최

3. 복지를 위한 예산 및 재정운동

- 보건복지 분야 예산분석보고서 등 복지를 위한 예산 및 재정운동

중점과제 5. 삼성 등 재벌·대기업 특혜와 특권 바로잡기

• 사업배경

- 주요 재벌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완성단계에 있으며, 2015년에는 삼성의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완성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일가에 의한 탈세·배임·횡령 등 불법이 끊이지 않았는데 시민사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3세 승계를 그대로 사실상 '승인'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어 비판적 문제제기 자체가 의미가 있음
- 정치·관료·사법·언론과의 유착에 의한 재벌그룹의 법·제도상의 특혜, 특히 삼성이 누리는 특혜는 여전히 커서 삼성 특혜로 왜곡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작업 필요
- 지배구조 & 삼성 특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삼성그룹 안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과 비판 역시 중요한 과제

• 실행부서

- 경제금융센터 & 노동사회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보험업법 개정안 상임위 논의 모니터링

- 계열사 지분한도 정상화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 특혜 감독규정)
- 유배당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 보험업법 개정안

2.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는 법률 제·개정안 발의

- 이학수 특별법(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논의 주도
-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공익재단의 지배구조 악용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3. 삼성 종합보고서 제작과 배포

- 내용 : 유착에 의한 특혜를 통해 법·제도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 유린해온 삼성의 역사에 대한 종합 보고서

- 이해도 :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 형식 : 주요 주제별 내용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해, 오프라인 팸플릿 형태로 배포

4. 이슈리포트 & 토론회 등

- 자사주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슈리포트 작성
- 삼성 문제 종합 토론회 추진

5. 삼성 노동인권 연대사업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와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연대 활동
- 노조파괴 전략에 대한 국제연대 활동

중점과제 6. 비정규직 문제 대안 마련과 사회적 연대 강화

• 사업배경

-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노동시장 급변으로, 단일한 관점의 해석과 대안으로는 노동문제의 해결이 난망한 상황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제조업계의 문제로 상징되었던 불법파견 문제는 유통·서비스업계를 거쳐 전 산업으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특수고용 등으로 변형되어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짐.
- 이 과정에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특히,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미조직 정규직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기존 노동조합은 물론,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실행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대응과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연대 확대

-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대한 반박논리 마련과 확산 사업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과 담론 확산을 위한 노동자와의 사회적 연대사업 강화

2. 비정규직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모니터링

-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태 모니터링
- 비정규직 다수 활용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근로감독 요구 활동 전개

중점과제 7. 통신·영화 분야 등에서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생활 속의 시민권리 실현도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취지에서 꾸준히 시민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해 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해 고발, 소송, 신고,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옴.
- 특히, 통신과 영화 등 영역은 재벌·대기업의 독과점과 담합 체제로 시민들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통신·영화 분야 등에서 시민·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작지만 소중한 권리-소소권’ 캠페인을 2014년도에(20회까지 연재 기사 나감) 이어 2015년에도 진행하고 시민·소비자들의 권리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다방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임.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통신·영화 분야 등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 경향신문과 ‘소소권’ 공동기획 캠페인 지속 진행(2014~2015년)
- “영화관 확 바꾸자” 영화관 개선 캠페인 및 영화관 불공정 문제 공정위 신고 등
- 단통법 이슈 대응, 단말기 가격 거품 및 통신비 폭리 제거 시민행동 전개
- 재벌 통신 3사의 횡포와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대응, 관련 공익소송 수행
- 재벌·대기업의 담합 및 폭리,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시민권리 침해 문제 적극 대응

2.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캠페인

- 통신·영화 분야에서의 시민권리를 찾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 국내외 부당한 가격 차이·차별에 대한 대응 강화 및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주체인 ‘소비자’ 주권 강화 및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중점과제 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과 시민안전 정책 대응

• 사업배경

-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제정운동을 진행함.
-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2월 발족하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안전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임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모니터링

-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 국민대책회의 차원에서 진행
- 진상규명, 인양 방해 및 반대세력에 대한 대응

2.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및 관련 연대기구 활동 지원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활동 지원
- 새로 구성될 ‘416 국민연대’ 지원 사업
- 유가족과 함께하는 416 1주기 추모사업

3. ‘안전사회’ 담론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

- 안전사회 담론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토론회, 이슈페이퍼, 언론기획) 진행
- 안전사회와 416 1주기 관련 언론기획(연속기고) 추진
- ‘416인권선언운동’ 지원(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
- 안전사회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중점과제 9. 해방과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캠페인 (End the Korean War Campaign)

• 사업배경

- 한반도 정전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주변국의 패권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실험과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올해는 해방·분단 70년,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투하 70년이 되는 해. 더 이상 대결과 갈등, 핵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시민 대안의 하나로 2015 NPT 검토회의(4월 말), 6.15 남북선언, 8.15 광복절 등을 계기 삼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비핵지대 논의를 보다 본격적으로 국내외에 알리고 한미일 정부의 공격적인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조직해 나가고자 함.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수립 촉구하는 시민주체 조직

- “전쟁종식”, “군축으로 복지와 빈곤퇴치 실현” 주제로 시민사회 포괄적인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진행(4월)
- “Cross the Wall, End the Korean War” 미,중,남,북을 넘나드는 시민들의 평화행진 랠리 조직 및 연대(5~8월)
-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을 촉구하는 한미일 온오프라인 공동 캠페인
- 청소년, 청년과 함께 하는 한반도·동북아 평화기행 및 직접행동

2. 정부 및 국회 내 평화체제와 동북아비핵지대 의제화

- PNND(핵비확산과군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 통해 국회 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과 “핵군축”에 대한 국제사회 이슈 의제화, 핵군축전시회
- 해방·분단70년, 원폭투하 70년을 즈음한 한일 의원간 동북아 평화 공동성명과 교류

- 핵무기금지조약 등 주요 핵군축 의제에 대한 정부 입장 전환 촉구

3. 동북아비핵지대와 평화체제 콘텐츠 제작 및 국내외 공론화

- 'End the Korean War', '핵무기 반대' 등 1인 평화 캠페인 키트 제작
- 평화체제 및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NPT 검토회의 시민사회 포럼 개최
- 해방·분단 70년, 원폭투하 70년 의제에 대한 시리즈 언론기고
-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 성명 및 결의안 등 아카이브 구성

4. 분단체제 고착시키는 동북아 재무장과 군비경쟁 반대 운동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관련 국회와 협력하여 문제점 제기
- 한미일 약정 밀실 추진의 문제점 알리는 인포그래픽 등 공론화 위한 자료 생산
- 한미의 대북 공격적 킬체인 전략의 문제점 제기하는 이슈리포트 발간

중점과제 10.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1/4)

• 사업배경

- 2011년 중기과제로 2014년 말까지 회원 15,000명을 만드는 발전과제를 설정하였고, 달성하였음. 그러나 현재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보류 회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언론 환경 악화 및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참여연대 지지층을 넓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임.
- 2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재정자립을 넘어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을 앞당길 것을 결의함. 최근 3년간 회원가입을 보면 2012년 875명(순증 420명), 2013년 886명(순증 590명), 2014년 1,458명(순증 1,240명)이었음. 2018년까지 회원 2만명, 예산기준 100% 회비에 의한 자립으로 확대하는 장기 목표를 두려고 함. 올해는 4개년 계획의 1차 연도임.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주관, 참여연대 전체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미디어 활용의 개선

- 시민참여팀과 미디어홍보팀, '온라인 시민 공감 극대화를 통한 회원확대' 캠페인
-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한 홍보 및 회원확대를 적극화
- 최근 주된 회원가입 경로로 확인되고 있는 팟캐스트 등을 이용한 회원확대 캠페인
- 각종 교환광고 확대

2. 대면접촉 강화

- 회원, 상근자, 임원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회원확대 매뉴얼' 마련 및 실천독려
- 청년층, 주부층,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참여 캠페인 진행
- 아카데미, 카페 등 시민참여문화 공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확대
- 노조, 생협, 기타 풀뿌리 공동체 등과의 공동교육, 홍보, 회원가입 권유 사업 확대

중점과제 11.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 활동 개시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운동은 물론 청년실업·청년복지·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섰음. 또한 2006년부터는 청년연수·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양성하였음. 그러나 청년세대의 삶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들의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청년세대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꾸는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주년 정기총회에서 청년참여 활동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승인 받았음. 올해 청년/캠퍼스 문제 및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청년 대변자 그룹인 '청년 참여연대'를 발족하여 본 제도에 올리고자 함.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1단계 : 청년 참여연대 기획단

- 참여연대 청년회원, 임원, 상근자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연대 기획단 구성
- <청년 참여연대>의 비전과 목표, 활동 전략, 중심 기획, 교육훈련체계 대강을 마련

2. 2단계 : 청년 참여연대 준비위원회

- 청년주체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으로 확대재편
- 창립 비전 구체화, 회원 모집, 조직구성, 실행기구별 계획 수립, 홍보활동 등 실행 추진한 후 창립총회 개최

3. 3단계 : 활동개시

- 청년 문제, 학내 문제, 기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독자 혹은 연대 활동
-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예비활동가 훈련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국민의 지지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개혁
-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니터 강화
- 정치개혁과 의정감시 활동에 시민 참여 및 행동 프로그램 강화

• 2015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비례대표 확대 등 범시민 정치개혁 운동> 실행

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국회 의정 평가 자료 제작

- 복지확대와 세제개편, 안전 대책,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등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큰 사회 이슈에 대한 국회 활동(법안발의, 상임위 심사, 표결 등) 평가 자료 발간
- 참여형 의정 평가를 위해 평가 주제 선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방법, 국회의원, 기자, 보좌진의 평가를 병행하는 방법 등 시도
- 정책에 대한 소신, 자질, 행정부 견제 기구로서의 태도, 이해집단 대변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국회의원 평가 명단 발표
- 연간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디딤돌, 걸림)법안 표결 분석 및 평가 자료 발간
- 각종 평가 자료는 인포그래픽 등으로 재구성하여 공유, 홍보

3. 열린 국회를 위한 시민 행동 지속

- 2014년에 이어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프로젝트 지속, 방청 제도 개선을 위한 압박 행동 병행

4. '지역 정당을 허하라' 프로젝트 시작

-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중 지역단체와 풀뿌리 단체, 소수정당들과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 사법감시 활동의 시민참여 수단 개발
- 법원, 검찰 인사 개혁 방안 공론화
- 사법부 구성과 감시의 시민참여 강화

• 2015년 주요 과제

1.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감시 활동 강화

- 지난 10년간 진행한 판결비평 칼럼 모음집 출판
- 판결비평 필진 확대, 홍보채널 다양화
- 일반 시민 대상의 판결 독후감 사업, 판결문 읽기모임 등 법원 판결과 현재 결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 시도
- 고위법관 인사 시 활용하기 위한 '주요 판결' 담당 판사 모니터 자료실 구축 시작

2.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활동 지속

-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발간, 평가 토론회 개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제한 등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촉구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모니터 사업 기획

3.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의제화

-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 문서와 소책자 제작
- 대중용 홍보 설명 콘텐츠를 자료집, 팸플렛, 슬라이드 뉴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
- 회원, 지역 및 유관 단체, 국회 법사위원, 언론인, 대학생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설명회, 강연회, 논쟁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장 적극 기획

5. 국회의원과 국회 모니터링 사이트 개선 및 활성화

- 의정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 디자인 개선 및 모니터 정보의 효율적 전달
-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국회의원 명단 제작 등 의원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기록 및 기억 활동 활성화

6. 개헌 논의에 대한 대응

- 정치권이 논의하는 개헌의 방향 중 문제되는 부분을 반대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꼼꼼히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권력감시
-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구조개혁
- 권력유착과 특혜,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 줄이기

• 2015년 주요 과제

1. 부정부패, 권력 오남용 사건 관련자 기록 웹사이트 또는 실록(Fact Book) 제작

-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부적격 고위공직자 인선 사례, 회전문 인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공직자 취업 사례 등을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함
- 국가정보원/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팩트북(Fact Book) 제작 : 공소장, 판결문 및 구체적 자료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의혹을 구분하여 기록한 책자 형태로 발간
- 자원외교 등 부당한 정책집행 책임자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발행

2. 정부 소속 위원회 등에 대한 감시와 민주적 개혁

-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속해있으면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의사결정기구 중 각종 위원회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감시 및 개혁
- : 위원회 구성 방법, 의사결정과정 공개수준, 시민참여 기회 등 민주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3.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제정 이후 개악 반대 국회 입법로비, 시행령 제정 과정 모니터 및 시민사회 의견 제시
-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관련 부당한 비공개 처분 줄이기 운동
- : 비공개 처분에 대한 기획소송, 문제사례 모음, 국내외의 모범사례와 대조 등

4. 법관 인사의 개혁 방안 공론화, 시민행동 추진

-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혁 촉구
-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한 시민 기준 마련, 후보자 스스로 시민 기준에 부합하는지 밝히도록 하는 캠페인 진행

5. 기록과 공유를 위한 자료 구축

- <그 사건 그 검사 DB>, <그 사건 그 판사> 등 DB사이트 기획
- 검사장 직선제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소개 및 캠페인 페이지 추진

6. 교육 사업 진행

- 소장학자,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사법개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개혁방안 등 특혜와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검토

4. 공직자의 퇴직 후 부적절한 민간기관 취업 감시

- 참여연대가 그간 발간했던 <퇴직 후 취업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종합자료실 구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후 취업허용 사례 중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사례 시민 선정 캠페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회 보좌관, 법원 공무원 등 부적절한 퇴직 후 취업사례 모니터링 범위 확대시도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 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향상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늘이기
-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2015년 주요 과제

1. <맑고 안전한 대한민국-공익제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캠페인

- “(가칭) 맑고 안전한 대한민국 -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캠페인 :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를 위해 공익제보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시민캠페인 진행
- 제 2회 길거리 전시회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등 추진

2.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촉구, 공익제보지원조례 지역 확산운동
-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공익제보 신고접수 및 처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최(요구)

3. 시민참여형 지원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 활동 유지 및 다양화

-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민참여형 지원캠페인(시민응원메시지, 시민탄원서, 불이익조치 중단 시민요구서 발송 등)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심리치유(상담) 및 인문교양 또는 취미 강좌 지원사업 진행

4.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익제보(자) 관련 정보제공

- 공익제보가 밝힌 진실, 공익제보가 보호한 공익 사례,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들 등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여러 형태의 자료(동영상, 소책자, 리플렛, 웹사이트 게시물 등)와 국내외 공익제보 관련 정보 수집 및 시민 공유

5. 제6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공익법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공익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집행과 제도를 개선함
- 표현의 자유 외 공익소송 대상 사건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힘

• 2015년 주요 과제

1.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는 공익소송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년까지 종결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 침해관련 사건 공익변론 계속 진행
- 부당한 명예훼손죄 고소 및 기소, 모욕죄 고소 및 기소, 방충심의제를 이용한 언론 보도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 사건 등 공익변론 대상 사건 발굴
-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용도로 쓰이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 공론화

2.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사건 범위 확대

- 공정거래, 소비자권리, 아동/청소년, 사법접근성(고액 인지대 등) 분야 등에서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사건을 발굴해, 공익소송 대상 범위를 넓혀감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통신·영화 분야 시민권리 찾기 캠페인 집중 전개
- 생활밀착형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및 시민·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 중소기업, 소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적극 대응
-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주거 세입자, 상가세입자 보호 운동 적극 수행
-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운동 지속

• 2015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통신·영화 분야 등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2. 주거·상가 세입자 보호 운동 및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대응

-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세입자 단체와 연대 확대
- 상가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세입자 단체와 연대 확대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감시·대응
-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 대응 및 보고서 발행
-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

3.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 복합쇼핑몰 등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실태 보고서 발행 및 유통대기업 규제 방안 연구·추진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처분 관련 판결 대응 및 유통법·상생법 개정 운동
-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보고서 발행
- 중소기업, 소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대응 활동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 대리점보호법 등 입법 촉구 활동

4.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고등교육 이슈 대응

- 등록금 인하 운동 백서 제작

- 국가장학금 개선·개혁 및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 지속
- 국공립대 기성회비 환불 소송 상고심 대응 및 기성회비 문제 해결 촉구
- 대입 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 촉구 활동
- 등록금심의위원회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 상지대·수원대 등 사학비리 추방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에 대한 적극 대응
- 정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 개혁 강행에 대한 대응

5. 민생침해 및 생활안전 이슈 대응

-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운동과 주거환경·교육환경 침해 대응
- 친환경 무상급식·안전급식 후퇴 반대, 온전한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
- 통신·대중교통(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6. 출판 사업

- '세상을 바꾼 (민생)공익소송이야기(가)', 민생희망운동의 역사 출판

경제금융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금융거시 건전성 요인(가계부채, 감독체계, 금산분리 등)에 대한 개입 확대
- 감독당국(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등)에 대한 권력감시의 기틀 마련
-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 정책의 쉼크탱크 역할

• 2015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삼성 등 재벌·대기업 특혜와 반칙 근절> 실행

2. 채무회생제도의 개혁 등 가계부채 정책대안의 제출과 감시

- 가계부채 3법(대부업법, 채무자회생법, 과잉대출규제법)의 추가 개혁 관철
- 금융위 주도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저지와 대안 제시
- 롤링 주빌리운동 연대사업 참여

3.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감시 및 비판 활동(모피아 금융소비자보호 실패의 역사 인포그래픽 보고서)
-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문제 사례집 발표, 금융소비자 민원처리의 개혁
- 개별 금융피해사례 이슈화와 제도개혁안 제시(ex, 2014년 에스콰이어 협력업체 외담 대 피해 사례 관여 등)
- 핀테크 감시 논평 및 토론회 개최
- 금융사기 관련 피해자-금융회사 사이의 책임 배분 기준에 관한 대안 관철

4. 금융권력 감시

- 김승유·라응찬 고발건 처리 감시 활동

5.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 외환-하나은행 합병 과정 모니터링과 비판

- ISD 정부대응 비판과 감시
- 주주대표소송의 성공적 수행

6. 경제민주화운동

- 청년단위, 비정규노동 단위 대표성 보강해 정치권과 '경제민주화 재추진 선언' 추진
-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와 자료집 발표 (분기별 1회 총 4회, 연말에 보고서 발행)
- 규제완화 대응 사업(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추진 Worst 7 발표 + 행정규제기본법 발의 등)
- 공정위 행정개혁운동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감시 기틀 마련
- 비정규직,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 2015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과 사회적 연대 확대> 실행

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평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3.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처리 과정과 기금운영 실태 모니터링
- 「두루누리지원사업」 등 사회보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마련

4. 공공부문 비정규직

- 서울특별시 등 「생활임금」 운영실태 모니터링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요구 활동 전개

5. 현안대응 및 연대사업

- 현안이 되는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 및 관련 연대사업 추진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모두를 위한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 공적연금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정부, 국회 등 보건복지정책/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 월간 복지동향의 개편 및 복지운동의 대중화

• 2015년 주요 과제

1. 중점과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제시> 실행
2.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 좋은 돌봄에 대한 논의 및 대안 모색
 -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캠페인
3. 공적연금 강화 활동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및 캠페인
4. 복지동향 개편 및 복지운동의 대중화
 - 복지동향 200호 맞이 개편 및 활성화
 -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 활동 정리
 - 복지운동 대중화를 위한 활동
5. 보건의료정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감시활동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
 - 개별급여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세재정체계 재정립
-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국민소송법 입법화 및 예·결산 감시운동
-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세재정 운동의 연구 및 확대

• 2015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MB자원외교에 대한 대응> 실행
2. 중점과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제시> 실행
3.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활동
 - 법인세 인상 및 종교인 과세 등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활동 및 캠페인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 마련
-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 시민이 주도하는 국방정책 감시운동의 전형 마련
- 정부, 국회 등 외교국방정책 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강화

• 2015년 주요 과제

1.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 군관사 및 진입도로 건설 저지 운동
- 제주 평화의 섬 지정 10주년 대응 활동 (1~3월)
- 강정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10년 활동 백서 (11월)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온오프라인 홍보와 모금
-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분석 이슈리포트 발간

2. 국방정책 감시를 위한 시민주체 조직

- 안보교육, 군 인권, 예산 낭비 무기도입 사업 등 문제의식 공유하는 '국방정책감시단' 아카데미 강좌 개설
- 정훈교육, 군인권문제, 방산비리, 군피아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감시단과 국회 국방위 방청단 등 조직
- 시민이 작성하는 국방정책 투명성 보고서 발행

3. 파병정책 감시와 성과 평가

- 국군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저지 활동 및 후속 대응
- 파병현황 모니터 및 파병 평가체계 점검, 정부합동 성과평가단 활동 감시

4. 북한인권에 대한 대안적 시각 제시

- 남북인권협력법안 작성 및 입법운동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한국사무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대안적 입장 전달
- GPPAC 등과 같은 남북 민간채널을 통한 남북 사법대화 제안

5. 동북아 평화교육운동 프로젝트

-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평화와 통일, 핵무기, 인권, 군사주의 문화 등을 주요 주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모듈화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시도, 교육 확산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사회 의견 반영
- 아시아 연대를 통한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 개선
- 유엔 애드보커시를 통한 국내 인권실태 개선

• 2015년 주요 과제

1.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 ODA 선진화방안(5개년 계획), 중점협력국 등 지난 중기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제언
- 자원의외국 국정조사에서 ODA를 자원의외국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감시
- 기획재정부 발의 개발금융 관련 법안 공론화, 이슈리포트 발행
- 군축을 통한 개발재원 확대 논의 공론화, 원조의 군사화 관련 필리핀 파병 평가
- '지속가능개발계획(SDGs)' 논의 모니터링 및 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연대
- 국내 국제개발협력 교육 실태 모니터링 및 대안적 교육 방안 마련

2. 연대를 통한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 개선

- 아시아 칼럼 정례 발행
- 이야기마당 Come and Talk를 통한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논의 확산
- 선거감시단 교육 및 조직 후 아시아 선거감시 참여 (11월 버마 총선)
- 2015년 말 출범하는 아세안 공동체 대응 활동

3. 유엔 애드보커시를 통한 국내 인권실태 개선

-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리포트 작성
-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모니터링 및 표결 모니터링
- 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권고안 이행여부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보고서 발행
-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비공식 방문 추진
- 유엔 모니터링 청년 감시단 조직

아카데미스티나무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스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아카데미스티나무의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2015년 주요 과제

1. 4개 시즌별 강좌 진행

- 겨울, 봄, 여름, 가을학기 강좌의 안정적 진행

2.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

- 교육의 가치, 목표, 내용, 방법이 통일된 시민교육 발전
- 은퇴자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도
- 새로운 형식의 교육과 모임 촉진 (독서클럽, 글쓰기, 워크숍 등)
- 시민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시도 확대 (연극, 미술, 춤, 음악 등)
- 시민교육 플랫폼 시도 모색

3. '민주주의학교' 발전과 체계화

- 민주주의학교 활동가교육(ToT : Training of Trainers)의 발전과 체계화
- 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모색

4.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삶과 삶, 행동과 놀이, 만남이 함께하는 배움의 문화 형성
-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확대
- 강사진의 교육발전을 위한 대화와 배움의 기회 만들기

5.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시민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연구, 내부 세미나 진행.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연구 역량 강화, 연구소 운영체계 개편 통한 연구소 활동 활성화
- 연구소 발간물 정비와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획 시도

• 2015년 주요 과제

1. 연구 활동 및 신진 연구자 충원 통한 연구 역량 강화

-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연구 지속
 - : 분야별 연속 세미나 개최 및 워크숍 개최
 - : 연구 성과를 담은 학술심포지엄 개최 및 단행본 출판 기획
- 평화복지국가 연구 이외 새로운 연구 과제 모색
- 신진 연구자 충원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2. 연구소 운영 체계 개편

- 상반기 중 법인 해소 업무 완료
- 이사회, 총회 등 법인 해소에 따른 운영체계 정비
- 주요 의제나 현안에 대한 토론, 대담, 강좌 기획 등 연구소 활동 활성화

3. 《시민과 세계》 개편

4. ‘시민정치시평’의 안정적 발행과 새로운 형식 시도

- 새로운 관점 제시와 이슈 발굴의 창구로 ‘시민정치시평’ 주 1회 안정적 발행 지속
- 분야와 세대 등을 고려한 필진 재구성, 리뷰 위원회 활성화
- 새로운 형식의 시민정치시평 시도

시민참여분야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소속감 고취
-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유도
-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 사업 확대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2015년 주요 과제

1. 회원들과 소통 및 만남 확대

- 회원 정체성 및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회원 수칙 등을 마련
- 회원행사에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회원월례모임을 보완하고, 지역별 회원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회원들과의 면대면 소통 확대

2. 회원, 시민교육 확대

-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회원교육 확대
- 참여 욕구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 각 센터활동과 연계한 자원활동 프로그램 마련
- 수도권 외 지역 회원들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시도

3. 청소년 사업

-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모듈 개발 및 체계화
- 청소년용 방문 프로그램 정비
- 청소년을 위한 방중 프로그램 진행

4. 공간을 통한 문화사업

- 지하 1층 갤러리 느티나무 및 카페통인에서 전시 및 다양한 문화 행사 진행
- 서촌의 플랫폼을 위한 초기 사업 구축 (서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정책기획분야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활동방식 혁신을 위한 논의와 연구
- 참여연대 목표관리와 평가 강화
- 정책기획 기본사업 강화
- 참여연대의 의제 통합성 제고와 새로운 의제 발굴을 위한 참여연대포럼 운영
-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2015년 주요 과제

1. 참여연대 활동방식 혁신을 위한 논의와 연구, 시범 실시

- 1월 활동방식 혁신 사무처 집중논의 진행
- 추가연구를 통한 활동방식혁신보고서 발간(1분기 내)
- 활동방식 사례 발표회 정례화(분기 1회)
- 활동방식 개선 및 혁신안 적용 및 시범 실시

2. 참여연대 목표관리와 평가 강화

- 참여연대 목표관리를 위한 분기별 사업 평가
- 목표관리를 위한 참여연대 활동의 주기적 정량 정성 평가 시도

3. 정책기획 기본 사업 강화

- 정책기본문서 보완 및 관리
- 입법, 소송 자료실 정기적 업데이트와 관리
- 참여연대 차원의 정책기획 사업 및 연대사업 지원
- 500인 회원모니터단 운영 및 정기 설문조사
- 참여연대 전체 차원의 정책 조정을 위한 내부 모니터 강화

4. 참여사회 포럼 운영

- 참여사회 포럼 정례화(월 1회)
- 참여사회 포럼 결과물의 공유와 확산

5.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연간 상근자 교육 기획의 충실한 준비
- 참여연대 비전과 목표에 대한 상근자 공유/소통 강화
- 실무능력을 높이는 직무교육 및 교양교육의 주기적 진행

참여연대 국제연대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글로벌 참여연대를 위해 국경을 넘은 시민사회운동 본격화
- 참여연대 내부 국제연대 역량 강화

• 2015년 주요 과제

1. 각 활동기구별 국제연대 목표 구체화

- 각 활동기구별 국제연대 목표를 구체화하고 매뉴얼 공유 및 유엔 매커니즘 교육
- 각 활동기구별 국제연대 담당자 정기 모임 개최 및 지식 나눔

2. 참여연대 영문 자료 제작 및 관리

- 각 활동기구의 영문명 점검 및 브로셔 내용 재구성 기획 및 제작
- 참여연대 활동 소개하는 기사, 논문 등 영·일어 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구축
- 참여연대 영·일어 웹사이트 개편

3. 해외 출장 경험 공유와 확산

- 교육과 포럼 등 해외 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공유 및 참여 독려
- 출장보고서 외에 출장 후 활동경험을 나누는 토크쇼 개최
- 해외출장 매뉴얼, 출장 키트 마련 등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알기쉬운 참여연대 : 단체/사업/활동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
- 유통하는 참여연대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폭넓게 콘텐츠 유통
- 소통하는 참여연대 : 홈페이지, 뉴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시민참여, 소통을 지향

• 2015년 주요 과제

1. 시민에게 친근하고 알기쉽게 참여연대 이미지 홍보

- 단체PR : 참여연대 가치를 담은 2015년 슬로건에 대한 캠페인/광고 진행
- 혁신된 활동방식에 따른 사업 부서의 콘텐츠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가공 (인포그래픽, 영상, 오디오, 팩트시트 등)
- 성과 알리기 : 사업 홍보를 위한 종합 페이지 활성화, 주기별(월/분기) 중요 사업 및 성과 알리기, 콘텐츠 큐레이션 방식으로 100선/월간참여사회 등 콘텐츠 개발
- 상근자에게 홍보 관련 정보제공 및 매뉴얼 교육 강화 : 미디어 활용 방법, 다양한 홍보 방법을 내부적으로 적극 공유 및 교육 [홍보알리미 서비스/웹포스팅 매뉴얼]

2.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참여연대

- 활동 대상(언론/시민/전문가/입법행정기관 등)에 따른 다양한 유통 채널 확대
- 웹마케팅 통합 전략 마련 :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모바일 커뮤니티, 메신저,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뉴스레터, 이메일 등 효율적인 관리

3.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연대

- 홈페이지/모바일 개편 : 아카이브 역할에 충실, 메인페이지는 이미지 전면 배치, 시민의 참여/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 담당자를 배치하여 에디팅 권한 강화
- 팔로워 10만 만들기 : SNS 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전담관리자(매니저) 배치, 트위터/페이스북에 맞는 활용안 마련, 페이스북 페이지 전환
- 시민/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참여연대 팟캐스트를 제작하여 시민단체의 뉴미디어 채널로 위상 확립

운영기획분야

• 중기(2015-2016) 목표와 방향

- 소통방식 다양화를 통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 집행위원회 정례화 및 사무처와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통합성 제고
- 전현직 임원과 전현직 활동가의 네트워크 강화
- 평생회원, 보류회원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
- 회원 데이터베이스(이하 DB) 온오프라인 자료 정비

• 2015년 주요 과제

1. 소통방식 다양화를 통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 이슈리포트 등 주요 발간물 이메일 배송
- 정기회의 사이, 분과별 자체 모임 시도
- 사업계획 등 주요사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공청회 개최
- SNS를 통한 운영위원간 소통 확대
- 전현직 운영위원간 친목모임 시도

2. 집행위원회 정례화 및 사무처와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통합성 제고

- 분기별 집행위원회 정례화
- 분야별 정책통합성 강화를 위한 집행소위 시도
- 상임집행위원회에 간사 참여 활성화
- 집행위원회, 사무처 합동회의 개최

3. 전현직 임원 전현직 활동가의 네트워크 강화

- 연 1회 친목을 위한 정기행사 개최 (산행, 체육대회 등)
- SNS 또는 이메일을 통한 소통 강화

4. 평생회원, 보류회원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

- 회원 제도 평가 및 개선안 마련
- 회원 제도 내실화를 위한 3개 년 단계별 계획수립

5. 회원 데이터베이스(이하 DB) 온오프라인 자료 정비

- 역대 회원가입서 정리를 통한 온오프 데이터 정렬
- 중복데이터 정리 등 회원데이터 정선
- DB 관리 안정화를 위한 자원활동가 교육 강화

2015년 주요 연대 과제

1. 정치개혁/개헌 대응을 위한 연대
2. MB자원외교 등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연대
3.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에 대응한 연대
4. 복지국가와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연대
5. 세월호 진상규명 · 안전사회를 위한 연대
6.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대
7. 제주해군기지 저지, 군 감시를 위한 연대
8. 해방 70년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연대
9. 공안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는 연대
10.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2015년 일정표

	3월	4월	5월	6월	7월
시민참여 프로그램 / 회원행사 / 주요회의	제21차정기총회 지역회원만남의날 아카데미봄강좌	회원월례모임 정기운영위원회 정기집행위원회 제5회세계군축행 동의날캠페인 [시민토론행사] 와글와글.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회원월례모임 자원활동가 2차 모집	회원월례모임 회원모니터단 1차 설문조사 아카데미여름강좌	회원월례모임 회원여름캠프 2기 불온대장정 정기운영위원회 정기집행위원회 강정생명평화대행 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민참여 프로그램 / 회원행사 / 주요회의	회원월례모임 청소년 초청프로그램 지역회원만남의날 자원활동가 3차 모집	회원월례모임 아카데미가을강좌 창립기념식 16기 청년인턴프 로그램	회원월례모임 회원모니터단 2차 설문조사 정기운영위원회 정기집행위원회 평화군축박람회	회원월례모임 자원활동가 4차 모집	회원 송년회 공익제보자의밤/ 의인상 시상식

※ 2015년부터는 일정이 확정적인 시민참여프로그램과 회원행사, 주요회의 중심으로 일정표를 작성했습니다.

2014년 결산안 및 2015년 예산안

회계감사보고

2014년 결산안

2015년 예산안

살림살이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보고 : 채이배 감사 (회계사)
- 회계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제21기)

□ 총평

- 2014년(제21기)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전기(제20기) 대비 적자 전환하여 당기순손실 224백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원 증가와 20주년 행사로 수입액(매출액)이 230백만 원(11.62%) 증가하였으나,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수선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총 262백만 원의 비용이 증가하였고, 올해 현금지출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퇴직급여가 전기 대비 115백만 원 증가하여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업외수익은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으로 13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은 시민단체연대회의에 대한 지원금으로 1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손익계산서 상 퇴직급여는 152백만 원이나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55백만 원이며, 97백만 원은 대차대조표 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된 것 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41백만 원은 건물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현금성 지출항목을 고려할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은 2014년 85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전기 대비 자산은 126백만 원(2.68%) 감소하였고, 부채는 98백만 원(10.5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산 중 당좌자산이 84백만 원(10.30%)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 외 건물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자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부채 역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 등 정상적인 변화 외에 특이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 권고사항

- 현금성자산(현금, 보통예금, 정기에적금)이 2013년 말 680백만 원, 2014년 말 506백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금은 1년 만기로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연장 시 마다 계속 이자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시중이자율이 낮아지므로,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이자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중 상근자 교육기금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2014년 말 약 40백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중 통인카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초기이므로 매월 적자인 상황입니다.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매출 증대 등 적극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폐쇄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 및 사고위험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별도 관리·운용되는 기금계좌에 회비 및 후원금이 입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중들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일회성 캠페인 등에 사용되는 계좌는 캠페인 이후 폐쇄하기를 권고합니다.

회계감사 채이배



2014년 결산안

손익계산서

제21기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제20기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액	금액
I.매출액	2,210,869,004	1,980,685,752
회비수입	1,616,306,806	1,476,362,780
정기후원금수입	10,320,000	11,37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432,006,835	306,843,846
사업수입	144,955,364	186,109,126
카페사업수입	7,279,999	0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2,210,869,004	1,980,685,752
IV.판매비와관리비	2,407,615,713	1,930,591,065
급여	1,163,667,794	1,101,698,921
퇴직급여	152,136,226	37,206,285
복리후생비	112,011,340	124,073,674
여비교통비	10,739,904	5,811,130
통신비	26,995,590	24,537,460
수도광열비	3,157,270	3,476,370
전력비	20,289,200	25,869,550
세금과공과금	24,055,619	22,922,960
감가상각비 ¹	41,235,760	46,038,869
임차료	4,995,046	5,699,081
수선비	195,937,880	0
보험료	2,514,050	2,779,130
차량유지비	2,168,993	2,215,210
교육훈련비	4,142,110	5,513,880
도서인쇄비	6,332,780	4,814,130
회의비	26,136,330	35,788,710

1 감가상각비 당기 계상액은 건물 및 차량운반구의 당기 상각비입니다.

사무용품비	7,083,920	3,999,880
소모품비	64,539,120	26,623,190
지급수수료	97,761,587	76,697,939
건물관리비	13,437,800	13,494,800
잡비	741,060	1,385,200
사업비	377,256,389	317,014,176
발송비	8,462,661	6,343,520
부설기관회비등	37,958,000	36,587,000
카페통인재료비	3,859,284	0
V.영업이익	-196,746,709	50,094,687
VI.영업외수익	23,729,336	8,700,918
이자수익	9,774,407	8,022,404
잡이익	13,954,929	678,514
VII.영업외비용	50,611,181	40,840,160
이자비용	26,787,181	29,972,120
기부금	23,490,000	10,708,800
잡손실	334,000	159,240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223,628,554	17,955,445
IX.법인세등²	44,585	1,814,860
X.당기순이익	-223,673,139	16,140,585

2 당기 수익사업 부문 법인세 비용 계상액입니다.

재무상태표

제21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제21(당)기		제20(전)기	
	금액		금액	
자산				
I.유동자산	734,602,321		818,958,349	
(1)당좌자산	734,602,321		818,958,349	
현금	713,110		2,555,500	
보통예금	305,878,014		449,887,771	
정기예.적금	200,000,000		228,023,434	
미수수익	3,682,000		3,809,000	
미수금	1,656,755		0	
상근자교육기금	19,689,953		19,236,113	
연대기금	1,553,034		1,551,487	
도시락기금	28,569		672,437	
사회복지위원회 상근자교육기금	19,995,799		0	
의인가금	170,743,499		99,392,868	
공익소송기금	10,661,588		13,829,739	
II.비유동자산	3,830,770,582		3,872,006,342	
(1)투자자산	30,000,000		30,000,000	
장기대여금 ³	30,000,000		30,000,000	
(2)유형자산	3,800,770,582		3,842,006,342	
토지	2,634,664,824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256,569,960	1,158,988,476	-221,181,000	1,194,377,436
차량운반구	26,614,810		26,614,810	
감가상각누계액	-19,497,528	7,117,282	-13,650,728	12,964,082
자산총계	4,565,372,903		4,690,964,691	

부채		
I.유동부채	15,867,402	14,787,820
예수금	14,459,534	12,930,734
부가세예수금	1,403,818	1,057,866
미지급세금	4,050	799,220
II.비유동부채	1,013,203,960	916,202,191
장기차입금	650,000,000	6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353,203,960	256,202,191
장기임대보증금	10,000,000	10,000,000
부채총계	1,029,071,362	930,990,011
자본		
자본총계	3,536,301,541	3,759,974,680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223,673,139		
전기: 16,140,585		
부채 및 자본총계	4,565,372,903	4,690,964,691

3 장기대여금은 참여사회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입니다.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는 독립법인으로 제정과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안

예산손익계산서

제22기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22(차)기	
	금액	
I.매출액		2,340,000,000
회비수입	1,800,000,000	
정기후원금수입	10,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320,000,000	
사업수입	150,000,000	
카페사업수입	60,000,000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2,340,000,000
IV.판매비와관리비		2,314,898,854
급여	1,285,800,000	
퇴직급여	133,000,000	
복리후생비	141,500,000	
여비교통비	10,000,000	
통신비	27,000,000	
수도광열비	5,000,000	
전력비	25,000,000	
세금과공과금	25,000,000	
감가상각비	38,598,854	
임차료	5,000,000	
수선비	0	
보험료	3,000,000	
차량유지비	3,000,000	
교육훈련비	5,000,000	
도서인쇄비	5,000,000	
회의비	30,000,000	

사무용품비	10,000,000	
소모품비	30,000,000	
지급수수료	100,000,000	
건물관리비	15,000,000	
잡비	1,000,000	
사업비	350,000,000	
발송비	8,000,000	
부설기관회비등	38,000,000	
카페통인재료비	21,000,000	
V.영업이익		25,101,146
VI.영업외수익		25,000,000
이자수익	10,000,000	
잡이익	15,000,000	
VII.영업외비용		49,500,000
이자비용	27,000,000	
기부금	22,000,000	
잡손실	500,000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601,146
IX.법인세등		40,000
X.당기순이익		561,146

예산재무상태표

제22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제22(차)기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905,413,178
(1) 당좌자산		905,413,178
현금		1,000,000
보통예금		339,409,218
정기예.적금		353,203,960
미수수익		4,000,000
미수금		1,500,000
상근자교육기금		15,000,000
연대기금		1,000,000
도시락기금		300,000
사회복지위원회		20,000,000
상근자교육기금		160,000,000
의인가금		10,000,000
공익소송기금		10,000,000
II. 비유동자산		3,792,171,728
(1) 투자자산		30,000,000
장기대여금		30,000,000
(2) 유형자산		3,762,171,728
토지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291,958,920	1,123,599,516
차량운반구	26,614,810	
감가상각누계액	-22,707,422	3,907,388
자산총계		4,697,584,906

부채		
I. 유동부채		16,500,000
예수금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미지급세금		0
II. 비유동부채		1,144,222,219
장기차입금		6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484,222,219
장기임대보증금		10,000,000
부채총계		1,160,722,219
자본		
자본총계		3,536,862,687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561,146		
전기: -223,673,139		
부채 및 자본총계		4,697,584,906

정관 개정

정관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기구표

조직과 운영원리

정관개정안

□ 개정 이유

-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사업항목을 추가함

□ 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정관 제4조[사업] 본문에 ②항을 신설하여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추가함.

부 칙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5년 3월 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제4조 [사업] ①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②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정관 (개정 후)

참여연대 정관

1994.9.10	(제정)
1995.3.23	(1차 개정)
1996.3.13	(2차 개정)
1997.9.10	(3차 개정)
1998.9.27	(4차 개정)
1999.2.6	(5차 개정)
2000.2.19	(6차 개정)
2001.2.10	(7차 개정)
2002.2.23	(8차 개정)
2003.3.15	(9차 개정)
2005.3.12	(10차 개정)
2006.2.25	(11차 개정)
2006.9.13	(12차 개정)
2007.3.3	(13차 개정)
2011.3.5	(14차 개정)
2012.2.25	(15차 개정)
2013.2.23	(16차 개정)
2014.3.8	(17차 개정)
2015.3.7.	(18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 ②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

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의 대표를 인준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의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①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고문의 임기 적용례) 2013년 2월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문단은 2013년 총회에서 새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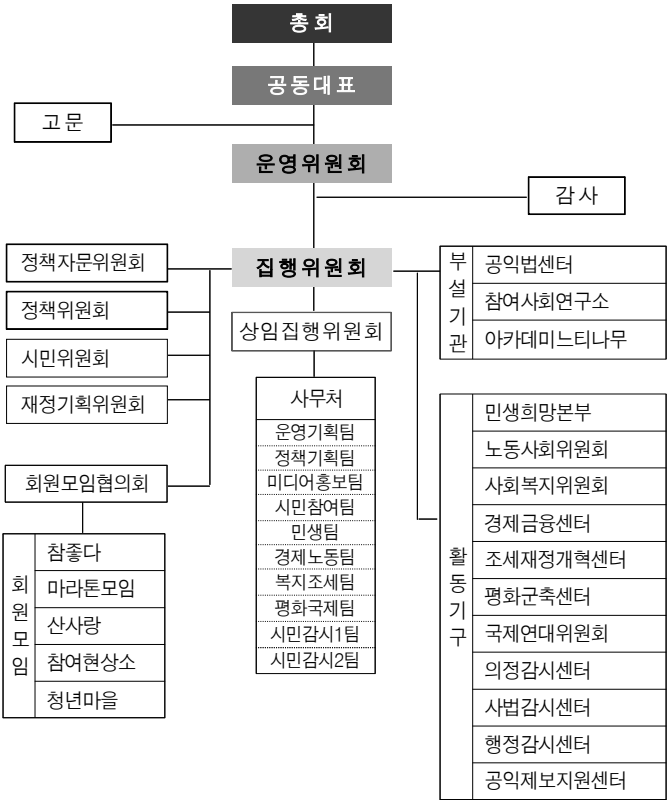
이 정관은 2015년 3월 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조직 기구표

2015. 3. 7. 현재

임원 선임

임원선임안
2015년 임원 명단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1. 공동대표 선출의 건 (임기 2년)

[신임] 법 인 공동대표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신임] 정강자 공동대표 (인하대 초빙교수)

2. 고문 추대의 건 (임기 2년)

[연임] 김중배 고문 (언론인, 2013~2014 고문)

[연임] 김창국 고문 (변호사, 2013~2014 고문)

[연임] 명 진 고문 ((재)진실의힘 고문, 2013~2014 고문)

[연임] 백낙청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2013~2014 고문)

[연임] 안경환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2013~2014 고문)

[연임] 양길승 고문 (녹색병원 원장, 2013~2014 고문)

[연임] 이삼열 고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2013~2014 고문)

[연임] 이선종 고문 (원불교 은덕문화원 원장, 2013~2014 고문)

[연임] 임현영 고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2013~2014 고문)

[연임] 장임원 고문 (민교협 원로교수모임 대표, 2013~2014 고문)

[연임] 청 화 고문 (청암사 주지, 2013~2014 고문)

[연임] 최영도 고문 (변호사, 2013~2014 고문)

[연임] 홍성우 고문 (변호사, 2013~2014 고문)

[신임] 임종대 고문 (전 한신대 교수, 전 공동대표)

[신임] 박호성 고문 (서강대 명예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 2013년 고문의 임기 규정을 정관에 신설함에 따라 고문단은 2013년 새로 추대된 것으로 봄

3.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임기 2년)

[연임] 진영중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2013~2014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임] 하태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전 사법감시센터 소장)

4.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임기 2년)

[신임] 이현욱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현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신임] 주은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시민교육전문가, 현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5.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의 건 (임기 1년)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42명)

[연임] 구봄(학생) 김상균(방송인) 김세경(퇴임 교사) 김영규(교사) 김영수(자영업) 김용기(자영업) 김종백(직장인) 김진(직장인) 김태엽(자영업) 맹행일(자원활동가) 박상철(직장인) 박열음(자영업) 박종희(사업가) 박지영(피아노 강사) 박희경(자원활동가) 석락희(직장인) 안기석(동시통역사) 오종철(직장인) 윤형준(직장인) 이영구(장기 회원)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한나(직장인) 이혜숙(수필가) 이현정(학생) 임상웅(자영업) 장원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조규훈(직장인) 조룡상(직장인) 채명묵(자원활동가)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한용환(직장인) 허필두(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황미정(컨텐츠 기획자) (이상 38명)

[신임] 김명수(홍익대 연구교수) 김성제(직장인) 이해정(중앙대 교수) 조정숙(직장인) (이상 4명)

○ 추첨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40명)

[연임] 류종길(직장인) 박성준(직장인) 심난숙(직장인) 이강원(직장인) 이민경(직장인)
이봉섭(디자이너) 임진희(직장인) 한형갑(아파트관리소장) 홍부호(직장인) 황세욱(직
장인) (이상 10명)

[신임] 강찬호(지역활동가) 고재원(역사교사) 곽현지(일반인) 권민우(사업가) 권영숙
(교사) 김동한(회사원) 김율(직장인) 김진영(직장인) 김현우(직장인) 김효정(직장인)
모정환(방사선사) 문명희(의료계 종사) 박여라(직장인) 소재학(직장인) 송갑석(광주학
교 교장) 신용태(사회복지사) 신종범(두 아이 아빠) 신흥기(일반인) 유영석(회사원)
유혜선(평화활동가) 이선영(직장인) 이선자(자원활동가) 이재천(자영업) 이정화(직장
인) 이주영(약사) 전종한(수의사) 정문옥(직장인) 정성훈(치과의사) 조은진(직장인) 하
아련(사회복지사) (이상 30명)

6.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의 권

법인(공동대표) 정강자(공동대표) 진영중(운영위원장) 하태훈(운영위원장) 이현옥(운
영위 부위원장) 주은경(운영위 부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김남근(집행위원장) 김
성진(집행위 부위원장) 김경울(집행위 부위원장) 박주민(집행위 부위원장) 이태호(사
무처장) 박근용(협동사무처장) 안진걸(협동사무처장) 피학용(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최상천(회원모임 ‘참여현상소’ 대표) 이상준(회원모임 ‘참종다’ 대표)

2015 임원 명단

공동대표

김균(고려대 교수) 법인(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정강자(인하대 초빙교수) 정현백(성
균관대 교수)

감사

채이배(회계사)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재)진실의힘 고문) 박호성(서강대 명예교수) 백
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서울대 명예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이삼열(유네
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선중(원불교 은덕문화원 원장) 임종대(전 한신대
교수)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민교협 원로교수모임 대표) 청화(청암사
주지)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운영위원회

- 위원장 : 진영중(성공회대 교수) 하태훈(고려대 교수)
- 부위원장 :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이현옥(변호사) 주은경(시민교육전문가)
- 당연직 운영위원

김균(공동대표) 법인(공동대표) 정강자(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진영중(운영위원
장) 하태훈(운영위원장)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이현옥(운영위 부위원장) 주은경(운
영위 부위원장) 김남근(집행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김경울(집행위 부위원장) 김
성진(집행위 부위원장) 박주민(집행위 부위원장)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사무
처장) 박근용(협동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안진걸(협동사무처장) 피학용(회원
모임 ‘산사랑’ 대표) 맹봉학(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 최상천(회원모임 ‘참여현상
소’ 대표) 이상준(회원모임 ‘참종다’ 대표) 박진호(회원모임 ‘청년마을’ 대표)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함

○ 선출직 운영위원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구봄(학생) 김명수(홍익대 연구교수) 김상균(방송인) 김성제(직장인) 김세경(퇴임 교사) 김영규(교사) 김영수(자영업) 김용기(자영업) 김종백(직장인) 김진(직장인) 김태엽(자영업) 맹행일(자원활동가) 박상철(직장인) 박열음(자영업) 박종희(사업가) 박지영(피아노 강사) 박희경(자원활동가) 석락희(직장인) 안기석(동시통역사) 오종철(직장인) 윤형준(직장인) 이영구(장기 회원)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한나(직장인) 이해숙(수필가) 이현정(학생) 이해정(중앙대 교수) 임상웅(자영업)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조규훈(직장인) 조통상(직장인) 조정숙(직장인) 채명묵(자원활동가)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한용환(직장인) 허필두(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황미정(컨텐츠 기획자)

- 추천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강찬호(지역활동가) 고재원(역사교사) 곽현지(일반인) 권민우(사업가) 권영숙(교사) 김동한(회사원) 김율(직장인) 김진영(직장인) 김현우(직장인) 김효정(직장인) 류종길(직장인) 모정환(방사선사) 문명희(의료계 종사) 박성준(직장인) 박여래(직장인) 소재학(직장인) 송갑석(광주학교 교장) 신용태(사회복지사) 신종범(두 아이 아빠) 신흥기(일반인) 심남숙(직장인) 유영석(회사원) 유혜선(평화활동가) 이강원(직장인) 이민경(직장인) 이봉섭(디자이너) 이선영(직장인) 이선자(자원활동가) 이재천(자영업) 이정화(직장인) 이주영(약사) 임진희(직장인) 전종한(수의사) 정문옥(직장인) 정성훈(치과의사) 조은진(직장인) 하아련(사회복지사) 한형갑(아파트관리소장) 홍부호(직장인) 황세욱(직장인)

집행위원회

- 위원장 : 김남근(변호사) 김진욱(변호사)
- 부위원장 : 김경율(회계사) 김성진(변호사,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박주민(변호사)

○ 선출직 집행위원

서복경(서강대 연구원) 양규웅(변호사) 윤홍식(인하대 교수) 이승희(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조형수(변호사) 조수진(변호사) 홍성태(상지대 교수)

○ 당연직 집행위원

김균(공동대표) 법인(공동대표) 정강자(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진영중(운영위원장) 하태훈(운영위원장)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이현욱(운영위 부위원장,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주은경(운영위 부위원장,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박근용(협동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안진걸(협동사무처장)

강병구(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서보학(사법감시센터 소장) 신광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이찬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홍윤기(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박순성(동국대 교수)

사무처

- 사무처장 : 이태호
- 협동사무처장 : 박근용 박정은 안진걸

회원 설문결과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참여연대 노래

부록

회원 설문조사 결과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2014년을 평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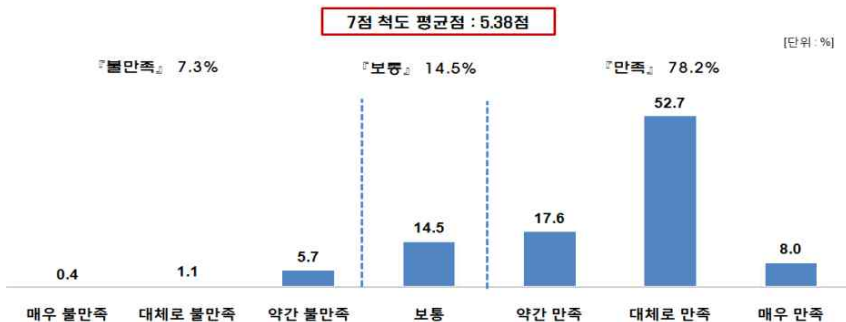
참여연대는 2015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약 10일간)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활동 평가, 2015년 사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모니터단 480명 중 262명(응답률 54.6%)이 참여했습니다.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회원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명을 추첨하여 모니터단을 구성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이며, 연3회 이메일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현재는 2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5년 3월까지입니다.

■ 2014년 활동 평가

1 2014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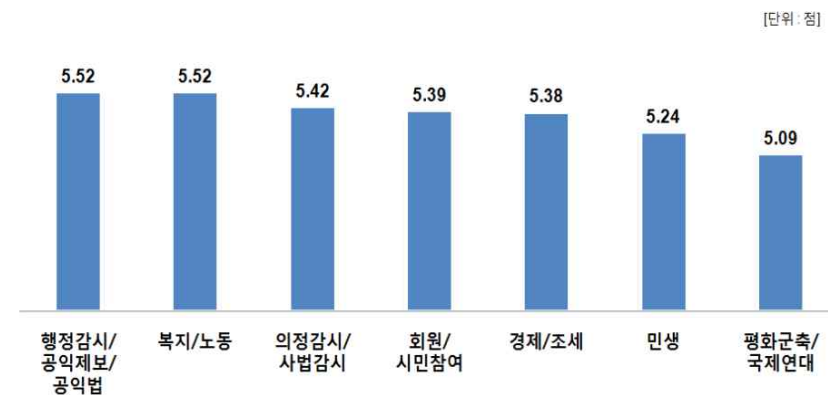
【2014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의 2014년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 응답이 78.2%(매우 만족 8.0% + 대체로 만족 52.7% + 약간 만족 17.6%)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보통』 응답은 14.5%(보통 14.5%)였으며, 『불만족』 응답은 7.3%(매우 불만족 0.4% + 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5.7%)였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38점으로 '대체로 만족' 보다는 낮고, '약간 만족'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입니다. 아직 참여연대가 회원들이 보시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정책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에 한계가 있어서(47.4%)로 가장 높았습니다.

2 2014년 참여연대 분야별 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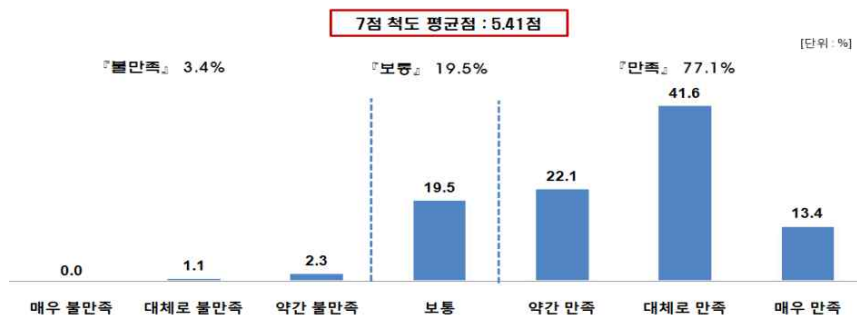
【2014년 참여연대 분야별 활동 평가】



2014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7점 척도 평균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행정감시/공익제보/공익법(5.52점), 복지/노동(5.52점) > 의정감시/사법감시(5.42점) > 회원/시민참여(5.39점) > 경제/조세(5.38점) > 민생(5.24점) > 평화군축/국제연대(5.09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분야와 평화군축/국제연대 분야에서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3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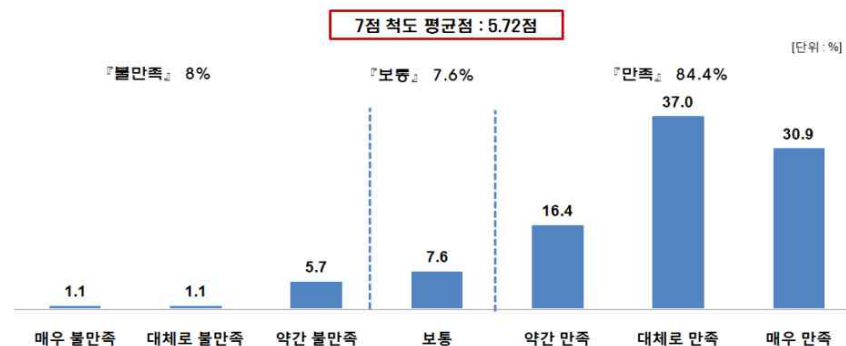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활동 평가】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활동에 대해, 『만족』응답이 77.1%(매우 만족 13.4% + 대체로 만족 41.6% + 약간 만족 22.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통』응답은 19.5%(보통 19.5%)였으며, 『불만족』응답은 3.4%(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2.3%)였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41점으로 '대체로 만족'보다는 낮고, '약간 만족'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5.38점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 세월호 대응 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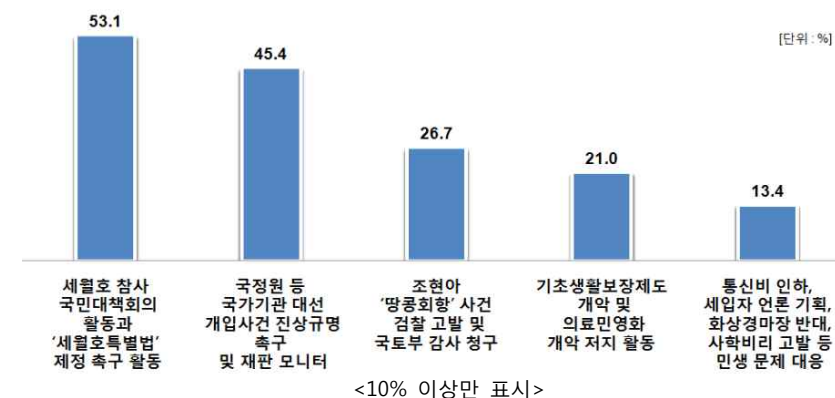
【세월호 대응 활동 평가】



회원모니터단은 2014년 세월호 대응 활동에 대해 『만족』응답이 84.4%(매우 만족 30.9% + 대체로 만족 37.0% + 약간 만족 16.4%)였습니다. 한편, 『보통』응답은 7.6%(보통 7.6%)였으며, 『불만족』응답은 8.0%(매우 불만족 1.1% + 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5.7%)였고, 7점 척도 평균점은 5.72점으로 '약간 만족'보다 높고 '대체로 만족'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5 2014년 참여연대 대표적 활동 중 잘한 활동

【2014년 참여연대 대표적 활동 중 잘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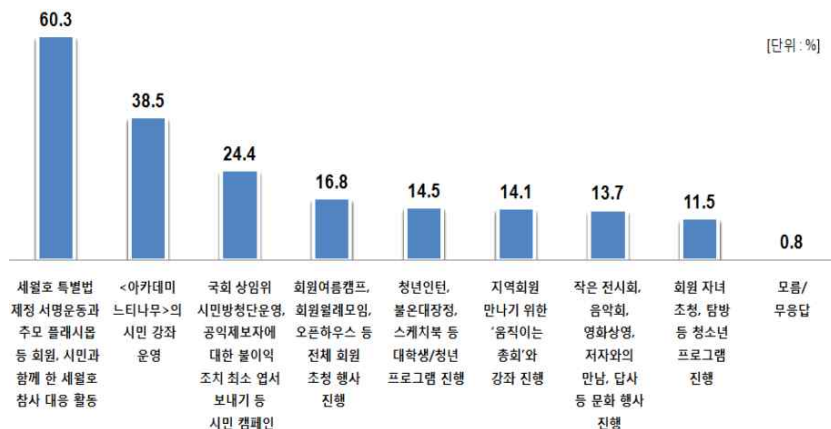


참여연대가 2014년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 응답(2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재판 모니터'가 45.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검찰 고발 및 국토부 감사 청구' (26.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및 의료민영화 개악 저지 활동' (21.0%), '통신비 인하, 세입자 언론 기획, 화상경매장 반대, 사학비리 고발 등 민생 문제 대응'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

2014년 참여연대 대표적 회원/시민사업 중 잘한 사업

【2014년 참여연대 대표적 회원/시민사업 중 잘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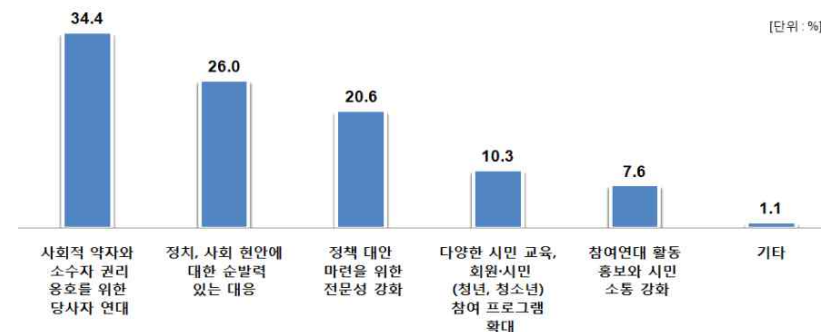
2014년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회원, 시민 사업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과 주모 플래시몹 등 회원, 시민과 함께 한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을 꼽은 비율이 6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카데미>의 시민 강좌 운영'(38.5%),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운영,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최소 염서 보내기 등 시민 캠페인'(24.4%), '회원여름캠프, 회원월례모임, 오픈하우스 등 전체 회원 초청 행사 진행'(16.8%), '청년인턴, 불온대장정, 스케치북 등 대학생/청년 프로그램 진행'(14.5%), '지역회원 만나기 위한 '움직이는 총회'와 강좌 진행'(14.1%), '작은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저자와의 만남, 답사 등 문화 행사 진행'(13.7%), '회원 자녀 초청, 탐방 등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11.5%)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 2015년 사업 방향

7

2015년 참여연대가 집중/강화해야 할 활동 방식

【2015년 참여연대가 집중/강화해야 할 활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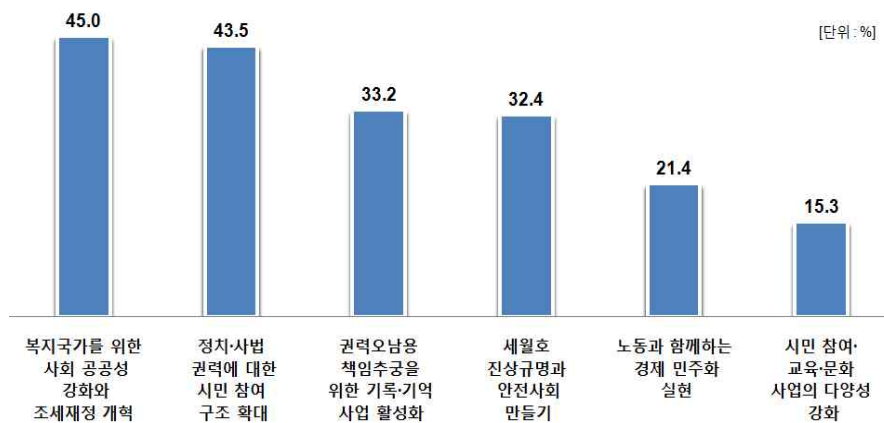
참여연대가 2015년에 가장 집중하고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당사자 연대'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26.0%),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성 강화'(20.6%), '다양한 시민 교육, 회원·시민(청년,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확대'(10.3%), '참여연대 활동 홍보와 시민 소통 강화'(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

2015년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활동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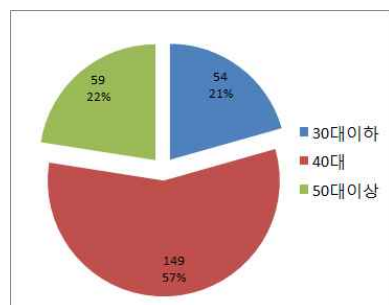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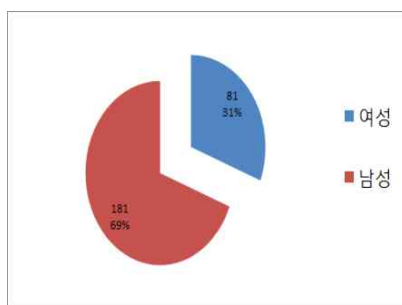
2015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할 활동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45.0%)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43.5%)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권력오남용 책임추궁을 위한 기록·기억 사업 활성화'(33.2%),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32.4%),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 민주화 실현'(21.4%), '시민 참여·교육·문화사업의 다양성 강화'(15.3%)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활동 방향】



■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보고는 응답을 요약한 것으로, 이후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참여사회>를 통해 자세하게 보고 할 예정입니다.

<응답자 기본정보(전체 응답자 262명)>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권력남용과 기회독점을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수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데 전념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시민들과 기꺼이 연대하고 국경을 넘어 동료애를 발휘해왔습니다. 회원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에 기초한 자립재정은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도 시민들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벽,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념적, 정치적 편 가르기, 다양성을 부정하는 적대와 차별,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보 불균형과 언론매체의 독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자유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

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라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해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의 덫에 갇혔고,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거세지고 있는 군사주의와 새로운 패권경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인류의 오랜 노력들은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고장 난 사회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도처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탐욕과 특권을 정당화하고 대다수를 불행으로 내모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과 변화를 거듭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한결같은 사명이며 지난 20년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존립근거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영역까지 시민의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정권과 자치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표현과 행동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편 가르기를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겠습니다. 이기심과 경쟁 대신 시민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가 정착되도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의 동반자,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사회변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 앞장서기보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성숙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반자이자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참여연대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겠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운동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턱 없는 놀이터,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학습과 치유와 훈련의 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원들이 보다 주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개방하겠습니다.

자립제정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시민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믿음직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연대 20년, 청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따뜻하고 굳세게,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201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 과제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활동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19차 정기총회에서 성찰과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균, 임종대, 정현백, 이석태)를 구성하여 2014년까지 1년 6개월간 운영해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 산하 평가비전위원회(위원장 : 이석태)는 10차례의 회의와 2차례 비전워크숍,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회원 공청회를 주관하여 참여연대 역할과 사명,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등을 마련했습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과 사명의 재확인

○ 시민의 파수꾼

- 권력과 부의 독점과 오남용에 대한 밀착 감시와 견제
- 초정파적이고 독립적인 일관된 권력감시

○ 시민의 대변자

- 시민권의 옹호와 정책적 대안제시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바탕을 둔 사회발전 전망과 대안 제시

○ 시민의 동반자

- 고통과 갈등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감의 연대
- 국경을 초월한 시민의 참여와 연대

○ 시민 참여와 연대의 징검다리

- 사회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의 징검다리
- 시민들의 놀이터, 시민 주도 학습/치유/훈련의 전당

2. 8대 중장기 의제

○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지난 20년 동안 확인된 참여연대의 존립근거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유착을 감시하고 국가권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권력감시 운동의 기본과제입니다.

<주요과제>

- 전관예우, 부정청탁, 회전문 인사 등 권력유착 감시와 공직윤리 개선
- 입법 사법 행정 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확보, 국가기구의 투명성 확보
- 사법권력, 관료권력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검찰과 경찰,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공정거래위 등 사정기구 감시와 개혁
- 인사제도와 행정평가제도의 민주적 개선
- 공익제보의 보호

○ 공공성의 강화

- 지난 20년간 권력의 특성이 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은 과 공공정책, 공공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요과제>

- 공공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시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
-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와 복지 재원 확보
- 공공 서비스와 공공시설 운영의 사영화(민영화), 영리화, 외주화 제한
- 공공기관 개혁, 규제 개혁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참여

○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

- 극심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종합대책
- 모두를 위한 복지 제도 확대
- 재벌·대기업 불공정 거래와 갑을 관계 개혁
- 금융 공공성 확보와 금융 소비자 보호
- 좋은 일자리 확충과 노동권 보장·강화
- 주거불안 해소와 가계부담 완화
-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철폐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간성과 생태를 파괴하고 특권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다수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요과제>

- 과로체제의 해소와 노동시간의 단축
- 산업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규제의 강화, 안전평가·환경영향 평가 실질화
- 군사비의 축소와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핵발전 단계적 폐지,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

○ 시민참여·시민자구 수단의 확대

-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시민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로서, 주민으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참여수단과 자구수단이 확대되어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유권자 참정권 강화와 선거/정당 제도 등 정치개혁
- 지방 분권과 자치의 확대
- 정보공개, 예결산(재정) 참여,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 시민/주민 참여 제도 확대
- 집회와 결사의 자유, 행정 강제에 대한 시민자구 수단과 불복종의 자유 확대
- 소비자 권리, 납세자 권리, 유권자 권리 등 사문화된 시민권리 실질화
-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책임 추궁 수단 강화

○ 외교안보권력, 정보권력의 민주화

- 외교안보통상 분야는 해당 관료와 군, 정보기구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아 통일을 앞두고 이 분야의 권력남용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의 독점, 통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역처럼 여겨졌던 외교안보통상 권력과 정보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안보·외교·통상 등 행정독점분야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 정보권력의 여론조작과 언론통제에 대한 견제
- 국가권력의 감시와 검열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 옹호
- 국정원 개혁과 군 개혁

○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 한반도 정전체제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과 동아시아에서 자원, 영토,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주의와 패권대결정책으로는 평화의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추구
- 한반도 동북아에서 핵위협의 제거와 군비의 축소
- 한반도 화해협력(갈등해소)과 인권개선의 결합
- 동아시아 협력안보체제 형성
- 국가중심의 영토·역사 분쟁을 완화할 시민교류·협력과 이해의 증진
- 평화권(평화적 생존권)의 존중

○ 진영논리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

- 일방적인 평가르기는 공론의 형성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대립의 평행선이 지속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시민사회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승자 아니면 패자로 나뉘는 이기심과 경쟁의 질서 대신 시민사회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비전과 대안, 참여민주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시민사회 내의 성찰과 연대 의식 제고
- 시민사회 세대, 지역, 계층간 이해, 소통, 협력의 확대
-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생활밀착형 풀뿌리 운동과의 협력강화
- 복지재원,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난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합의 촉진
- 연대와 협동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 비전과 대안, 참여민주 절차의 모색

3. 8가지 혁신과제

○ 현장성

-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과 유리된 시민운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활성화되고 시민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조건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을 도와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과 해법이 논의되는 현장에 대한 밀착 감시와 개입을 강화하는 것 역시 권력감시 운동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개선과제>

- 현장(분쟁현장, 권력작동 현장) 밀착형 활동 강화
- 당사자 연대의 강화
- 조직가·기획자로서의 활동가 능력 향상, 활동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사무처의 현장 지원·연대 체계 개선

○ 전문성

- 참여연대는 전문성을 갖춘 권력감시단체로 자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쟁점이 구체화되고 전문가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날이 갈수록 지식사회가 자본과 권력에 춤추며 포획되고 있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할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는 전문가들의 자원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참여연대의 전문성과 활동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할 젊고 진취적인 실천적 전문가층을 적극 발굴하고, 내부의 정책 협력 체계와 활동목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억압받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개선하고 지식사회의 독립적인 비판기능과 사회참여를 되살리기 위한 사회운동에도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전문가 임원 확충
- 중장기 활동목표 관리체계, 부서간 정책 협력체계의 개선
-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실천적 전문가·지식인·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 전문가 운동 활성화 방안, 전문가 사회참여 촉진 방안 모색

○ 소통 능력

-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모니터 보고서나 정책 자료들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개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생산됩니다. 주로 정책입안자들이나 감시대상 권력을 상대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향한 정보와 메시지를 개발하고 소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운 참여연대 활동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성과 및 보완과제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소통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활동 의제와 행동수단의 시민친화력 개선
- 시민대상 시청각 콘텐츠 생산의 확대
- 정보기술 발전과 매체의 발전을 반영한 온라인 소통의 강화
- 참여연대 대안미디어 형성

○ 시민 리더십

- 시민을 대항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 참여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시민리더십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교육활동은 종합적인 시민운동단체로서 참여연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활동가 교육(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활동기구와 구분되는 시민참여형 활동기구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사회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청년 참여연대를 우선 발족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참여연대 아카데미 강화,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확대
- 청년/청소년,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여성을 위한 맞춤형 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 활동가, 시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Training of Trainers) 코스 개발
- 직업적 전문가 중심의 활동기구와 구분되는 시민참여형 활동기구 단계적 확대
- 청년 참여연대 우선 발족

○ 변화의 공간

- 참여와 연대는 주로 공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연대 건물은 활동가들의 공간이자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참여연대가 만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건물을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의 공적기능 확대하여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개선과제>

- 사무 공간의 축소와 시민참여 공간 확대
- 지하, 1층, 2층을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선
- 공간 기획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 글로벌 참여연대

- 세계화는 국가단위로 분리된 공동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정부간 기구는 국경을 넘어서 형성되는데 반해 시민의 삶의 터전이나 권력 감시 운동은 좀처럼 국경을 넘어서지 못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인권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범위를 국경을 넘어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인권·평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범위의 시민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시민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시민사회간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 국제 권력감시 운동역량 강화
- 상근자와 임원, 회원의 국제 이해 교류의 증진
- 부서별 국제연대 가능 상근인력·자원활동 인력 육성
- 시민참여형 국제교류(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프로그램

○ 나눔과 협력의 재정

-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부심은 회원과 시민의 소액다수 후원으로 재정자립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립재정을 넘어 나눔과 협력의 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조기에 실현하겠습니다. 살림은 알뜰하게, 연대와 협력의 비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조기실현
- 시민운동 미래세대 형성, 현장지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재원 확보
- 연대와 협력,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형 기금의 확대

○ 참여연대 공동체

-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산은 지난 20년간 사회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참여연대를 지탱해온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입니다.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는 참여연대 구성원들 간의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고 각급 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집행참여구조를 더욱 견고하고 알차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현직 임원과 전현직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세대를 이어가도 경륜과 정체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역량 강화와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개선과제>

- 회원 자치의 확대와 회원 공동체 강화
- 운영위원회, 시민모니터단 등 회원 의사결정/소통구조의 강화
- 전현직 임원/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 활동가 역량 강화와 복지 확대, 활동가의 교육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참여연대가

박원순 작사
지근식 작곡

C Em Am Dm7 G

여 기 사 람들 이 모 였 - 다 - 꿈 꾸 며 사 는 사 람들 이 모 였 - 다 - 아
정 의
희 망

Em Am Dm7 G

답 고 사 람답 게 사 는 세 상 - 함께 꿈 꾸 는 사 람들 이 모 였 - 다 - 혼 자
롭 고 삼 고 개 곳 해 진 세 상 - 시 민
속 에 서 로 의 지 하 는 세 상 - 물 방

Am Em F D G

꾸 는 꿈 은 단 지 꿈 이지 만 - 다 함 께 꾸 는 꿈 은 현 실 이 된 - 다 - 참 여
들 의 목 소 리 로 참 여 연 대 - 시 민 의 권 익 은 우리 가 지 키 - 자 -
울 이 모 여 시 냇 물 이 되 어 - 흐 르 고 마 침 내 큰 강 물 이 룬 - 다 -

C Am F G

하 자 연 - 대 하 - 자 - 그 꿈 우 리 함 께 이 루 기 위 - 해 - 참 여

C Am F G

하 자 연 - 대 하 - 자 - 아 름 답 고 밝 은 세 상 이 루 - 기 - 위

C Fmaj7 C Fmaj7

- 해 -



<2015년, 더욱 힘차게 활동 하였습니다_참여연대 상근자 일동>

참여연대 자료집

참여연대 21차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2015. 03. 07

발행처 참여연대

담당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